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20일(수)

장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

주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후원 |  Hanns Seidel Stiftung  여성신문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 시 | 2025년 8월 19일(화) ~ 8월 20일(수)

장 소 | 컨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

주 최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후 원 |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여성신문사

언 어 | 시 실시간 통역 자막 서비스 제공

참가자 | 국내외 여성·평화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관계자, 학생, 일반 시민 등

P / R / O / G / R / A / M

1일차 | 8월 19일(화)

14:00~14:30	등록 및 인사	
14:30~15:00	개회식. 개회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환영사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축 사 진선미 제22대 국회의원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5:00~17:00 (2h)	< 세션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 좌장 박의경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UNSCR 1325의 틀로 본 북한 여성 인권 현인에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	
	발표2. 한반도에서의 UNSCR 1325 이행 현황 분석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토 론. 竹信 三恵子(Takenobu Mieko)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and No Military Expansion 부대표, Shen Hsiu-Hua Awakening Foundation 고문, 김엘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2일차 | 8월 20일(수)

10:00~12:00 (2h)	< 세션 2.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		좌장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메시지 연구 염승우 유타대학교 박사과정		
	발표2.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고찰 이진송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발표3. 북한 시민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 김경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국제의료영역 객원교수		
토 론. 서정호 가천대학교 교수, 이시효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40 (1h40)	< 세션 3.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		좌장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발표1. 일본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田中 優子(Tanaka Yuko)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and No Military Expansion 대표		
	발표2. 대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Peng Yenwen 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s 상임이사		
	토 론. 권연이 도쿄대학교 방문연구원, 이경아 호서대학교 연구교수, 장혜영 제21대 국회의원		
14:40~15:00	휴 식		
15:00~16:40 (1h40)	< 세션 4. 아시아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좌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축 사. 권향엽 제22대 국회의원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한베여성포럼 공동대표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발 표. 'Asia Women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구축을 위한 제안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토 론.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박지현 전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본부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민하·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 현인에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 김연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Shen Hsiu-Hua Awakening Foundation 고문 · Peng Yenwen 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s 상임이사, 田中 優子(Tanaka Yuko) · 竹信 三恵子(Takenobu Mieko)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and No Military Expansion 대표·부대표, Narita Miyu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lida Suzuha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6:40~17:00	폐회 / 인사		

C / O / N / T / E / N / T / S

개회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9
환영사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12
축사	진선미 제22대 국회의원	14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6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8

< 세션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

발표1.	UNSCR 1325의 틀로 본 북한 여성 인권	23
	현인에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	
발표2.	한반도에서의 UNSCR 1325 이행 현황 분석	41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토론1.	김엘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61
토론2.	선시우화 부녀신지기금회(Awakening Foundation) 고문 겸 전임 의장	69
토론3.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75
토론4.	다케노부 미에코 저널리스트 겸 와코대학 명예교수	81

< 세션 2.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

발표1.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메시지 연구	89
	염승우 유타대학교 박사과정	
발표2.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고찰	123
	이진송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발표3.	북한 시민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	165
	김경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국제의료영역 객원교수	
토론1.	서정호 가천대학교 교수	195
토론2.	이시효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207
토론3.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13

< 세션 3.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

발표1.	일본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223
	다나카 유코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대표	
발표2.	대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237
	평연원 타이완 여성단체 전국연합회(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s) 상임이사	
토론1.	권연이 도쿄대학교 방문연구원	251
토론2.	이경아 호서대학교 연구교수	259
토론3.	장혜영 제21대 국회의원	265

< 세션 4. 아시아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축사	권향엽 제22대 국회의원	275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한베여성포럼 공동대표	277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279
발표.	'Asia Women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구축을 위한 제안	281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개회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존경하는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이례적인 폭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후 여건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올해는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채택 30주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UNSCR 1325)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사회 구조 및 제도 개혁의 핵심과제로 부각시켰고, 결의안 1325호는 갈등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국제 규범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 역시 이 국제 규범들이 제시한 비전과 실천 과제를 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또한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오랜 세월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는 단순한 국제정치의 담론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미래,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 충돌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국제질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어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평등과 여성주의적 평화 담론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를 '여성·평화·안보'로 정한 이유입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2020년 시작 이후 네 번째이지만, 그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공간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국제회의가 주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간의 회의에서는 주로 북한의 사회 변화와 여성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경제위기가 북한의 사회·경제구조에 가져온 변화와, 그 변화가 북한 여성의 삶과 지위에 미친 영향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페미니즘과 젠더 관점의 연구가 갖는 중요성과 이러한 연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4차 국제회의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 문제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여성·평화·안보(WPS)'의 틀 속에서 새롭게 조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1325호는 북한 여성들을 단순한 인권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안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이를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의 평화·안보 구축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국·일본·대만의 여성 전문가와 지도자, 그리고 북한 여성을 대변하는 탈북 여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북경 행동강령 및 결의안 1325호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전과 과제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결의안 1325호의 이행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의 이행 상황 점검은 제도 공백을 메우는 선구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안보,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사회와 국제협력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들이 수행한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그 함의 또한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순서에서는 일본·대만·한국·북한(탈북)의 여성 지도자,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청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 여성의 동수·평화 이니셔티브(Asia Women’s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AWIPP)의 설립을 논의합니다. 이는 국경과 경계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공동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설계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회의는 단순한 토론의 장을 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지향하는 비전을 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전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지혜가 모여, 국경을 초월한 실질적 연대와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국내외 모든 발표자와 사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해주신 진선미 국회의원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 여성의 동수·평화 이니셔티브(Asia Women’s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AWIPP)의 설립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해주신 권향엽 국회의원님,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이자 한·베여성포럼 공동대표님,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회의를 공동 후원해 주신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여성신문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

환영사



손 봉 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국내외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까지 직접 와주신 일본과 대만의 참가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국경을 넘어선 여성 연대의 실현 그 자체이며, 이 회의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성의 평화 구축 참여와 권리 보호를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여성의 목소리와 역할이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의제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국경과 차이를 넘어 연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가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성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우리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는 각국의 WPS 이행 경험을 나누고, 북한 여성의 인권을 조명하며, 동아시아 여성 간 국제 협력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이 논의들이 단지 회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회의를 공동 후원해 주신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여성신문, 그리고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국내외 모든 발표자 및 사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함께,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동아시아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성의 힘으로 미래를 바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손봉숙

축사



진 선 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와 인권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희망과 용기를 느낍니다.

긴장이 일상인 한반도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평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가장 오래 지켜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에는 늘 여성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25호가 채택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결의안은 분쟁 속 여성의 보호와 함께, 평화 구축의 모든 과정에 여성이 '참여자'로서 자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긴장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고, 여성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참여'를 넘어, '여성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화가 제도와 군사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 뿌리 깊이 자리한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의 권리만 억누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협력과 공존이라는 평화의 구조 자체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회의와 '아시아여성네트워크(AWIPP)' 구축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

고 뜻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민주주의, 여성의 시선과 경험이 반영되는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평화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의제임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동아시아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손을 맞잡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이 평화를 앞당기고, 인권을 확장하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의 따스한 실천이 새로운 평화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축사



베른하르트 젤리거(Dr.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손 봉숙 이사장님과 김 은주 소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시민 사회의 국제 협력을 위한 뜻깊은 동아시아 여성 국제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침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기는 하지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은 부분적으로는 수 백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긴장 관계가 존재해 왔으며, 지금은 새로운 냉전 국면이 형성되어 복잡다단한 폭발력을 내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해오다가 19세기 들어 서양의 식민 정책과 일본의 등장으로 세력이 위축되었던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 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되찾으려 시도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와 중국 일부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팽창 정책은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냉전 체제에 따른 이념상의 대결 구도(중국, 북한, 베트남 對 미국, 일본, 한국)로 인해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화해 작업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맹국 진영에서도 진정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좀처럼 화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또는 아세안+3과 같은 틀 안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희망이 싹트었으나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국가들간 교역은 크게 성장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내 모든 국가들 간

에 존재하는 영토 문제이며, 이는 중일간, 한일간, 러시아와 일본 간, 한중간에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조업권(操業權)이나 지하자원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제 2차 북핵 위기 이후 2015년부터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이 의도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이러한 긴장 국면의 강도는 더욱 심해져서 신 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으며, 경제 성장이나 교역 확대를 통해 정치 협력으로 나아가는 행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신 냉전 역학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지속가능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한국의 새 정부가 대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동북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생각하는 의미의 통일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최근에 통일을 지향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한국을 적대국으로 공표했으며,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상의 측면에서 동북 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긴장관계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 아시아에서 공동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의 정책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시민 사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시민 사회는 매우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세 나라의 관계자들께서 모여서 함께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현안들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스자이델 재단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이미 오래 전에 협력관계를 시작해서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북 아시아에서의 이런 소중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저희 한스자이델 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9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Dr. Bernhard Seliger)

축사



김 종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입니다.

먼저「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를 주제로 마련된 국제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를 비롯해, 이번 회의를 후원해주신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여성신문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지 9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를 채택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환경과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의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군사 중심의 협소한 안보 개념이 오늘날 기후 위기, 사이버 안보, 팬데믹과 같은 비군사적이고 복합적인 위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다차원적인 대응과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안보 의제의 내용과 접근 방식은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 여전히 여성은 주변화되어 있고, 여성의 주변화를 야기하는 성 불평등 구조는 견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시 성폭력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와 국가행동계획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성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의 형식적 수용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안보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연대가 더욱 확장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

세션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발표 1

UNSCR 1325의 틀로 본 북한 여성 인권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UNSCR 1325의 틀로 보는 북한 여성 인권

현인에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

1. 서론

21세기 국제 규범 질서에서 여성의 권리와 분쟁 해결 참여는 인권의 보편성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국제 규범으로,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결의안은 여성의 권리를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평화 협상과 재건 과정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안보 개념 자체의 탈남성화(de-masculinization)를 시도했다는 데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국제사회는 결의안 1325를 기점으로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속 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NAP)을 통해 이행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단지 분쟁지역 여성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평화유지군의 성인지적 훈련,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 및 국가 차원의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수립 등 복합적 정책군으로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진전과 달리,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분단 체제 속에서 WPS 의제의 적용이 미진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은 전시 동원 체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여성의 삶을 군사주의 구조 안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이는 UNSCR 1325가 제시하는 여성 보호 및 참여 원칙과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북한 여성은 군복무, 후방지원, 장마당 노동, 모성 담론 등을 통해 정치·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체제 내 종속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 억압과 젠더 기반 폭력이 상시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규범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주의 구조가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고찰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적 선행 사례, WPS 의제의 제도적 진전,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UNSCR 1325의 주요 내용과 국제적 이행 동향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국제 규범으로, 분쟁의 전 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권리를 통합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Hudson, 2010). 이후 결의안 1820(2008), 1888(2009), 1889(2009), 1960(2010) 등 일련의 후속 결의안들이 채택되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 젠더 관점의 평화구축 전략 수립 등이 강조되었다.

결의안 1325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 (1) 여성의 참여(Participation),
- (2) 여성과 소녀에 대한 보호(Protection),
- (3) 분쟁 예방에서의 젠더 통합(Prevention),
- (4) 구호와 회복 과정에서의 젠더 관점 적용(Relief and Recovery).

이는 단순히 여성의 피해자 지위에 머물지 않고, 평화구축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적 규범 전환이라 할 수 있다(Cohn, Kinsella & Gibbings, 2004).¹⁾

UNSCR 1325의 국제적 이행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첫째, 제도화의 진전과 그 한계이다. Shepherd(2011)는 결의안이 젠더 관점을 안보 담론에 통합시킨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여성의 참여가 실질적 영향력보다는 상징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비판한다. 둘째, 국가행동계획(NAP)의 실효성 문제이다. True(2016)²⁾는 일부 국가는 NAP을 정치적 수단이나 형식적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 배정 및 이행 모니터링에서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다. Gibbings(2011)³⁾는 여성단체와 국제 NGO들이 NAP 수립과 이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인지 예산, 젠더 분리 통계, 피해자 중심 정의 실현 등에서 핵심적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1) Carol Cohn, Helen Kinsella, Sheri Gibbings, "Women, Peace and Security: Resolution 1325"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Vol. 6, No. 1 2004. 3. pp. 130-140

2) True, Jacqui (2016) "Explaining the Global Diffusion of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3, pp. 307-323

3) Gibbings, Sheri (2011) "No Angry Women a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 Dream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Vol. 13, No. 4, pp. 522-538

2023년 기준, PeaceWomen에 따르면 100개국 이상이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하였고, 이 중 일부 국가는 2차, 3차 계획까지 수립하여 지속적 정책 갱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제1차 NAP을 발표한 이래 현재 3차(2023~2027)를 시행 중이다. 한국 NAP은 여성의 국제평화활동 참여 확대,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보호, 성인지 예산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일 대비 관점에서 북한 여성에 대한 고려도 점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⁴⁾.

일본의 경우, 국제개발협력(ODA) 차원의 여성 참여를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여성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시키는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르완다는 평화 이후 국회 여성 비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정치 참여의 제도화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다. UN Women(2016)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WPS가 단지 분쟁 중 보호가 아닌, 평화 이후 권한 부여(empowerment)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중국은 아직 NAP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WPS 의제에 대한 공식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군사우위 체제를 유지하며, 여성의 인권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 1325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한반도 WPS 이행의 가장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

시민사회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국가 기반의 이행 압력을 시도하고 있다. GNWP(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ICAN(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Network) 등은 WPS의 지역별 적용을 위한 로컬 네트워크 확장, 여성 활동가 훈련, 민간 평화협상 테이블의 젠더 균형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CAN은 '젊은 여성과 소녀를 위한 WPS 아젠다'를 추진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별·세대 간 포괄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UNSCR 1325는 국가 주도의 제도화뿐 아니라, 시민사회 및 국제연대 기반의 다층적 이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같이 국가적 제도화가 어려운 경우, 외부적 압력과 규범 확산을 위한 실천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WPS 이행의 글로벌 패턴을 북한의 군사화 현실과 비교·대조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통한 북한 여성 인권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4) 여성가족부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20

3. 북한 군사주의와 여성 억압 구조

북한은 스스로를 '항시전비국가(Nation-in-Arms)'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과 국가 체제 전반이 전쟁 대비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⁵⁾. 이러한 체제는 국가의 존속 논리와 정권 정당화의 핵심 수단으로 군사주의를 활용하며, 이에 따라 여성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군사 체제의 일부로 동원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지향하는 여성 보호와 참여의 원칙과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1) 여성의 강제 징집과 군복무는 북한 군사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북한에서는 2015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군복무가 사실상 의무화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5~8년의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RFA, 2024). 여성 군인의 복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식량 부족, 위생 문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통일연구원 서보혁(2024)에⁶⁾ 따르면 북한 여군의 의식주 생활은 전반적으로 극심한 결핍, 비위생, 차별적 배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군은 군 복무 중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군들은 매우 열악한 급식을 제공받는다. 기본 식사는 옥수수밥, 소금국, 김치 약간이 전부이며, 영양이 매우 불균형하다. 훈련이나 작업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량 보충이 어려워 늘 배고픔을 느끼며 이로 인해 대다수 여군은 생리가 끊어진다. 일부 여군은 자체적으로 부식을 조달하거나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며 가족의 지원, 간부와 관계에 따라 급식 분배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여군은 의복과 생리용품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겪는다. 기본 군복 외에 계절에 따른 추위·더위 대비 복장은 부족하며, 보급품의 질이 매우 낮다. 여성에게 필수적인 속옷이나 생리용품의 보급도 부족하다. 군에서 공급하는 생리대는 위에서 갈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여군에게 차례지는 것은 매우 적으며 이것이 감염, 냄새, 수치심으로 이어져 위생과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여군은 비위생적이고 비개인적인 공간에서 생활한다. 생활관은 보통 여러 명이

5) 임재천. (2015). 북한의 상시전비국가화와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국가전략』, 21(2), 45-69.

6) 서보혁 외 “북한 여군의 생활세계” 북한주민의 군대생활 통일연구원 pp. 181~239

함께 생활하는 합숙 형태로 프라이버시가 없다. 세면·화장·화장실 공간이 공용이며 위생 상태가 극도로 열악하다. 여군의 수가 적어 화장실·세면장 시설이 남성과 분리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다. 특히 생리 중일 경우, 개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유발한다. 난방이나 환기조차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동상, 여름철 질병 발생이 빈번하다.

군대에서는 남성 군관·상급자들의 성희롱, 성폭력이 구조화돼 있다. ‘정상납’을 무언의 ‘승진 조건’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부 고발이 불가능하고 문제 제기 시 되레 ‘문제 인물’ 취급 되므로 침묵이 강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는 미비하며, 불복종이나 문제 제기는 오히려 체제에 대한 불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여군 사이의 내부 서열문화, 따돌림, 폭언·폭행도 존재한다. ‘고참병(선임 여성)’이 하급자에게 위생 문제, 냄새 등을 빌미로 강압적인 지시나 체벌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군사동지’라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며, 심지어 의존적 동성애적 관계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생존을 위한 감정 억제, 개인 공간의 철저한 부재, 감시와 통제에 지치게 된다.

복무 전 여성들은 군 입대를 ‘영광’으로 여기지만, 복무 중에는 점점 현실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군대 내 성차별, 부당한 처우,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체제에 대한 회의나 탈북 결심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는 ‘나는 해냈다’는 자긍심을 유지하거나, ‘당의 은덕’으로 포장된 기억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제대 후 사회 복귀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군 경력은 일부에겐 혜택(입당, 대학 추천), 다수에겐 결혼 기피 요소로 된다. 특히 남성 군관과 결혼한 여성들은 민간 여성이 ‘군인 아내’로 인식되는 반면, 여군은 ‘남성화된 여성’으로 평가 절하된다. 사회는 여군을 ‘이상한 여자’, ‘무례한 여자’, ‘거칠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심리적 외상, 무기력감, 고립감 등을 겪으며 사회 부적응 현상도 보인다.

북한 여군은 입대 당시 애국심과 출세의 기대를 품고 군 생활에 들어가지만, 열악한 위생, 성차별, 성폭력, 그리고 군 내부의 폭력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체성과 체제에 대한 회의를 겪는다. 제대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 여성성 회복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북한 여성의 군 복무는 정치적 선전과는 상반되는 고통의 공간이다.

2) 어머니 담론

북한은 여성의 출산과 자녀의 군 복무를 결합한 어머니 담론을 국가주의적 선전의 주요 도구로 삼아왔다. 북한의 어머니 담론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가족정책, 군사주의의 결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혁명의 후비대’를 길러내는 사회주의 어머니상으로 재 정의된다. 주체사상과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삶보다는 ‘당의 뜻에 복무하는 모성’을 미화한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군사자원의 기반으로 여겨지며, 다산(多産)은 단지 가족의 복리보다 군과 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간주된다. 이런 시각은 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성과 Michel Foucault의 생명정치 개념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즉, 여성의 모성과 출산은 자기 결정적 행위가 아닌, 국가에 의해 각본화된 수행적 행위로 강제되는 것이다.⁷⁾ 이 담론은 여성의 재생산을 단지 가족 단위의 역할로 국한하지 않고,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 자원 생산의 장으로 변형시킨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시대부터 여성의 다산을 미덕으로, 자식의 군 복무를 영예로 포장해 왔다⁸⁾. 특히 김정일 시기인 1996년에는 “모성영웅”을 내세웠다. 모성영웅은 자식을 많이 낳거나 고아를 많이 데려다 기른 여성에게 주는 노력영웅 칭호이다. 선군시대 모성영웅은 자녀를 영웅으로 키운 여성,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 많이 낳은 아이들을 군인 또는 군인의 아내로 키운 여성 국가를 대신해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 여성이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거나 고아를 키운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다수 아이를 군대에 보냈다.⁹⁾ 북한당국은 여성들이 선군정치를 받들기 위해 가정을 총대가정으로 만들며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그들을 잘 키워서 군대에 보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¹⁰⁾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선군정치에서 당 정치로 이행하였다.¹¹⁾ 그럼에도 다산으로 군 병력을 보충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고 있다.

7)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Routledge.; Foucault, M. (1976). The History of Sexuality.

8) 김석향. (2010). "북한 공식담론에 나타나는 영예군인과 여성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현대북한연구.

9) Hyeonjin Song "The Types and Meaning of Maternal Heroes in the North Korean Songun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8. No 1. (spring 2018), pp.65-107.

10)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p. 226

11)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Vol 23 No 2, 2019, pp. 85~103

북한에서는 2023년 12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제정하고 20명의 여성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2023년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은 20명 중 10명은 아이를 낳아 키워 군대에 보내고 군대에 원호물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여성이었고 5명은 남의 아이를 입양하여 키워 군대에 보낸 여성들이었다.¹²⁾ 북한당국이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구재생산을 통한 군 병력 충원 의무는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한 중요한 임무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여성은 공산주의어머니 칭호를 받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3.8국제부녀절, 어머니의 날을 맞으며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은 여성과 상봉 모임 등을 통하여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홍보했다.¹³⁾

북한에서 '공산주의어머니'라는 명칭은 단순한 칭호를 넘어 입당, 승진, 사회적 인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자율성과 재생산권을 억압하며, 그녀들의 모성을 체제 충성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는 북한 사회의 군사화가 단순히 무장 병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가족의 생애주기까지 포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어머니 담론은 여성의 존재를 체제 보존의 도구로 고정시키며, 북한식 생명정치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은 자녀를 군에 보내는 의무를 지닐 뿐 아니라, 자녀 복무 기간 중에도 식량·의약품 등 군 보급의 사적 보완책임을 떠안는다.

3) 민간 영역에서 군사 참여

북한여성은 민간 영역에서도 ‘전시 대비 훈련’과 방공·물자 생산 활동 등 반강제적 군사 참여를 강요받는다. 전시를 대비한 인민반 훈련, 여성 보위대 조직, 전쟁 준비 캠페인 등은 노동과 돌봄의 이중 부담 위에 군사화된 역할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는 여성의 일상과 권리를 더욱 제약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

12) 로동신문 2023년 12월 15일 2면 “조국을 지키는 미더운 병사들 뒤에는 애국자 어머니들이 있다”: 2023년 12월 16일 2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값 높은 삶은 없다”

13) 로동신문 2024년 12월 2일 4면 “상봉모임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을 실감 있게 진행”: 2024년 3월 7일 4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2024년 3월 6일 3면 “3.8국제부녀절 114돏기념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수상자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의 상봉모임진행”

의안 1325호가 강조하는 '분쟁 예방에서의 여성 참여'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북한은 군사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민간인의 일상생활조차 군사적 질서에 따라 조직되며, 여성 역시 이 체제에서 예외가 아니다¹⁴⁾. 특히 여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 예비군 지원, 청년근위대 조기 교육, 군 관련 생산 활동 등을 통해 군사참여를 수행한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 시대부터 '전체 주민의 전투화'를 강조하며, 여성에게도 민방위 및 군사훈련 참여를 의무화해왔다¹⁴⁾³⁾.

이와 함께 녀성들도 남자들과 같이 군사훈련에 참가하여 군사지식을 소유하기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방선에는 인민군 용사들이튼튼히 서서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직접 대치하여 있는 형편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대로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녀성들 속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녀맹원들과 전체 녀성들까지 군사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면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그만큼 더 강화될 것이며, 적들은 감히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¹⁵⁾

예비 전력으로서 여성은 각종 민방위 조직(노농적위대, 교도대)에 소속되며, 평시에는 생산 노동을, 유사시에는 방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강요받는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일상 노동자, 어머니, 당원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전투대기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는다.¹⁶⁾ 이는 국가가 여성의 삶의 주기를 정치적·군사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생명 정치적 전략에 해당한다

이처럼 여성은 공식적인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설정한 군사적 의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특히 각종 군수 생산 활동(군복 제작, 군용품 포장, 건설지원 등)에 자발적 '충성노동'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이 민간 영역에서 군사체제의 유지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과 군사의 경계가 해체된 이 환경 속에서 여성은 '민

14) 최하영 “북한 대학생 군사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9, pp.113-140

15) 김일성, “녀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일, 『김일성저작집』 19: 433).

16) 정추영, “탈북여성의 군사적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군사화와 성별 위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간인 군사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군사 참여는 여성의 시간과 신체, 정서까지 군사화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젠더 억압과 직결된다. 여성은 일상적 돌봄, 생계 노동 외에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노동까지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곧 탈정치화된 일상 공간이 군사주의의 통치 수단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북한 여성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전장과 맞닿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4) 군사우선 자원 배분 구조로 인한 여성부담 증가

북한경제의 군사우선 자원 배분 구조는 민생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계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비공식 노동(예: 장마당 활동, 밀수 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박영자, 2010). 이는 국가의 실패를 여성의 노동으로 메우는 구조적 젠더 착취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

북한 사회는 '선군정치' 기조 아래에서 자원의 배분과 통제 권한이 철저히 군사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비군사 부문, 특히 생계 유지와 재생산 영역은 여성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보인다. 남성의 군 복무 장기화와 군사 노동 집중은 여성에게 가족 부양과 지역사회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한 가부장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군사화된 생명정치와 젠더 질서가 중첩되는 구조적 결과이다.

북한은 국가의 존립과 체제 유지를 위해 자원과 노동력, 식량, 연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 부문을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인민군대는 조국의 방패'이자 '인민경제의 선도자'라는 선전과 함께 일상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민간영역,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자급자족이 강요되던 시기에도, 군부대에는 우선적으로 배급이 공급되었고, 여성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마당에서의 생계 활동, 비공식 경제, 수공업, 재래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이중, 삼중의 노동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비가시화된 '예비 자원'으로 간주하는 북한식 생명정치의 전형이다. 남성의 병역 이행이 영웅화되는 반면, 여성은 그 공백을 무한히 메꾸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부에서도 '조용한 국가 유지를 담당하는 인물'로 기능하며, 정치적 주체성보다는 기능적 존재로 규정된다.³

더 나아가, 여성의 생계 노동이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국가

의 복지 책임 회피 구조가 강화된다. 여성은 아이를 키우고, 병든 가족을 간병하고, 동시에 장마당을 운영하고 식량을 구해야 한다. 이는 곧 여성의 노동이 ‘국가를 위한 비공식적 기반’이자 군사 중심 국가 운영의 보이지 않는 축임을 의미한다.¹⁷⁾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우선 자원 배분 구조는 단지 군대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과 노동, 신체를 은밀히 군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은 병기를 들지는 않지만, 병기 체제를 떠받치는 필수 구성요소로서 기능하며, 이로 인해 젠더 불평등은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향후 통일 및 인권정책 수립 시, 군사화된 자원 배분이 여성에게 미친 구조적 피해와 부담을 분석하고 복원할 수 있는 실증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5) 국제 분쟁에서 여성 억압 확장

2024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하에 자국 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군사주의 확산과 독재 정권 간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침묵당한 존재는 바로 자녀를 잃거나 잃을까 두려워하는 북한의 어머니들이었다.

공개된 군사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약 10,000~20,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전선(쿠르스크, 도네츠크 등지)에 파병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대 남성이다.¹⁸⁾ 현재까지 여성 군인이 파견되었다는 공식 보도나 정보는 없다. 하지만 병력 파견으로 인해 남성 가족 구성원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돌봄 노동, 생계 부담, 감정노동을 동시에 짊어지는 구조에 놓였다.

북한 정권은 자녀의 군 복무를 국가 충성의 상징으로 이데올로기화해 왔고, 전쟁과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들은 울 수 없는 존재로 길들여져 있다. 이는 WPS가 규정하는 여성 보호와 참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7) Kang, Mi Jin. (2018). “North Korean Women in the Informal Economy.” NK Economy Watch Reports.

18) The Guardian. (2025). “North Korean Troops in Kursk Face Death and Silenc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feb/07/russia-withdraws-north-korea-troops-kursk-deaths-ukraine-war>

자녀가 전쟁에 파병되었음에도 가족에게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¹⁹⁾(아시아프레스, 2024).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알 수 없다. 어머니는 가족을 잃고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체제에 대한 불충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생계부양자인 자녀의 부재로 인해 미래 경제적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북한당국은 뒤늦게야 러시아파병을 인정하였으며²⁰⁾ 최근에는 김정은이 러시아 사상자들의 유해를 접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러시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 천 명의 병사들의 죽음을 정치화하기 위한 선전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몇 명의 어머니를 영웅의 어머니로 상징화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식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즉 군인의 어머니라는 상징성은 국가적 위계에 이용되며, 실제 고통은 공동체 내에서 방치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 모성’이라는 북한식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으며, 여성의 감정은 통제되고 국가를 위한 도구화된 충성으로 환원된다.

이는 WPS 원칙의 중대위반 사례로 된다. 러시아 파병은 병력 가족 여성에 대한 국가적 보호 시스템 부재하므로 분쟁 시 여성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 파병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모성의 고통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전쟁 영향 분석 시 젠더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전후 통일·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기억과 경험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군사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침묵의 폭력, 애도 통제, 정보 단절의 문제로도 접근되어야 한다. UNSCR 1325는 여성의 보호와 참여를 중심에 놓은 국제 기준이며, 북한의 전시체제와 이념은 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논의할 때, 침묵당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19) 아시아프레스. (2024.10.26). 「러시아 파병을 북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1) 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특약.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10/nk-nuclear-missile/dispatch-to-russia-parents/>

20) Politico. (2025). “North Korea Confirms It Sent Troops to Russia.”
<https://www.politico.com/news/2025/04/27/north-korea-confirms-it-sent-troops-to-russia-for-war-against-ukraine-00312095>

4.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 WPS 틀을 통한 북한 여성 인권 개선

북한의 구조화된 여성 억압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Women, Peace and Security, 이하 WPS)의 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의안 1325호는 단순히 선언적 성격을 넘어서, 유엔 회원국이 구속력을 갖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평화 안보 의제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유엔여성기구(UN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기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WPS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여성 군복무, 젠더 기반 폭력, 어머니 이데올로기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안하고, 후속 권고사항으로 WPS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유엔 여성기구는 이를 기반으로 북한 관련 젠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행동계획(NAP) 내에 북한 여성 인권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제3차 WPS 국가행동계획은 북한 및 한반도 평화와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부족하다. 일본과 영국은 이미 자국의 NAP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다자 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의 참여와 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 NGO인 PeaceWome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WILPF), GNWP(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등은 WPS 분야의 선도적 활동 주체로서, 북한 여성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제안과 현장 활동을 연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은 정부의 대응을 견인하는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및 대북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젠더 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유엔 COI는 이미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내 여성 대상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등을 국제범죄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WPS 체계는 이를 재차 국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섯째, 다자간 연합체와 지역기구를 통한 WPS 연계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의 WPS 프레임워크처럼, 동북아 지역에서도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형성과 정부 간 연계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이나 한-유엔 협력프로그램 등 기존 외교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다.

여섯째, 유엔의 UPR(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 북한 여성 인권 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안·추적할 필요가 있다. 과거 UPR에서 북한은 여성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WPS 기준과는 현격히 괴리되어 있으며, NGO 및 유엔회원국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접근은 북한의 공식적 저항과 상관없이 규범적 압력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에 제한적으로나마 복귀하고 있는 점은, WPS 이행을 요구할 외교적 기회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네 가지 핵심 기둥—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회복(Recovery)—을 북한의 군사주의 여성 억압 구조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WPS 담론의 지리적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여성주의(postcolonial feminism)와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교차점에서 북한 여성의 경험을 조명하였다. 북한의 여성들은 단순히 억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전시 동원되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기능함으로써 ‘군사화된 여성성(militarized femininity)’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정책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WPS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시 북한 여성 인권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압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의제를 단순히 '북한 붕괴'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젠더 폭력 종식'이라는 보편 인권 프레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구술 아카이빙 체계, 디지털 스토리

텔링 플랫폼, 여성 탈북민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 WPS 의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북한 여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일성, “녀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일, 『김일성저작집』 19: 433).
- 김석향. (2010). "북한 공식담론에 나타나는 영예군인과 여성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현대북한연구.
-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Vol 23 No 2, 2019, pp. 85~103
- 임재천. (2015). 북한의 상시전비국가화와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국가전략』, 21(2), 45-69
- 여성가족부 (2023). 제3차 여성, 평화, 안보 국가행동계획. 대한민국 정부.
- 서보혁 외 “북한 여군의 생활세계” 북한주민의 군대생활 통일연구원 pp. 181~239
- 정추영, “탈북여성의 군사적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군사화와 성별 위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최하영 “북한 대학생 군사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9, pp.113-140
- 현인에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p. 226
- Cohn, C., Kinsella, H., & Gibbings, S. (2004). Women, Peace and Security Resolution 1325.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6(1), 130-140.
- Gibbings, S. (2011). No Angry Women a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 Dream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13(4), 522-538.
- Hyeonjin Song “The Types and Meaning of Maternal Heroes in the North Koren Songun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8. No 1. (spring 2018), pp.65-107.
- Kang, Mi Jin. (2018). “North Korean Women in the Informal Economy.” NK Economy Watch Reports.
- The Guardian. (2025). “North Korean Troops in Kursk Face Death and Silenc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feb/07/russia-withdraws-north-korea-troops-kursk-deaths-ukraine-war>

True, Jacqui (2016) “Explaining the Global Diffusion of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3, pp. 307-323

로동신문 2023년 12월 15일 2면 “조국을 지키는 미더운 병사들 뒤에는 애국자 어머니들이 있다”: 2023년 12월 16일 2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값 높은 삶은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일 4면 “상봉모임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을 실감 있게 진행”: 2024년 3월 7일 4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2024년 3월 6일 3면 “3.8국제부녀절 114돏기념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수상자들과 녀맹일군들 , 녀맹원들의 상봉모임진행”

아시아프레스. (2024.10.26). 「러시아 파병을 북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1) 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특약.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10/nk-nuclear-missile/dispatch-to-russia-parents/>

Politico. (2025). “North Korea Confirms It Sent Troops to Russia.” <https://www.politico.com/news/2025/04/27/north-korea-confirms-it-sent-troops-to-russia-for-war-against-ukraine-00312095>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발표 2

한반도에서의 UNSCR 1325 이행 현황 분석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반도에서의 UNSCR 1325 이행 현황 분석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2019년까지 후속결의안들도 채택되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개념을 인간안보로 확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폭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현안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유엔은 회원국이 1325호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그에 따라 2005년 덴마크가 처음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4년까지 112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¹⁾ 국가에 따라 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그친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5기 국가행동계획까지 수립한 국가도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2014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 현재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6)을 이행 중이다.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은 3년을 주기로 수립되는데, 2014년에 수립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4가지 분야에서 73개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행부처는 총 8개(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KOICA)이다. 제1기 국가행동계획의 경우 이행 및 모니터링이 분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행동계획 전문에는 포함되어 이행과 모니터링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기존 4가지 분야에 이행점검 분야가 추가되고, 경찰청이 새로운 관계 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제3기 국가행동계획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참여하면서 총 10개 부처 및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경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참여하면서 총 11개의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당시 기존 계획의 이행 평가와 함께, 신규 계획 수립 당시의 여성·평화·안보와 관련한 현안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유엔은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분석과 강령, 전략과 행동계획, 기간,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과 강령은 결의안을 해당 국가에서 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결의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우선

1) <https://1325naps.peacewomen.org/>(최종 검색일: 2025.7.28.)

영역,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하고, 성평등, 여성의 권리, 여성의 역량 강화 원칙을 구현하는 목적과 강령을 제시한다. 전략과 행동계획은 1325호의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에 맞는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들은 모니터링 조직, 보고의 빈도, 규정 등을 제시한다. 예산은 국가행동계획안에 제시된 개별활동에 따른 예산 배정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다.²⁾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은 분야, 목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는 1325호 결의안에서 제시된 네 개의 기둥(4P)인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성 주류화(gender perspectives) 중 참여, 보호, 예방에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와 세부과제별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목표와 세부과제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단, 4기 국가행동계획은 이행 중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3기 국가행동계획까지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2.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이행 현황

1)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가. 주요 내용

제1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의 분야에서 10개의 목표, 28개의 세부과제, 73개의 행동계획을 다루고 있고,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KOICA가 참여하였다. 1기 국가행동계획의 목표와 주관기관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각 분야별 목표에서 알 수 있듯, 1기 국가행동계획의 경우 분쟁지역에 대한 개입, 개발원조 과정의 여성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평화·안보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평화·안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해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강화 등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가 활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참여하고 있는 특징도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 성인지적 관점

2) 정경란(2013),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9쪽; 김정수·조영주·이덕경(2018),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56쪽에서 재인용.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방 분야와 관련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

분야	목표	세부과제
예방	1. 분쟁 예방, 평화활동 관련 종사자 인식 제고	1.1. 장병 및 군(공)무원 등에 대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성인지 교육 확대 1.2. PKO 파병 전 파병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1.3. 군부대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 강구 1.4. KOICA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5.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인식제고 및 인권 교육 실시
	2. 분쟁 예방, 평화활동 및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2.1. 국가비상계획에 여성보호 정책 및 성인지 관점 도입 추진 2.2.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 수립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강화 2.3. 국방·통일·외교 분야 예산 수립시 성인지 예산 확대·강화
	3. 국제협력을 통한 예방시스템 구축	3.1.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 연대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사전 예방 협력 3.2. 분쟁하 여성보호 및 여성의 평화활동 참여를 위한 UN 메커니즘 강화 노력 지속 3.3. KOICA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확대 3.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 및 이행
참여	4. 분쟁 예방, 평화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4.1. 분쟁예방, 분쟁해결 과정 및 관련 국제 회의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
	5. 평화·안보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양성평등 도모	5.1. 국방·통일·외교 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5.2. 국방·통일·외교 분야 여성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6.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후원	6.1. 분쟁지역 또는 민주화 과도기 국가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대 지원 6.2. 양성평등 관련 ODA 사업에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6.3 KOICA 연수 및 장학 프로그램에 여성 참가자 참여 확대
보호	7.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7.1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
	8. 여성, 아동·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	8.1 군인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수립 8.2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탈북민 지원 정책 마련 8.3 국내 체류 여성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9.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9.1 약취유인죄 및 성범죄 관련 국내법 엄정 적용 9.2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구호 및 회복	10. 개발원조를 통한 분쟁지역 여성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0.1 ODA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 10.2 ODA 사업 담당자에 대한 젠더교육 실시 10.3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10.4 국제기구의 성인지적 평화구축 사업 지속 지원

나. 이행 현황

제1기 국가행동계획은 이행 성과를 연 2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12월, 2015년 5월의 이행성과 보고에서는 추진실적, 향후계획, 성과평가, 추진시 문제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2015년 12월부터는 기존 내용에 목적, 관련 예산, 성과지표 및 사업 기간이 추가되었고 향후 계획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 분야별 이행 현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³⁾

예방의 경우, 총 3개의 목표,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8개의 부처가 37개의 행동계획을 계획하여 이행하였다. 달성도를 살펴보면 37개의 행동계획에 25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중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세부과제는 장병 및 군(공)무원등에 대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성인지교육 확대,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인식제고, 교육실시, 국방·통일·외교 분야 예산 수립 시 성인지예산 확대·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세부과제 중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분야는 총 3개의 목표, 총 6개의 세부과제, 13개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

3) 해당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영주·윤지소·문희영·김효경(2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데, 13개의 행동계획과 관련한 11개의 성과지표 중 3개의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예방, 분쟁해결 과정 및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 분쟁예방, 분쟁해결 과정 및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 국방·통일·외교 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국방·통일·외교 분야 여성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련한 성과지표에서 미달성을 보였다.

보호 분야는 총 3개의 목표, 6개의 세부과제, 15개의 행동계획에 대해 8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라는 세부과제의 목표치 달성이 확인이 어려워 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호 및 회복분야는 총 1개의 목표, 총 4개의 세부과제, 9개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5개의 성과지표가 있고, 그 중 세부과제 ODA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행 실적은 높은 편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목표, 세부과제, 행동계획의 정합성은 부족해 보인다. 단적으로 ‘분쟁 예방, 평화활동 관련 종사자 인식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행동계획에 포함하고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다보니 이행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행동계획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대내외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 통일 관련 의제와 관련한 내용이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따라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가. 주요 내용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 분야에서 12개의 목표, 31개의 세부과제, 83개의 행동계획을 다루고 있고,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KOICA, 경찰청이 참여하였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경찰청이 참여하였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국내 차원의 안전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제1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참여부처,

목표, 세부과제, 행동계획이 모두 양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각 목표와 세부과제, 행동계획이 다루는 세부 내용은 제1기 국가행동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평화·안보 분야를 국방·안보·통일·재난·위기로 확대 및 구체화하고, 보호의 대상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각 내용은 제1기 국가행동계획에서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분야별 목표 및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

분야	목표	세부과제
예방	1. 분쟁 예방, 평화활동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 제고	1.1. PKO 대상 여성·평화·안보역량 강화 1.2. 개발협력관련 해외 파견인력의 역량 강화 1.3. 교육을 통한 분쟁 예방 역량 강화 1.4. 군부대내 성폭력 예방체계 운영 내실화
	2.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위기 분야 정책에서 성인지 접근 확대	2.1. 국방·안보·평화·통일·재난분야 종사자의 젠더 교육 강화 2.2. 국방·외교·평화·통일 분야 성별영향 분석 - 성인지예산 운영 강화 2.3. 통일·외교 정책에서의 젠더관점 통합 2.4. 비상대비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확대
	3. 국제협력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활동 강화	3.1. 국제기구 차원의 예방시스템 구축 3.2. 지역적 차원의 분쟁예방 협력 강화 3.3. 유엔의 성인지적 평화구축 활동 지원
	4.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4.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참여	5.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5.1. 주요 정책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5.2.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참여 확대 및 전문가 양성 5.3. 국제적 평화 확산을 위한 여성 참여 확대
	6.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6.1. 국방·안보·평화·통일분야에서 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보호	7. 분쟁 하 성폭력 피해 지원	7.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활성화 7.2.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속 7.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8. 군 성폭력 피해 지원	8.1.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8.2. 군 관련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9. 탈북 여성 및 난민 지원	9.1. 북한이탈주민 여성 지원 9.2. 국내 체류 난민 처우 개선
구호 및 회복	10. 여성, 평화, 안보 관점에서의 개발협력 추진 기반 마련	10.1. 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확대 10.2. ODA 사업에서의 여성·평화·안보 요소 고려
	11. 개발협력에서의 분쟁지역 여 성의 참여와 보호 지원 강화	11.1. 개발협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사 회적 참여 확대 지원 11.2.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11.3. 정부의 평화활동과 개발협력 활동 간 연계 추진
이행점 검	12. 이행기반 내실화	12.1. 여성·평화·안보 관련 정부 관계자 의 정책 역량 강화 12.2. 여성·평화·안보 이행강화 기반 마련 12.3. 국가행동계획의 추진역량 강화

나. 이행 현황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매해 2회 점검을 실시했고, 이행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은 제1기 국가행동계획과 동일하나, 성과지표를 행동계획 단위로 제시하도록 되어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각 분야별 이행 현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⁴⁾

예방 분야는 세부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 실시와 관련한 행동계획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대부분의 행동계획의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다.

참여 분야는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한 행동계획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평화통일 과정의 여성 참여와 관련해 남북교류나 회담의 여성 참여 부분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참여 분야에서 이행이 어려운 점은 기존의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낮은 여성 대표성에서 기인한다. 관련 분야의 여성 전문가가 남성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관련 분야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국 사회의 성별분업이 관련 분야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정세 영향과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참여 분야의 이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 분야, 구호 및 회복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나 현장점검과 관련

4) 해당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영주·윤지소·문희영·김효경(2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한 행동계획의 성과목표 외에는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1.1. 개발협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확대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행동계획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행점검은 제2기 국가행동계획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과제, 행동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이행점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3>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성과

목표	국가행동계획	목표	성과
1.1 분쟁예방, 평화활동 관련 종사자의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 제고	유엔 PKO 여성 비율 향상	’18 16.6% → ’19 26.0%	’18 16.6%, ’19 26.0%, ’20 상반기 28.6%
1.2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위기 분야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한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전 교육에 성인지·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연 2회	연 2회
2.2 국방·외교·평화·통일 분야 성별영향분석-성인지 예산 운영 강화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분야 부처별 목표에 부합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국방부 15개 과제	19개 과제
		통일부 4건	5건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연계 강화	통일부 연계를 100%	100%
		여가부 자체 개선률 5.5%	평균 6.2%
2.3 통일·외교정책에서의 젠더관점 통합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시 성인지적 관점 확대	주요 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시 성별영향평가 100%	100% 달성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무상원조계획 성인지 관련 성과지표 SDG목표와 연계비중 확대(10%)	평균 11.32%
3.1 국제기구 차원의 예방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 회의 내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내 NGO활동 지원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률(90%)	평균 99.2%
4.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여성·	범교과 학습	12,356부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평화·안보 등 관련 범교과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 보급 (11,613부)	
5.1 주요 정책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국방, 통일, 외교 분야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 제고	본부 과장급 20.5%	36%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의 여성 인재 신규 발굴 및 활용	여성 통일교육위원 양성 30%	30%
5.2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참여 확대 및 전문가 양성	남북한 협상 및 6자회담 등 관련 정부대표단 중 여성 참여 확대 및 실무진행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	남북회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등 전 과정에 여성 비율 증대(25%이상)	평균 39.1%
	통일센터의 여성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통일센터의 여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14건)	14건
6.1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서 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국방·통일 정책 수립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체계 구축·운영	민·관·군 워크숍 실시(6회)	8회
		통일부 정책 설명회, 협의회 등 민간단체 대상 소통행사 개최(36건)	36건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에서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확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 자문회의 개최(6건)	6건
7.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활성화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지속 추진	지원사업 만족도(4.0점)	평균 4.3점
8.1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	관련 법령 제·개정,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확대	훈령 제정 1건, 상담관 총원 48명, 위탁교육 9회
8.2 군 관련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성범죄자 관련 엄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및 관련 법률 정비	관련법 준수 및 징계양정 기준 개정	양형 기준 의결
9.1 북한이탈주민 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인신	피상담자 만	평균

	매매,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 제공	족도(87%)	93.2%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 등 자립지원 제공	탈북여성의 고용률 (50.7%)	평균 53.3%
9.2 국내체류 난민 처우 개선	난민처우협의회 재정착실무협의체에서 난민여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 검토	난민여성 취업 성공사례 구축(9건)	12건
10.1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확대	지자체 및 산하 부처가 실행하는 개발협력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개발협력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주제별 연구, 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수행, 배포(6건)	6건
	OECD/DAC 젠더 마커의 적극 활용	KOICA 직원 대상 OECD/DAC 젠더 마커 최소기준 활용 교육 실시(6회)	6회
	사업 계획-선정-이행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자문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자문 제공(90회)	172회
10.2 ODA 사업에서의 여성·평화·안보 요소 고려	인도적 지원에의 여성·평화적 요소 통합	분쟁지역 난민/소녀 대상 사업 지원(30건)	30건
11.2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역량 강화 사업 추진	관련 사업 추진(6건)	6건
11.3 정부의 평화활동과 개발협력 활동 간 연계 추진	정부수립 과도기에서의 선거역량 감시, 법률/행정체계 마련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선거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젠더마커 1 또는 2 부여 비율 (55%)	100%

※ 출처: 조영주·윤지소·문희영·김효경(2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82-85쪽.

3) 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가. 주요 내용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 분야에서 11개의 목표, 23개의 세부과제, 54개의 행동계획을 다루고 있고,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KOICA,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참여하였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헌법기구이자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참여하였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분야별 목표 및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 <표 4>와 같다.

3기 국가행동계획은 2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세부과제, 행동계획 수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내용적인 변화라기보다 목표와 행동계획의 통합의 결과이다. 3기 국가행동계획에서 특기할 것은 한국 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행점검 차원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행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연 2회 이행점검 중 1회는 기관 자체 점검, 2회는 여성가족부 주재 하에 전체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표 4> 제3기 국가행동계획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

분야	목표	세부과제
예방	1.. 분쟁 예방, 평화, 통일, 국제 개발협력 등 관련 종사자의 여성·평화·안보 역량 제고	1.1. 공무원, 국제평화유지 및 개발협력 관계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1.2. 군의 성인지 역량 강화
	2.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	2.1.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2.2. 비상대비 및 재난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반영
	3.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3.1. 국제사회 여성·평화·안보 확산에 기여 3.2.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성인지적 평화구축 활동 지원 3.3.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 강화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1. 여성·평화·안보 학교교육 강화 4.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참여	5.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분	5.1.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야의 여성 참여 확대	5.2. 국제평화 및 개발협력,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6.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거버넌스 확산	6.1.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6.2.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지역 확산
보호	7. 군 관련 및 분쟁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7.1. 군 관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7.2.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 여성 인권 보호 7.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8. 북한이탈여성 및 난민여성 지원	8.1.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8.2. 난민 여성 지원 강화
구호 및 회복	9.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9.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9.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10.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 강화	10.1.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거버넌스 구축 10.2.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이행점검	11.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 및 기반 구축	11.1. 정기적 이행점검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11.2. 효과적 이행 추진기반 강화

나. 이행 현황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 2회 중 1회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1회는 중앙 차원에서 전체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행점검의 방식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한데, 주로 서면을 통해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이행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도 기관에 따라 1인-3인으로 각이하였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현황은 제4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던 2024년 하반기에 점검하였기에 미이행된 행동계획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이행하였다. 다만, 정량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행동계획의 경우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제3기 국가행동계획 역시 비예산 사업이 대부분이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4)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의 주요 내용

제4기 국가행동계획은 2024년 수립되어 현재 이행 중에 있는데, 총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KOICA,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환경부로, 제4기 국가행동계획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환경부가 신규로 참여하였다.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분야별 목표 및 각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 다음 <표 5>와 같다.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특징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내용을 세부과제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그 외의 세부과제와 행동계획은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고,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세부과제와 행동계획의 수가 제3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는 차이점만 있다. 다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4기 행동계획에서는 남북협력과 관련한 세부과제가 제외되었고,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지역 확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표 5> 제4기 국가행동계획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

분야	목표	세부과제
예방	1. 분쟁 예방, 평화, 통일, 국제 개발협력 등 관련 종사자의 여성·평화·안보 역량 제고	1.1. 공무원, 국제평화유지 및 개발협력 관계자의 양성평등 역량 강화 1.2. 군의 양성평등 역량 강화
	2.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환경·안전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	2.1.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환경·안전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 2.2. 비상대비 및 재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 반영
	3. 여성·평화·안보 관련 대외 협력 강화	3.1. 여성·평화·안보의제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 3.2.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양성평등한 평화구축 활동 지원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	4.1. 여성·평화·안보 학교교육 강화 4.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참여	5.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의 여성 참여 지속 지원	5.1.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 분야의 여성 참여 지속 지원 5.2. 국제평화 및 개발협력,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 참여 지속 지원
	6.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거버넌스 확산	6.1.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보호	7.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7.1. 군 관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7.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8. 북한이탈여성 및 난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8.1.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8.2. 난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구호 및 회복	9.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9.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지속 강화 9.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10.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	10.1.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발협력 및 책무성 강화	반영 및 거버넌스 구축 10.2.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이행점검	11.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 및 이행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11.1.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체계 강화 11.2. 국가행동계획 이행 정기 모니터링

3. 한국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2014년 이후 매 주기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3항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2017년 신설된 이후, 법적 근거와 함께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행동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수립이 되고 있다. 각 국가의 첫 국가행동계획 수립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2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이고, 2023년 12월 기준, 기존 국가행동계획 만료 이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46개라고 할 때 4기 국가행동계획까지 수립하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때마다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정세 및 현안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평화와 안보 관련 의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의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적극적 확산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의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도모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과제와 국내적 차원의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였다.⁵⁾

국가행동계획의 이행률이 높다는 점도 성과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1기에서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각 행동계획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대부분이 달성하여 이행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한계에서 짚고자 한다.

5) 윤지소·조영주·김유민·김우인·박민정(2023),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행점검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여가부 주최의 전체 점검 이외에 이행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여 부처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면서 주체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각 영역별 민관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은 이행의 내실화의 측면에서 성과라 볼 수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관별 이행점검이 실제로 내실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은 그 자체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정책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주요 참여 기관은 각 기관 정책의 젠더 또는 평화와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은 관련 정책이 성평등과 평화에 갖는 함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한계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제도화 성과라 할 수 있는 국가행동계획은 수립과 이행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넘는 상황에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가행동계획 수립 때마다 지난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평가 때 도출되는 한계의 내용이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 국가행동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나 행동계획이 비예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기존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 사업을 국가행동계획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평화나 안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남아 있고, 더욱이 젠더와 관련성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 결과, 국가행동계획은 각 기관의 여성 관련 사업의 모음집에 그치는 수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초 UNSCR 1325의 고유 목적, 주요 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행동계획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과도 이어지며, 참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는 성평등 관련 계획과 중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국가행동계획은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본연의 의미를 삭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 세부과제 및 행동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행동계획의 높은 이행률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설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1기와 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당시에는 별도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해당 기관에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시에는 성과지표, 성과목표, 평가방법을 제시

하고 각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확정하였다. 당시 제시된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는 교육 실시, 만족도 조사, 회의 개최 횟수, 여성 참여율, 특정 대상 또는 사업 지원 등이었다.⁶⁾ 각 지표와 목표의 수준은 행동계획의 수위에 따라 달랐고, 부처가 이행가능한 수준에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EU는 UNSCR 1325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실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0년 7월 EU이사회는 EU의 UNSCR 1325와 1820 실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했고, 지표를 중심으로 실행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한다.⁷⁾ 한국도 의미있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과 관련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국가행동계획의 위상 제고가 필요한 한편으로, 기존 국가행동계획의 구조화된 틀의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당시부터 구성된 분야-목표-세부과제-행동계획이라는 구조는 4기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국가행동계획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직하다.

또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주도 하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환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권한의 한계가 있다. 국가행동계획은 수평적 관계의 부처 간 협의체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나 조정과 총괄의 기능을 담당할 때 일정정도의 권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방향성 설정,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관리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제한적임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 환류에서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4. 나오며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1기부터 4기까지 내용과 이행 상황을 간략히 개괄하고, 이행 현황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앞서 제시한 성과와 한계는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로, 향후 국가행동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때 현실적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조영주·윤지소·문희영·김효경(2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142-149쪽.

7) 강윤희(2013),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85쪽.

국가행동계획의 출발점과 국가행동계획이 지향하는 바를 고려했을 때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단순히 정책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탈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제도화와 정책화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국가행동계획이 과연 평화와 안보 영역의 성 주류화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국가행동계획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가,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 성평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엘리(2024)는 평화·안보 담론에서 성평등 정치의 양상을 UNSCR 1325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 논의에서 제기하는 피해자와 평화구축자의 이분법적 구도가 1325의 접근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지적, 다시 말해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비안보적 여성의 다각적 결’을 놓치게 한다는 점⁸⁾은 이후 UNSCR 1325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그 함의를 평가하는 데서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다.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다루는 4개의 분야(참여, 예방, 보호, 구호 및 회복)는 결국 피해자와 평화구축자라는 이분법의 틀에 제한됨에 따라 평화·안보와 관련한 다층적 논의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UNSCR 1325와 국가행동계획이 평화와 안보 영역의 성 주류화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과연 전환으로서 평등이라는 성 주류화 전략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세부과제와 세부과제별 행동계획은 여성을 추가하는 전략 외에 구조를 변화시키는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주류화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이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로 설정되는 것도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UNSCR 1325 국가행동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음 단계의 국가행동계획 마련과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심화 및 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의 국가행동계획과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접근하는 방식 등을 심도있게 평가하고, 전환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 과제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SCR 1325 및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가행동계획 최초 수립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의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김엘리(2024),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여성 평화 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의 성평등 정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제63권 2호, 21-22쪽.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토론 1

김엘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여성인권이 글로벌 안보의제가 된다는 것

김엘리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1. 여성인권을 안보의제로 삼는다는 것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¹⁾ 걸어온 25년을 살피고 논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시민사회가 최초로 이룬 결실이라는 점은 1325가 지닌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1325에 대한 공론장이 많지 않았던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이를 기억하고 과정을 짚어보는 자리는 지금 요청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보여주는 시대적 전환은 여성인권이 안보의 의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보논의가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근간이 되었다면 인간의 빈곤, 환경, 건강, 식량, 개인, 공동체 등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²⁾ 확대되는 변화를 바탕으로 유엔안보리결의 1325는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여성들에게 적실한 안보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안전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국가행동계획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안보에서 ‘인간’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짚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비인간으로 확장하면서 연결된 관계 안에서 안보를 사유해야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기동안 전쟁을 경험하며 국경을 넘는 동물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피난은 모든 생물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AI와 함께 혹은 기술장치를 장착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폭력의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관계에 관한 사유는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생명들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삶을 들여

1) 이 글에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축약어: 유엔안보리결의 1325)로 쓴다.

2)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군사적 요소만이 아니라 비군사적 요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간안보가 1994년 발표됐다. 비군사적 요소로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적 안보 7가지가 제시됐다. 안보의 개념과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군사적 요소에서 비군사적 요소로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을 안보 개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페미니스트 정치윤리학의 논의도 있습니다.

셋째, 유엔안보리 1325가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활동을 약화시키는 장치가 되었을까 짚어봅니다. 여성인권을 안보 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삶을 위해선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안전한 삶은 강한 군사력으로부터 지켜진다는 신념 체계를 넘어 여성, 퀴어,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초국가적으로 무엇이 요청되는가를 질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안보를 국가의 군사 영역에 맡기거나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안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들과 계엄령이라는 군사화의 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2. 비서구 지역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말한다는 것

현인에 발표자님의 글은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지닌 한계를 짚으면서도 북한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채택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가진 글로벌한 영향력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결의 1325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대를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매개가 되어 남북한 여성들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를테면, 건강 안보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여성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여성의 협력과 교류의 지점을 트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만들어는데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현인에 발표자님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런데 실용적 입장에서 좀 비껴나서 여성의 평화와 안보에 관해 숙고할 지점은 없을까요? 현인에 발표자님께서서는 북한의 구조화된 군사화와 체제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짚고 있는데요,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가 말한 이러한 ‘군사화된 여성성’ 접근은 구조를 강조합니다. 저는 북한의 구조화된 군사주의에 압도되지 않는 혹은 군사화된 사회의 전형화된 서사에 매몰되지 않는 북한 여성들의 삶과 행위가 있으리라 보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여성의 삶을 포착한다면 북한여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이해에 갇히지 않는 방식으로, 트랜스내셔널한 인권의 가치 안에서 여성들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북한 사회도 여성들이 결혼을 지연하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등 새로운 세대의 섹슈얼리티 실천의 변화를 듣곤 합니다.

여성인권을 안보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국가에 동원되는 여성들이 종속되었다는 피해서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국가체제 중심의 보호서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여성의 삶을 포착하는 서사로 전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형적인 서사와는 다른 여성들의 삶에서 다각적인 여성의 위치와 행위성을 읽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 국가의 여성인권이 서구 국가의 패권적 입장에서 어떻게 안보의제로 전환되고 곡해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을 내세우거나 여성인권을 명분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했던 미국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성평등이나 여성인권이 페미니스트 언어가 아니라 세계 패권을 쥐려고 하는 자들의 언어로 전유되어 오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다른 식민화라며 비평적 글을 발표하였습니다.³⁾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이 더 요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1325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시기에 여성인권이 글로벌 의제가 되지 못했으나 탈냉전 시기에 글로벌 안보 문제로 등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캐롤 해링톤(Carol Harrington)은 새로운 전쟁에 대한 서구 국가의 개입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⁴⁾ 탈냉전 이후 나타난 새로운 전쟁이란 특정한 에스닉 집단에 대한 집단적 살해와 강간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양상을 말하는데, 이를 국제적 범죄로 치안하려는 서구 국가들의 조치 안에서 여성인권은 주요한 글로벌 의제로 부상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패권주의적 담론을 동반합니다. 글로벌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국제기구와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수호하는

3) Riley, R. L., Mohanty, C. T., and Pratt, M. B., (eds.), 2008, *Feminism and war : confronting US imperialism*, London, New York : Zed Books, 2008; Hunt, Krista. 2007, "Embedded Feminism and the War on Terror". In Hunt, Krista & Rygiel, Kim (Eds.). *(En)Gendering the War on Terror*. 51-71. New York: Ashgate. 등

4) Harrington, Carol, 2011. "Resolution 1325 and Post-Cold War Feminist Politic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13(4), 557-575.

자로서의 위상을 자처합니다. 여기엔 문명화된 서구 대 여성을 억압하는 미개 발된 타자라는 식민주의 담론이 수반됩니다. 말하자면 유엔안보리 결의 1325는 여성인권과 인간안보가 결합한 시도지만, 엘리트남성 중심의 군사안보를 비평적으로 숙고하지 않는 한, 군사안보의 권력 틀에서 방랑하거나 포획되기 쉬운 함정을 배태합니다.⁵⁾ 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엘리트 정치 행위자들의 손에 맡긴 안보 구도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의 기본 틀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칫하면 비서구사회는 서구사회의 이해가 관철되는 장소로 포획되기 쉬운데, 북한 여성의 인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군사화된 국가에 관한 비평은 적실하나 한 특정한 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과 군사가 융합하여 움직이는 세계적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필 때 유엔안보리 결의 1325를 사회정의를 위해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대의 산물임을 강조합니다.

3. 젠더를 다시 소환해야하는 요증

유엔안보리결의 1325가 가지는 의의 중의 하나는 젠더 관점이 평화와 안보 아젠더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더는 부적절하거나 협소하게 배치됩니다. 젠더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혹은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다른 의미와 강조점을 갖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차이가 어떻게 차별을 생산되는가에 관한 지식이자 권력관계를 말합니다. 젠더는 남녀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는 범주로서 남녀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가를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젠더는 여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간과한 남녀의 차이나 정체성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 1325는 젠더를 여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여성 배제에 초점을 둌으로써 여성 참여를 전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가 곧 성평등으로 설정됩니다. 반면 군사주의와 접맥된 젠더권력 체제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비평적으로 녹여있지 못하고 단순한 여성참여와 보호 전략에 머물니

5) 김엘리, 2024,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여성 평화 안보 : 유엔안보리 결의 1325의 성평등 정치,” 『아시아여성연구』, 64(2), 16-17쪽.

다. 그래서 각 분야에 여성이 포함되는 정책에 머물거나 피해 여성의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귀결됩니다. 국가행동계획은 군사화된 젠더질서의 전환 보다는 여성 비율의 증가를 촉진하거나 국군이나 평화유지군에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과제를 상정합니다.

젠더가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닌 여성 참여의 차원으로 축소/오용되는 접근은 신 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의 평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특히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평이 제거된 평화 설정은 포용과 협력을 기대하는 여성 참여를 상상하며 포용과 협력을 여성 고유의 평화 능력으로서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성평등 정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적 영역 참여를 여성해방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점을 안보의 영역에서도 짚게 됩니다.

더욱이 젠더, 성평등, 피해, 인권, 공정성과 같은 용어들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는데 사용되거나 개인의 이해 관계 안에서 오용되는 요즘,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유엔안보리결의 1325는 무엇을 하는가를 세밀하게 살펴야합니다.

4. 풀뿌리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영주 발표자님의 글은 한국정부가 1325를 바탕으로 기획된 국가행동계획이 어떤 효과를 냈는가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제도의 차원에서 1325가 갖는 의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발표자님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1325가 갖는 효과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25에 관한 연구물들과 보고서들이 던지는 공통 질문은 1325가 풀뿌리 여성들에게 가닿아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의미를 생산해내는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연구는 1325의 조치들이 국가의 각 지역의 여성들의 삶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들로 지역의 강한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을 지적합니다.⁶⁾ 한국사회

6) Luna, K. C. & Whetstone, Christal, 2022, "Rethinking Women, Peace, and Security Through the Loc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 National Action Plans: A Study of Nepal and Sri Lank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92, 1-11.; Singh, Shweta, 2020, "In Between the Ulemas and Local Warlords in Afghanistan: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에서 1325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포럼 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여성의 경우와⁷⁾ 강원도의 경우입니다. 휴전선의 인접 지역이니만큼 평화와 안보, 남북한의 관계는 지역주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체감적 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⁸⁾ 일상의 삶에서 젠더를 비판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화하려는 시도로 대국민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유엔안보리결의 1325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련자조차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안보’ 말하기가 국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여전히 국가의 영역이고 군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협소하게 이야기됩니다. 시민사회에서 안보는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할 때나 쓰여집니다. 말하자면 인간안보는 군사안보에 종속되어있을 뿐 아니라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점으로 펼쳐질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들과 사회소수자, 퀴어들에게 안보는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에 관한 사회적 공론장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를 퀴어링(queering)해보자고 거듭 말합니다. 무기에 기댄 안보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두지 않고 낯설게 만들면서 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념체계의 패러다임을 페미니즘 인식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고 공동안보, 포괄적 안보 등의 개념 확산이 이루어지나 여전히 군사안보가 현실 원리로 작동하는 세계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민사회의 유엔안보리결의 1325는 사람들의 삶에 가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작업을 해야할까요?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국가가 행할 최소한의 정책으로서 외교정책의 수사와 가치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야만 할까요? 발표자님들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Everyday” Norm Translation, and UNSCR 1325”.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2(4), 504-552.

7) 여성단체들이 표명하는 여성참여는 주체적 여성의 행위, 여성과 지역의 연대,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역량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8) 신시아 인로, 김엘리 오미영 역, 2015,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는가』, 바다출판사, 236-239쪽.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토론 2

선시우화

부녀신지기금회(Awakening Foundation)
고문 겸 전임 의장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UNSCR 1325의 틀로 보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토론문

션시우화(沈秀華, Hsiu-hua Shen),
부녀신지기금회(婦女新知基金會, Awakening Foundation) 고문 겸 전임 의장,
대만 국립청화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부교수

전통적으로 무력분쟁과 전쟁은 주로 남성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서 배제되었다. 젠더 관점의 통합 없이는 남성화된 폭력의 성격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형태를 막론하고 정치적 긴장과 폭력이 초래하는 파괴, 고통, 외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젠더 관점을 경시하는 평화와 안보는 진정한 평화와 안보가 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분쟁과 전쟁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반군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주의와 여성, 그리고 무력분쟁이 맺는 관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지속하는 북한의 공격적 군사 훈련과 인권 침해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종속된 집단으로서의 북한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되고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 체계적 학대와 억압을 견뎌왔다. 정치·경제적 소외, 감시, 성폭력, 강제 군복무, 강제 송환에 노출되는 이들의 직접적 경험은 국제 안보와 외교 담론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다른 소수자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치 및 군사주의의 과정과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잘못 평가하게 될 것이다.

현인애의 논문은 특히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25호(UNSCR 1325)의 틀을 통해 여성의 신체, 노동, 재생산 능력이 북한 국가 정치의 초군사화에 포섭되는 방식과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잠재적 조치에 주목한다. 논문은 강제 징집, 모성의 정치화, 민간 영역의 군사화, 비공식 경제의 부담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여성이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으로 잘 뒷받침되는 동시에 규범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이 유엔 메커니즘, 국가행동계획(NAP), 시민사회 발의, 모니터링 시스템, 다자간 연합체를 포함하는 다층적 체계를 촉구하는 가운데 구체적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 국가행동계획의 북한 여성 권리 포함,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구체적 제안은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이다. 논문에서 제안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여성·평화·안보 과정의 연계는 기존

체계의 통일적 활용이 어떻게 정책 영향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메커니즘 간 협력의 강력한 사례를 제시한다.

결의 제1325호의 여성·평화·안보 체계, 그리고 군사화 하에서 진행되는 북한 여성의 고유하면서도 제대로 탐구되지 않은 삶의 맥락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논문은 알차고 시의 적절하다. 논문의 핵심적인 기여는 국제·시민사회 메커니즘을 통한 규범적 개입의 길을 모색하면서 국가의 준수가 부재하는 어려운 사례에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 연구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학계는 공식적 전쟁 명칭이 없는 고도로 군사화된 상황보다는 분쟁의 영향을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쟁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논문은 이러한 연구에서 눈에 띄는 공백을 메운다.

그럼에도 논문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안은 추가적인 관심과 구체화가 필요하다.

1. 교차 분석 - 여성주의 학계는 성불평등과 여성의 직접적 경험이 지닌 구조적 복잡성을 해명하기 위해 교차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에서 군사주의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 지역, 정치적 소속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경험과 필요, 관련된 정치적 역학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언과 정책 옹호활동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2. 군사주의를 넘어 구조적 젠더 정의로 - 논문은 주로 군사주의와 평화조성의 측면에서 북한 여성의 억압을 논의하지만,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여타 구조적 불평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탈군사화가 일부 젠더 폭력 형태를 완화하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못지않게 북한의 성평등을 가로막는 다층적인 구조적 장벽의 해결 역시 필요한 일이다.
3. 군사화된 여성·평화·안보 이행의 위험 -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군사·안보 논리에 전유될 경우 대체로 여성을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안보에 기여하는 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분명 북한 여성의 고통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총체적 지배에 도전하는 북한 여성의 저항과 행위성 형태를 강조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4. 여성·평화·안보의 기술관료화 -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으로부터의 여성 배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옹호활동은 지나치게 기술관료화되고, 절차적 체크리스트와 고착화된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규정준수 보고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여성·평화·안보 메커니즘이 어떻게 북한과 같이 의제와 대부분의 외부 참여를 거부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냐는 질문은 더 깊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여성주의 목표로서의 탈군사화의 어려움 - 논문은 군사주의를 북한 여성의 억압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다루며, 이는 오랫동안 이어진 여성주의적 전쟁 비판과 일치한다. 그러나 점점 더 분열과 분쟁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완전한 탈군사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는 더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군사 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여성·평화·안보 및 관련 체계를 더욱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젠더 포용적이고 소수자 포용적인 군사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또 여성주의자는 군사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가?

6. 시민사회의 역할 -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성평등 옹호활동에서 시민사회와 NGO가 지니는 중요성은 크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유엔 및 제도화된 초국경 사업은 많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필요를 간과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국가 중심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국지적·초국경적·지역적 시민사회 연합체가 강화된다면 이는 군사주의와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개입이 풍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인에 대표의 논문은 국가 저항이 고착화되고 여성 억압이 깊이 제도화된 상황에 세계적 규범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여성·평화·안보 및 북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글에 담긴 경험적 세부 사항과 정책적 타당성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또 논문은 군사주의, 여성주의, 정의, 평등, 공동체 생존, 개입이 맺는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논문은 극단적 권위주의에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용한 중요 사례연구일 뿐만 아니라 이 의제가 어떻게 가장 도전적인 정치 환경에서도 변혁적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한다.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토론 3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반도에서의 UNSCR 1325 이행 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1. 조영주 박사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가 우리나라 UNSCR 1325 국가 행동계획 2기(2018~2020)와 3기(2021~2023)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 이 떠올랐다. 발표문 중 “3. 한국 국가행동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그동안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본다. 여성단체나 평화단체 소속의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1325 국가행동계획에 고유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 여성가족부가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WPS(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에 기반한 세부계획들이라기 보다는 참가 부처들의 기존의 여성관련 정책들을 취합하여 이들을 1325 국가행동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했다는 점 등등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보다 훨씬 큰 부처들 중 국방부나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서 온 1325 국가행동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이행점검회의 참석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초소형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다수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점검회의에서 평가받고 지적받는 것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문위원들은 매번 위 내용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ME(Monitoring & Evaluation)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음 이행점검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을 하면 이에 대한 부처들의 방어적 대응이 되풀이 되어 서로 불편해 했던 이행점검회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국가행동계획 내에서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 3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참여하고 4기에서 환경부가 참여한 것은 1325 국가행동계획이 포괄하는 의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WPS 의제가 한반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또 기후위기 상황까지 포괄하는, 그럼으로써 WPS 의제의 지역성(locality)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 요소를 강화했다. 이러한 확대와 확장은 한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의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긍정적 신호라 여겨진다. (한반도적 특성 중 가장 구체적이고 오래된 이슈는 미군위안부 문제다. 그런데 이 이슈는 아직도 1325 국가행동계획에 본격적으로/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는 또 다

른 의미의 한반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출신의 수많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구호와 회복 과제는 포함되지 못하고, 대신 2기 행동계획부터 (미군기지촌 주변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이 <“보호” 분야 7. 군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7.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3. 한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WPS 예산으로 특정하여 고유의 사업으로 발전시킨 모범적 사례는 2기부터 외교부에서 진행한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Women’s Initiative for Peace) 사업이다. 나도 여성가족부 추천으로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2019~2024). 2019년 5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의 주도로 이 사업이 출범되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는 피해 받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해외 분쟁지역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기본구상으로 이니셔티브 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11월 경 제1회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국제회의’가 열려 해외 분쟁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관련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혜, 제안을 들으면서 국제사회의 이른바 ‘피해자/생존자 중심주의’(victim/survivor centered approach)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 ODA 예산 일부를 로힝야 난민촌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등 해외 분쟁지역 여성피해자/생존자들을 지원하는 구호와 회복사업을 새롭게 출범하여 우리나라의 ‘아디’ 같은 국제구호단체에 지원하거나, 세계식량기금(WFP)과 코이카(KOICA)의 사업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 자문위원들이 로힝야 난민촌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할 점을 자문회의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사업은 외교부의 WPS 의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1325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하는 다른 부처들도 각기 특성에 맞는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하기 바란다.
4. 토론자가 활동하고 있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대한민국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50여개가 넘는 여성단체들과 ‘1325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회와 정부에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4년 한국정부가 1325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결정한 후, 여성시민사회는 1기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제출하기도 했

다.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성시민사회는 이행점검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해 왔다. 국가행동계획 뿐 아니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여성시민사회는 WPS 의제의 지역화 혹은 지역행동계획(reg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여성단체들은 남북분단의 접경지로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고, 도내에 산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1325 경기여성행동강령’을 제안하는 동시에 미군위안부(기지촌여성) 보호와 지원, 그리고 동두천 미군위안부 성병검역소를 기억의 공간으로 보전하려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수년째 하고 있다. 광주직할시의 여성들은 ‘민주주의와 인권도시 광주’의 특징을 반영하는 광주형 1325 지역행동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였다. 제주도 여성들 역시 평화의 섬인 동시에 날로 군사화로 나아가는 제주도의 역사와 현재적 경험을 WPS 의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여성시민사회의 적극성과 주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행동계획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참여 부처들의 업무가 되면서, WPS 의제 혹은 1325 국가행동계획은 ‘관료화’된 혹은 ‘관료주의’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된 현실이기도 하다. WPS 의제가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좀 더 구조화되어 유기적이고 내실 있게 또 지속가능한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6.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는 역대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안해 왔다. 일례로, (가칭) “여성·평화·안보 정책”(Policy on Women, Peace and Security of ROK)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가칭) ‘여성·평화·안보법(Act on WPS) 제정하며, WPS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정책 수립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개정 : 효과적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거버넌스 제도화 :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방향 수립
 -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설치를 통한 관련 정책 조정

※참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 제안』, (2015. 1. 2.), 143쪽.

7.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여, 국정기획위원회가 2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평화여성회와 여성단체연합은 1325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여성들의 인간안보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 세션 1.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5주년을 돌아보다 : 한반도 평화와 여성

토론 4

다케노부 미에코
저널리스트 겸 와코대학 명예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찬탈당한 ‘여성의 참가’ -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1325호와 일본

다케노부 미에코 (저널리스트 겸 와코대학 명예교수)

국제연합안보리 결의1325호는, 일본의 여성운동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도1325 결의에 기초한 ‘WPS(여성, 평화, 안전보장) 의제’에 대해, 정부가 국가실행계획(NAP)을 제정할 때 여성들에 의한 젠더 평등 시점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과 관련된 제안의 대부분은 최후 단계에서 큰 폭으로 삭제되거나, 대외적인 어필이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여성 동원 촉진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 이 원고는 NAP 제정 과정에서 젠더 평등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모토야마 히사코(현 아시아 여성 자료 센터 대표이사), 가메나가 노부코(안보법제위헌소송 여성회 멤버)의 논고에 기초하여, 일본의 특이한 NAP 제정 경위를 소개하고,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3년 늦은, 갑작스러운 NAP제정

1325 결의는, 1995년 제4회 세계여성회의(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영역에서 젠더 주류화’를 배경으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이나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일반시민들이 희생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여성이 평화교섭이나 평화유지활동의 의사결정 시 배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2000년 결의되었다.

일본의 NAP 제정은, 이 결의로부터13년이나 지난2013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 2012년12월 등장한 아베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을 내걸었고, ‘여성이 빛나는 사회 만들기’, ‘여성 활약’은 정책의 주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2013년3월 국제연합 제57회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일본정부대표가 느닷없이 ‘일본판 NAP’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같은 해2월 아베 총리의 개인자문기구인 안전보장간담회 제1회 모임이 개최되어, 일본헌법에서 규정된 ‘전쟁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전후 일본의 기초

를 근본부터 뒤집는 ‘안보법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성과 평화’와 관련된 NAP와 ‘전쟁할 수 없는 국가’의 정책 전환이라는 얼핏 보면 모순되는 두 사안은 그 이후의 진행 양상에 따라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 찬탈’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갑자기 등장한 ‘일본판 NAP’는 ‘정부 전체가 추진하였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채 외무성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래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외무성의 껍데기뿐인 NAP가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한 여성들이, 2013년 8월 아베 총리와 외무대신 앞으로 NAP 제정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가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같은 해 10월, 17개의 단체가 참가한 ‘1325 NAP 시민연락회’가 발족하고, 외무성과의 협조 시스템이 탄생하였다. 모토야마는 연합회 코디네이터로 취임하였고, 가메나가도 ‘공인에 의한 성차별을 없애는 모임’ 멤버로서 참가하였다.

가메나가에 따르면, 시민연락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헌법 9조에 대해 서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할 것. 다른 ‘선진국’의 NAP는 해외지원책이 그 중심이지만, 일본의 NAP는 안전보장정책상 국내과제인 여성의 의사결정기관 참가, 젠더 평등, 젠더 폭력 방지책, 오키나와 기지문제를 비롯한 주일외국군의 성폭력 방지,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구축과 전쟁예방, 난민보호 등을 명확히 할 것.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의 경험을 살려 무력분쟁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포함시킬 것. 여성과 여성아동 뿐만 아니라 난민과 국내 피난민, 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와 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여성세대주 세대, LGBT 등, 취약성이 높은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할 것. 조사연구와 모니터링 시, 시민사회와 NGO가 주체가 된 활동의 보장을 명기할 것.

외무성과 시민연락회가 합의한 ‘최종안’에 ‘위안부’ 문제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주일외국군의 성폭력이나 헤이트 스피치 대책 등 국내과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시민연락회의 주장이 어렵게나마 반영되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아베 수상이 발표한 ‘일본판 NAP’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최종안’에 있었던 ‘젠더’라는 용어도 ‘젠더 평등’이 ‘남녀 평등’, ‘젠더 시점’이 ‘여성의 시점’으로 바뀌었다. ‘젠더’라는 용어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을 상실시킨다.’는 이유로 우파정치인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라는 문장이 ‘전문가(시민사회 및 NGO 대표를 포함한)’로 바뀌어, 여성단체 참가 보장이 희박해지도록 수정되었다.

가메나가는 이를 ‘날조’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여성, 평화, 안전보장’ 분야에서 젠더 평등을 위한 노력을 개악’, ‘여성 활약이라는 미명 하에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원을 찬탈’ 이것이 내가 경험한 1325 NAP의 제정 과정이었다” (2019년9월29일 ‘안보법제 위헌소송 진술서’)

● 확대되는 여성의 군사력화

이러한 ‘일본판 NAP’ 하에서 ‘자위대’ 여성 활용이 진행되었다. 모토야마에 따르면, 2014년5월 아베 총리가 NATO본부를 방문하여, 일-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을 체결하였다. WPS는 우선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자위대 여성직원의 NATO 본부 파견도 시작되었다. 2022년에는 개정된 방위3문서가 각료회의에서 결의되어,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여성’도 포함되었다. 2024년 판 ‘방위백서’에는1325 결의가 인용되어 ‘여성 채용, 등용 확대 등 인적기반 강화’의 일환으로2030년까지 전 자위관 중 여성의 비율을12%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일본 사회에서의1325 결의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보장 등 여성에게 절실한 항목은 대부분 삭제되고, 노동력 감소 속에서 여성의 군사력화로 바뀌쳐기되어 ‘일본판 NAP’가 ‘찬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를 널리 공유하고, 1325 결의를 본래 취지대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현재 요구되고 있다.

세션 2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발표 1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메시지 연구

염승우
유타대학교 박사과정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전략과 메시지 연구: 북한 두 트위터 (현 엑스) 계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염승우 (University of Utah)

박은아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목 차

- I. 서론
- II.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
- III. 북한 트위터 데이터와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와 함의
- V. 연구 요약 및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북한 두 트위터 계정(현 엑스)을 분석함으로써 뉴미디어를 활용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선전 전략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트위터 계정에 포스팅된 게시물 중 541개의 텍스트와 해시태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 두 트위터 계정에서 “사람, 감정, 국가행사와 명절, 문화” 등 주제를 도출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북한이 정상적이고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보장된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롭고 다채로우면서 동시에 이념적으로 안정적인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두 트위터 계정에서 “DPRK”와 “North Korea”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일적이며 통합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트위터를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제하는 북한 체제를 대외적으로 정당

화하는 선전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튜브 중심의 기존연구를 보완 및 보충함으로써 향후 북한 당국의 뉴미디어 활용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북한, 대외선전, 뉴미디어, 비연동 채널, 트위터, 엑스, 주제 분석**

I.서론

2012년 출범이래 김정은 정권은 북한식 “지식경제강국”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과학, 지식, 정보”를 모든 산업과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해왔다(임을출 2019). 이에 따라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 북한 당국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아젠다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망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Song 2013). 즉 웹 2.0 시대에 맞는 한국 정부가 차단하기 힘든 페이스북, 트위터 (현재 엑스),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 폐쇄성이 높은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은 뉴미디어에 집중하는 양상은 오히려 정보화를 활용함으로써 김정은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일종의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현상으로 (김용호 2021)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북한 당국이 대외선전 도구로 뉴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밝혀진 바이다. 이 연구들은 북한 대외선전 웹사이트(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 등)와 연동된 소셜미디어 채널(핀터레스트, 플리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북한 당국이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즉 북한의 비연동¹⁾ 소셜미디어 채

1) 여기서 연동 계정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관리 및 운영 웹사이트에 연계된 뉴미디어 채널로 규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동계정으로 북한의 대외선전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 과 “우리민족끼리” 와 연동된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트위터가 있다. 반면, 비연동 계정이란 북한 당국의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무관하게 운영되지만 콘텐츠 내용과 포스팅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뉴미디어 채널들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비공식 유튜브 채널로 확인된 “ NEW DPRK, Sally Parks (송아 SongA Channel), Olivia Natasha-Yumi Space DPRK daily”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은 이지순 외 (2024, pp.84-86)를 참고하였다.

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관련된 연구들도 대부분 비연동 유튜브 채널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두 트위터 계정(Olivia Natasha @YuMi_DPRK_daily; Paramasivam @Parama_Coreafan)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연동 채널 중 하나인 트위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金正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를 보완 및 보충한다.

물론 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다고 해서 모두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북한 정권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한 해당 채널의 공식성과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두 트위터 계정은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NK New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두 트위터 계정은 북한의 미디어 회사인 서광(Sogwang)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둘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체제와 지도자 선전”을 주요 콘텐츠 내용으로 삼고 일관적이며 주기적으로 포스팅하는 채널을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³⁾ 본 연구의 두 계정 또한 북한 사회의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측면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주기적으로 게시하였다. 따라서 이들 계정은 북한 당국에서 관리하는 계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트위터 계정은 개인의 시점에서 북한 내부의 일상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수 게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서사를 활용한 비연동 북한 유튜브 채널들의 대외선전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여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북한 내부의 개인들이 정부 당국과 무관하게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터에 자신의 일상과 주변 풍경을 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트위터 계정은 북한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로 위장하여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비공식 대외선전 채널로 볼 수 있다.

2) “North Korean propaganda sites targeting South go dark in simultaneous outage,” 『NK News』, 2024년 1월11일., <<https://www.nknews.org/2024/01/north-korean-propaganda-sites-targeting-south-go-dark-in-simultaneous-outage/>> (접속일: 2024년 2월2일).

3) 대표적으로 하승희는 “특정 콘텐츠 형식과 내용을 유지(체제선전 및 지도자 찬양으로 귀결), 포맷의 일관성, 주기적 업로드 등을 기준으로 북한이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승희, “북한의 유튜브 대외선전매체 활용 양상,” (2022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이지순 외 2024, p. 85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대외선전을 펼쳐왔으므로 향후 비연동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체제선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두 트위터 계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의 비연동 채널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는 동시에 북한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 II장에서 정보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과 뉴미디어 활용방식을 살펴본다. III장에서 주제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IV장에서 주제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서술한 후, 두 트위터 계정 간의 차이점과 공통된 의미를 분석한다. V장에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 및 논의 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II.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

1. 정보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

정보 통신 기술(ICTs)의 발전은 단순히 정보 교류의 확대를 넘어 경제적 성장에 필수 요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확산은 권위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정치적 딜레마를 가져온다. 이는 인터넷 딜레마(Internet dilemma)라고도 불리며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에 해당된다(Ko et.al. 2009). 즉 독재자들은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없으며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Kedzie 1997; 박성호 외 2021).

과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권위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로의 이행을 가능케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더욱 강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관점 있는데, 하나는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도구론(technological instrumentalism)이다(Ko et.al 2009).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

능케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사례로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들 수 있으며, 붕괴의 원인으로 구소련이 당시 정보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술결정론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은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기술결정론의 가정과 달리 다수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오히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2024년 6월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약 11억 명에 달하며 인터넷 보급률은 78%에 도달했다(난방신문망 2024)⁴⁾. 하지만 중국정부는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무조건 통제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 등 실제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는 발언과 의견들만 선별해서 차단해왔다(김용호 2018). 이처럼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통치방식을 취하며, 이는 기술도구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기술도구론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채널은 권위주의 정권에게 경제와 정치 영역을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기획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즉 정보 통신 기술 자체가 민주화의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닌 매개변수가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인 힘, 인터넷 검열과 통제 수준에 따라 정보 통신 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력은 변화한다. 따라서 기술도구론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보 통신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터넷 딜레마 또는 독재자 딜레마와 같은 체제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할수 있다고 예측한다(Ko et.al 2009).

종합하면, 정보 기술 발달이 반드시 권위주의 체제에 위협적인 것도 아니며 민주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가 정보 기술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기술 발전수준을 파악하고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과 체제유지에 뉴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빅데이터의 역설” 현상(김용호 2018)처럼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더

4) 웹사이트: <https://baijiahao.baidu.com/s?id=1808694842199637224&wfr=spider&for=pc> (접속일: 2024년 10월31일)

욱 강화된 정보 기술력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선전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체제 공고화에 정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 김정은 정권의 대외선전 양상

북한 당국은 웹2.0 시대가 도래하자 비교적 빠르게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였으며 대외선전의 장을 소셜미디어로 확장하였다(이지순 외 2024).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 또한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체제 발전과 홍보에 활용해 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민족끼리’의 경우, 2010년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공식 문건에서 대외선전이 언급된 것은 2014년이다(이지순 외 2024). 김정은은 “선전선동의 사상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고 “단수높은 대적언론전, 전파전”을 주장하며 “인터넷망을 우리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⁵⁾ 이와 같은 대외선전 수단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것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 미디어 환경 변화를 김정은 정권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지순 외 2024).

또 다른 변화는 2019년 3월에 개최된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서한에서 “기존의 선전 방식이 구태의연 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의 위대성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나친 미화가 불러온 부작용도 지적했다.⁶⁾ 이와 같이 “선전선동 활동을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전개하라”는 김정은의 요구는 과도한 수령 우상화는 지양하되 진실성 높은 내용과 방법으로 현실적인 선전선동 방식을 고안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이지순 외 2024).

종합해보면,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국내 유입을 경계하면서도 변화

5)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2.26. (이지순 외 2024에서 재인용)

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제2차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참가자들 에게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9.3.9. (이지순 외 2024에서 재인용)

된 정보환경에 맞추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외선전에 활용하려는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기술결정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이 자신의 체제 안정을 위협한다고 인식하여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도구론의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대규모의 '정보원천지'로 보고, 특히 전파력과 확산성이 높아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SNS의 장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변화된 맥락에서 북한 정권은 유튜브 채널 개설을 비롯하여 트위터 등 다양한 뉴미디어 공간에서 자신들의 대외선전 메시지를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방식

1) 연동 채널의 특징

북한 당국의 뉴미디어 활용방식을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공개적으로 연동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그렇지 않은 비연동 채널로 구분지어 논할 수 있다. 먼저 공식 연동 채널의 경우, 2016년을 전후하여 북한 당국은 글로벌 뉴미디어 플랫폼인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여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연동하여 운영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선전 웹사이트 중에서도 '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가 공통적으로 트위터, 플리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4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했는데, 트위터를 제외한 여타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정치-의례였다.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한 주제는 군사-시험·훈련 (조선의 오늘의 연동 채널), 경제-상품과 사회문화-상징(우리민족끼리의 연동 채널)로 나타났다(이지순외 2024). 반면, 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에 연동된 트위터 중 최다 빈도로 게시된 주제는 사회문화-경관이었다(2023년 기준). 이는 관광, 문화체육시설, 자연풍경, 북한주민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내부 발전된 모습을 강조하고 역사, 문화, 자연풍경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순 외 2024).

이와 같이 북한의 발전된 모습을 부각하는 내용은 북한 유튜브 채널 '조선

의 오늘’에서도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은 기존의 체제선전 중심의 일방적인 뉴스에서 시장경제중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여 대외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홍보하였다(박한우 2018). 예를 들어, 해외관광객 유치와 상품판매에 도움이 되는 상품광고, 공장과 전시회 소개, 주요 영행지를 담은 동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북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순히 리더를 신격화하는 전통적인 정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상국가(normal state)로의 이미지 메이킹과 자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연동 유튜브 채널의 특징

다음으로 북한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비연동 소셜미디어 채널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은 북한 유튜브 활용방식에 대해 가장 많이 분석하였다. 앞서 서술한 연동 채널들의 경우 플랫폼에 따라 강조되는 주제는 달랐지만 결국 북한 당국이 주체가 되어 대외선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비연동 유튜브 채널 특징은 북한 내부의 개인과 주민을 전면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 비연동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Sally Parks는 ‘송아’라고 불리는 어린이를 채널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친구들과 함께 “빙수 먹기, 문수물놀이장 물놀이, 모란봉에서의 산책”⁷⁾하는 등 다양한 일상적인 모습을 개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비연동 유튜브 채널은 북한 경제발전,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 풍경을 매우 생동감 있게 소개하면서 북한의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비연동 채널은 연동 채널과 다르게 국가가 아닌 개별 인물들을 전면으로 등장시키면서 지도자 우상화와 체제선전과 같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내용을 축소시킴으로써 보편국가로서의 대외적 인식전환을 비연동 채널을 통해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연동 북한 뉴미디어 콘텐츠들은 브이로그와 같은 개인서사가 강한 전달방식을 선택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하승희 2020).

7) 이지순 외 2024, pp.92-93.

3) 비연동 트위터 채널의 특징

비연동 유튜브 채널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당국은 트위터 상에서 정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감추고 개인이 관리하는 듯하게 보이는 계정들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게시물도 개인 콘텐츠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선전활동을 펼쳤다. 정치 행사, 자연 풍경, 문화유산 등 비정치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김정은과 관련된 리더십 이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사회의 평범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다.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국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홍보하고, 중국 및 기타 우호국을 겨냥한 선전 메시지도 전하였다(이지순 외 2024).

그러나 북한 트위터 계정들은 규정 위반으로 트위터 상에서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삭제되었다. 이는 북한 트위터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트위터 상에서 대외선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고⁸⁾, 특히 당국의 선전매체와 연동되지 않는 비연동 채널이나 대체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본 연구의 두 트위터 계정도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비연동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두 트위터 계정은 각각 2022년 1월과 2022년 6월에 개설되었다.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이 두 계정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채널로 인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NK New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트위터 계정은 북한의 미디어 회사인 서광(Sogwang)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광의 CEO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결혼한 사이로 이 회사는 조선중앙통신(KCNA)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트위터 계정은 2024년 1월11일부터 트위터 상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⁹⁾.

트위터가 자체적으로 이들 계정을 삭제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오히려 북한 당국 자체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2023년 12

8) “북, 트위터 계정 삭제에도 새 유사계정 통해 선전활동,”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8월31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twitternk-08312020154342.html> (검색일: 2024년 12월 18일)

9) “North Korean propaganda sites targeting South go dark in simultaneous outage,” 『NK News』, 2024년 1월 11일., <<https://www.nknews.org/2024/01/north-korean-propaganda-sites-targeting-south-go-dark-in-simultaneous-outage/>> (접속일: 2024년 2월 2일)

월 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다루는 조직의 해체와 재편을 지시했고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¹⁰⁾. 이를 계기로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선전하던 주요 웹사이트들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민족끼리', 'DPRK Today', '아리랑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 '려명' 등 웹사이트들이 접속 불가능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소셜미디어 선전 채널 폐쇄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DPRK Today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리랑 메아리의 트위터 계정, 그리고 서광 미디어가 운영하는 New DPRK의 중국 웨이보(Weibo) 및 비리비리(Bilibili)계정도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비활성화된 상태이다¹¹⁾. 따라서 본 연구의 두 트위터 계정이 삭제된 배경을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대남 정책변화에 따른 선전전략 개편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²⁾

10) “김정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통일 가능성 없다',” 『BBC News 코리아』, 2023년 12월31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nyjy7l859o>> (접속일: 2024년 12월18일).

11) “North Korean propaganda sites targeting South go dark in simultaneous outage,” 『NK News』, 2024년 1월11일., <<https://www.nknews.org/2024/01/north-korean-propaganda-sites-targeting-south-go-dark-in-simultaneous-outage/>> (접속일: 2024년 2월2일)

12) 본 연구의 데이터는 북한 당국이 두 계정을 삭제하기 전인 2023년 12월 말에 연구자들에 의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추출 및 수집되었다. 웹스크래핑 방식은 크롬 익스텐션인 트위터 스프래퍼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방식은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을 스크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적으로 트위터 (현 엑스) 상에서 데이터를 추출(extraction) 수집하는 방식은 총 세 가지가 있다(Dongo 2020). 첫째는 트위터 API를 사용하여 대량의 트윗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웹스크래핑 (web scraping) 방식이며 웹 로봇 또는 스크립트가 인간 사용자와 웹서버 사이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웹 페이지 상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은 인간 사용자가 직접 수동적으로 트위터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트위터 API와 웹스크래핑 방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 API의 경우 데이터 수집량과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웹스크래핑은 대부분은 무료이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트위터 API는 정해진 기간동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웹스트래핑은 데이터 수집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웹서버의 상태에 따라 데이터의 양과 질이 차이가 크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데이터 신뢰도를 측정해보면, 안정적인 웹서버를 활용할 경우 웹스크래핑 방식과 트위터 API가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Dongo 2020).

Ⅲ. 북한 트위터 데이터와 분석 방법

1. 북한 트위터 계정



<그림 1> 두 트위터 계정 요약 사진

위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북한의 두 트위터 계정을 요약한 사진 정보이다. PDF 파일로 다운받은 두 계정에 대한 요약에 따르면, Olivia Natasha (@YuMi-DPRK_daily)의 경우 총 4,475명의 팔로우와 364명의 친구를 보유하고, 총 378개의 트윗을 게시하였다. Paramasivam (@Parama_Coreafan)의 경우 총 8,052 팔로우와 205명의 친구, 그리고 총 1,495개의 트윗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연구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은 541개 텍스트와 1,510개 이미지다. 비연동 채널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적은 수치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트위터 계정 중 하나인 Olivia Natasha와 동일한 이름으로 활동했던 유튜브 채널(Olivia Natasha-Yumi Sapace DPRK Daily)의 콘텐츠 수는 19개에 불과하다(이지순 외 2024).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 양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방법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북한의 두 트위터 계정을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은 1970년대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 브라운과 크라크 (Braun & Clarke 2006)에 의해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정립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장안리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를 해체하고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제분석 방법론은 이와 같은 데이터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의미 해석도 용이하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질적자료 분석 소프트웨어(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인 NVivo 14 버전을 사용하였다. NVivo는 비구조화 된 모든 형태의 데이터, 예를 들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사진), 비디오, 스프레드시트, 온라인 설문지, 소셜미디어 등의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이다(NVivo 홈페이지 2024)¹³⁾. NVivo는 온라인 작업 공간에서 각 연구자가 생성한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를 NVivo 노드로 만든 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화가 용이하고 연구하는 대상의 의미구조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Bergin 2011).

데이터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 두 연구자는 두 트위터 계정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두 트위터 계정 텍스트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트윗의 내용과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이미지 파일을 찾아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읽었다. 예를 들어, 트윗 내용에 “영예군인과 결혼하고 고아를 키우며 참전군인을 돌보는 북한 여성들”(영어원문:witness women getting married to disabled soldiers, bringing up orphans and taking care of war veterans in the DPRK)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 내용과 매칭되는 이미지(아래 사진)를 찾아 문자와 시각 자료를 동시에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사진 출처: 북한 트위터 계정_ Olivia Natasha
(@YuMi-DPRK_daily)(게시일:2023년 12월21일)

13) Nvivo 홈페이지 주소: <https://lumivero.com/products/nvivo/> (접속일: 2024년 7월28일)

그러나 어떤 트윗은 텍스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미지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럴 경우 연구자들은 텍스트 내용으로만 해당 데이터를 읽고 노트 작성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두 연구자는 각각 트위터 계정 하나씩 선택하여 NVivo를 활용하여 코딩작업을 진행했다. 우선적으로 초기 코딩 (initial coding) 또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방 코딩 (open coding) 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트윗을 한 줄씩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노드(node)를 만들었다. 초기 만들어진 노드(node)는 트위터의 원자료(raw data)를 해체하는 것이며, 각각의 트윗에서 드러나는 중심 주제를 서술형 형식으로 다시 코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코드는 단순히 키워드가 아닌 수 개의 단어로 구성된 구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일 키워드만으로는 해당 트윗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키워드 뿐 아니라 이를 설명하고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 등을 모두 포함한 구절 단위로 코딩했다. 마찬가지로 해시태그의 경우 먼저 개별 해시태그를 노드(node)로 만든 후 “해시태그”라는 코드 안에 모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해시태그는 트윗 내용을 확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외부세계에 확산 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담겨있다. 따라서 모든 해시태그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각 해시태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북한 정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각 연구자는 흩어진 초기 코드들을 주제화하고 초기 주제도(intitial thematic map)를 작성했다. 브라운과 크라크가 제시했듯이 연구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을 자세히 적극적으로 읽었으며 코드와 코드 사이에 드러나는 유사점과 중첩점을 찾으며 중심주제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내포한 코드들의 내용과 의미를 포괄하고 통합하는 명칭으로 구축해갔다. 네 번째 단계에서 우선 두 연구자는 트위터 계정을 바꿔서 초기 코드와 구축된 주제들을 교차적으로 검토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1) 각 연구자가 만든 초기 코드들이 해당 트위터의 원자료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가? 2) 추가 하거나 빼야 할 코드가 있는가? 3) 구축된 주제들이 코드와 코드 사이 패턴과 내용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 4) 주제의 명칭들은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코딩결과를 검토했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시

수 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갔다. 상향식 (bottom-up)방식으로 개개의 코드를 검토한 후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고 모든 코드가 구축된 주제로 수렴되고 연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면 검토를 종료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 간, 즉 코더 간의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동시에 4단계에서 각 주제들을 정제(refine)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일부 주제가 실제로는 데이터 전체에 중요하지 않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주제를 설명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데이터가 너무 다양할 경우 다른 주제들과 합쳐져 더 큰 주제를 만들 수 있다. 브라운과 크라크는 두 레벨을 거쳐 주제를 검토한다고 말한다. 레벨 1에서는 코드화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각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읽은 후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만약 이미 구축된 주제들이 일관된 패턴을 형성한다고 판단되면, 레벨 2로 넘어간다. 레벨 2에서는 전체 데이터 대상으로 개별 주제가 전체 데이터와 관련하여 유의한지 살펴보고 전체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5단계는 데이터 전체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의미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주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다루거나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각 주제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각 주제가 데이터를 통해 어떤 측면을 포착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주제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주제도(final thematic map)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 연구 결과와 의미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IV. 북한 트위터 데이터 분석 결과

1. 두 트위터 계정 대외선전 특징과 성격

북한 두 트위터 계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술하기 전에 이들 특징과 성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콘텐츠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의 경우 Yumi 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 여성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북한의 일상과 문화를 개인의 시각에서 소개한다. 이는 기존의 체제선전

중심, 지도자 찬양 중심이었던 북한의 대외선전 내용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아래 <그림 3>처럼 Olivia Natasha의 주인공 Yumi(좌측 사진 속 여성)는 북한 내부, 특히 평양의 곳곳을 다니며 북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스팅했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에서 취미를 즐기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는 모습, 자유롭게 쇼핑하는 모습 등이 있다.



<그림 3>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에 포스팅된 일부 사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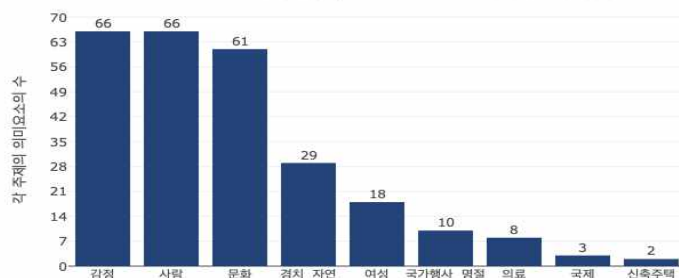
이와 같이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의 Yumi가 본인의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는 방식은 기존 비연동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준 브이로그 형식과 유사하다. 이런 비정치적 일상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북한을 보다 친숙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의 경우 특정 개인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 사람들(일반주민, 어린이, 군인, 지도자 등)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국가행사와 명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트위터 계정은 북한 사람들이 문화행사, 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국가행사와 회의에 참석했던 사진들도 몇 차례 걸쳐 포스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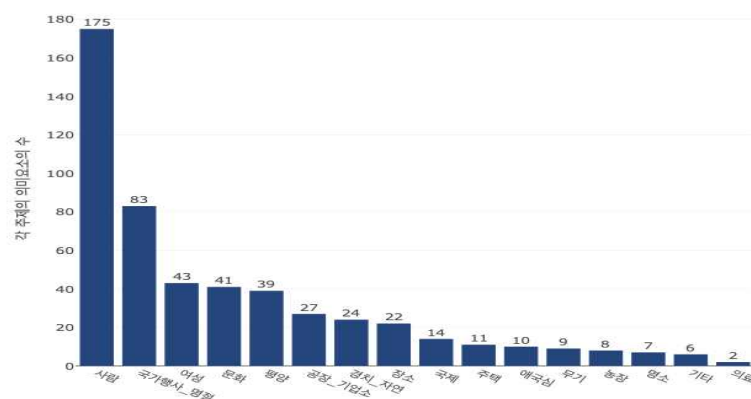


<그림 4>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에 포스팅된 일부 사진들

이 계정의 특징은 계정 주인의 사적인 게시물보다는 국가행사, 명절, 박람회와 같은 국가적인 이슈를 강조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로그 형식¹⁴⁾을 벗어나 정보전달 목적으로 이 트위터 계정이 사용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개인화된 화자인 “나(I)”를 주어로 트윗 글을 작성했던 Olivia Natasha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북한주민들 일상적인 모습과 더불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강조는 북한정권이 외부세계에 체제 안정된 모습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의 채널은 개인 계정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꾸려가고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트위터 계정 paramasivam은 국가적 이슈를 더 강조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두 트위터 계정의 특징을 기반으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전체 중심 주제는 <그림 5> 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의 주제 코딩 결과



<그림 6>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의 주제 코딩 결과

14) 트위터는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micro-blogging platform)으로 간주한다(Auxier & Anderson, 2021). 여기서 블로그(blog)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해 운영되며, 개인적인 시각에서 구성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먼저 <그림 5>는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의 게시물 전체에 대한 주제 코딩 결과를 보여준다. 초기 코딩과 주제 구축하기 과정을 거쳐 총 9개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등장하는 주제는 “감정”과 “사람”이며 각각 66개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는 “문화”이며 총 61개의 의미요소를 가진다. 그 이후로 “경치_자연,” “여성,” “국가행사_명절” 등의 주제 순으로 나열되었으며 이들은 열 개 이상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열 개 이하의 의미요소를 가진 주제로는 “의료,” “국제,” “건축 주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6>는 트위터 계정_paramasivam 게시물 전체에 대한 주제 코딩 결과를 보여준다. 트위터 계정_paramasivam 의 경우 초기 코딩과 주제 구축하기 과정을 거쳐 총 16개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등장하는 주제는 “사람”이며 이는 총 175개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국가행사_명절”이며 83개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3위와 4위를 차지한 주제는 “여성”과 “문화”이며, 각각 43개와 41개의 의미요소를 가진다. 그 뒤로 “평양, 공장_기업소, 경치_자연, 장소, 국제, 주택, 애국심” 등 주제들이 10개 이상의 의미요소를 가지고, 나머지 “무기, 농장, 명소, 기타, 의료” 등 주제들은 10개 이하의 의미요소를 가진다. 본 연구는 각 트위터 계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세 개 주제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 및 분석하였다. 다음 절에서 트위터 계정 _Olivia Natasha “감정, 사람, 문화, 경치_자연” 주제들을 중심으로, 트위터 계정 _paramasivam “사람, 국가행사_명절, 여성, 문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트위터 계정_ Olivia Natasha 주제별 설명

1) “감정” 주제

“감정” 카테고리는 사람들 기분과 표정을 묘사하는 형용사 (예: happily, enjoy), 사물과 경치를 설명하는 문구들 (예: great river, bright colors), 음식에 대한 표현 (예: cool drinks, tasty) 등 청자와 독자들의 감성

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감정” 주제로 분류된 게시물들은 주로 시각과 미각과 연관된 표현들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정”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세 개 단어는 “beautiful, scenery, feel”이다. “Beautiful”은 평양 거리 모습과 북한 자연풍경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한다. “Scenery”는 북한의 계절변화를 알리고 특히 마식령 스키장 등 관광지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다. “Feel”은 단어는 “Scenery”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 계절변화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고 특히 계절 변화로 느끼는 사람들의 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사람” 주제

“사람” 카테고리는 북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인물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이 포함된다. 코딩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해당 게시물 내용이 사람/인물 소개인지 아니면 사물/풍경 소개가 중심인지 구분하였다. 사람과 사물이 모두 언급된 게시물 중에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해당 게시물을 “사람” 주제로 코딩했다. 결과적으로 “사람” 주제는 “일반인”(42개 게시물), “어린이_학생”(17개 게시물), “지도자”(7개 게시물) 등 총 세 개 하부 주제로 구성됐다. “사람” 주제의 하부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일반인”은 대부분 평양 시민들이다.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의 소유자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평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대동강 강변이나 공원에 모여 휴일을 보내며 웃는 모습, 또는 미림승마장과 개선청년공원과 같은 관광명소에서 취미생활과 휴식을 즐기는 모습 등이 있다. 이는 북한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사람” 주제 중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하부주제는 “어린이_학생”이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내용과 어린 학생들이 가야금, 수영과 같은 취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 전체지역이 아닌 평양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 모습들만 조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하부주제는 북한 “지도자”다. 게시물 수는 총 7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지도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목적 보다는 지도자와 관련된 기념일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4

월15일과 2월16일), 김정일 사망일(12월20일)에 이들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업적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전선물의 성격을 띠지 않고 오히려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추모 소식만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트위터 계정이 지도자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일상생활과 평화로운 내부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3) “문화” 주제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음식, 스포츠, 예술, 역사, 음악”등 다양한 하부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 주제에 포함된 게시물들은 북한 내부 특정 인물이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사회, 전통, 생활 방식 등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음식”은 가장 많이 언급된 하부 주제인데 북한식 요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식료품 공장 또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식량을 소개한다. 그리고 요리대회 (쿠킹 페스티벌)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하부주제는 “스포츠”이다. 평양시민들이 수영하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과 체육인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주를 이룬다. 또한 2023년 9월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한선수들을 응원하는 짧은 게시물도 있다. 세 번째 하부 주제는 “예술”이며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있는 예술과 전통을 소개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제는 “역사”와 “음악”이며 게시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3. 트위터 계정_paramasivam 주제별 설명

1) “사람” 주제

“사람”주제는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다. 하부 주제로는 “일반인, 어린이_학생, 지도자, 정치인, 군인” 등 총 다섯 개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했듯 연구자들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소개하는 트위터 게시물이더라도 전체 내용이 사람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해당 게시물을 “사람” 주제로 코딩했다. 이 주제에서는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와 달리 “정치인, 군인” 소개가 더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각 하부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은 총 67개의 의미요소가 있다. “일반인”은 공식인 간부

직을 수행하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평양시민, 도시 공민, 농촌 일꾼 등 평범한 북한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일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던지, 북한 사람들이 국기와 국가 등 국가 상징물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름, 지역, 성별을 소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북한사람”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종종 구체적인 이름과 성별을 밝히는 게시물도 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인 김금실 이라는 여성이 평양산원에서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게시물이 이에 속한다. 이렇듯 “일반사람”이라는 하부주제는 대단한 국가적인 이벤트와 특정인의 공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어린이_학생” 하부 주제는 총 60개 의미요소가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소개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음식을 먹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도 있지만, 특히 유치원생들이 우유와 간식을 공급받아 먹는 모습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작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다수이다. 이는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공급을 잘 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하부주제는 “지도자”이며 총 24개 의미요소를 가진다. 여기서 “지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며 그의 공개 활동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피해를 지역을 방문했다던지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는 게시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트위터 계정_ Olivia Natasha에서 소개하는 “지도자” 주제와 매우 다른 지점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트위터 계정_ Olivia Natasha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게시물 수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7개 의미요소)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에 대한 소개도 거의 없었다. 반면 트위터 계정_paramasivam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활동을 대대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계정(paramasivam)은 북한주민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리더십에 대한 정보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하부 주제는 “정치인”이며, 15개 의미요소가 있다. “정치인”은 북한 내각 정치인들과 당일꾼들의 공식적인 행보에 대한 소개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덕훈 내각 총리가 김책제철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최선희 외무상이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만났다는 내용이다. 트위터

특성상 정치인 활동을 길게 소개하지는 않고 대내와 대외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부 주제인 “군인”은 9개 의미요소를 가지며 다른 주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북한 군인들의 헌신, 북한주민들과 군인들 간의 유대감, 북한 군대의 힘과 위력을 홍보하는 게시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2) “국가행사_명절” 주제

“국가행사_명절” 주제는 총 83개 의미요소를 가지며 북한의 기념일과 공식적인 국가행사를 소개하는 게시물들이다.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에서 “국가행사_명절”에 관한 코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형식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세 개 단어는 “Pyongyang, Exhibition, Anniversary”이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양(Pyongyang)이다. 이는 북한의 수도이기도 하고 국가 및 명절 행사가 평양에서 주로 개최됐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든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서 승전 70주년을 기념했다는 게시물이 있다. 다음으로 박람회(Exhibition)는 전국 해산물 박람회, 경공업 상품 박람회 등이 이 주제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박람회는 평양에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기념일(Anniversary)은 북한의 공적 국가기념일과 연관 있다. 예를 들어 김책공대 설립 75주년을 알리는 게시물과 조선노동당 창립 91주년을 축하하는 게시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여성” 주제

“여성” 주제는 총 43개 의미요소를 가진다.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에서 “여성”에 관한 코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형식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세 개 단어는 “women, mother, clothes”이다.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women, mother, clothes” 세 단어는 서로 연관돼 있으며 동일 게시물에서 자주 같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여성(women)의 경우 북한여성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이는 북한 여성들이 자녀들과 노인, 그리고 군인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국가를 위

해 헌신한다는 내용이 다수이다. 또한 어머니(mother)라는 단어를 여성과 동시에 사용하며 북한의 어머니의 날과 전국어머니 대회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옷(clothes)은 여성복과 관련된 게시물이 대다수이며 북한여성들이 좋아하는 옷을 소개한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옷 전시회를 소개하며 북한 여성들 복장과 패션 트렌드를 알리는 게시물이 여러있는 반면 북한 남성복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패션과 같은 소비재는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4. 두 트위터 계정 해시태그 분석 결과

“해시태그”란 해시 문자(또는 숫자 기호)인 #(샵)이 앞에 붙은 단어 또는 띄어쓰기 없는 구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가 키워드 앞에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키워드를 링크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해시태그가 포함된 수많은 트윗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트위터 온라인 공간 내에서 해시태그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시태그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도 그 해시태그를 통해 해당 주제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Zappavigna 2012). 즉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특정 해시태그를 클릭하고 조회한다면 해당 해시태그는 인기 주제로 상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두 트위터 계정도 이러한 해시태그 장점을 활용하여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내용을 해시태그 키워드에 담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는 총 16개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설정된 키워드는 “#DPRK”(8개)이며 두 번째로 많이 상용된 키워드는 “#NorthKorea”(2개), 그리고 “#agriculture, #environment, #food, #hand, #sketches, #SONGS”가 각각 한 번씩 해시태그 키워드로 사용됐다. 해시태그 전체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에서 “#DPRK”가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앞 장 트위터 분석 결과에서 논의했듯이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 에서는 “감정,” “사람,” “문화” 등 주제가 높은 순위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제들이 해시태그 키워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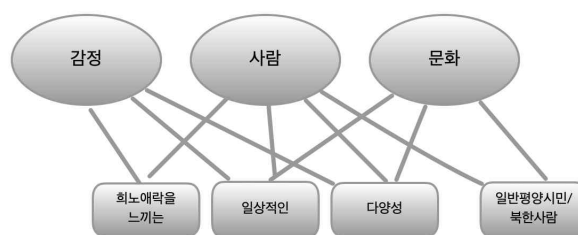
해시태그와 게시물 본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패턴은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에서도 드러난다. 이 계정의 총 해시태그 개수는 305개로, Olivia Natasha 해시태그 수의 약 열 아홉 배에 달한다. 때문에 확산성과 전파력 측면에서 보면 Olivia Natasha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트위터 계정은 총 28개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사용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NorthKorea”(135개)와 “#DPRK”(134개) 두 단어다. 그 외에 “#fasion(4번), #food(3번), #music(3번), #art(2번), #education(2번), #sports(2번), #animal(1번), #Autumn(1번), #Cuisine(1번), #dance(1번), #economy(1번), #Entertainment(1번), #fashionblogger(1번), #fashionista(1번), #FationModel(1번)” 등 총 26개 키워드가 해시태그로 사용됐지만 그 빈도수는 매우 낮다. 해시태그 사용 특징상 게시물 내용에 따라 해시태그 키워드가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여러 게시물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NorthKorea”(135개)와 “#DPRK”(134개)가 반복적으로 많은 게시물에 사용된 것은 그만큼 이 두 키워드를 강조하고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두 트위터 계정은 해시태그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나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시물 내용에 맞춰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사용한 양상이 보이긴 하나, “#DPRK”와 “#Northkorea”와 같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로 사용됐다. 따라서 북한 트위터 해시태그 특징은 게시물 기반으로 키워드가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특정 키워드가 다양한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해시태그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거나 국가 행사와 명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는 낮아 보인다. 오히려 “DPRK”와 “North Korea”로 대변되는 “북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한 용도로 해시태그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례 없는 Covid-19 팬데믹과 유엔(United Nations)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람들과 북한 체제는 흔들림 없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동시에 “DPRK”와 “North Korea”라는 키워드를 검색에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이라는 국가를 글로벌 사용자들이 더욱 친숙하게 인식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트위터 분석을 통해 본 북한 대외선전 전략과 의미

트위터 데이터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가 김정은 정권의 대외선전 전략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서 논의한 주제들 간 연결성을 검토함으로써 트위터 데이터에 내포된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제분석 방법론이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Braun & Clarke, 2006).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브라운과 크라크가 제시한 여섯 단계 주제분석 중 세 번째 단계인 "중심 주제 찾기"(Search for themes)단계에서부터 이뤄진다. 이미 코딩한 코드와 주제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주제간의 연결성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의 주제 간 연결성을 검토해보면, "감정" 주제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사람"과 "문화"주제에서 감정과 관련된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감정"주제에 사람의 기분과 표정을 묘사하고 경치와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부사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감정과 사람, 감정과 문화를 연결하여 트윗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감정을 묘사하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북한은 독재 국가이며 북한사람들은 경직되었다”라는 고정관념과 대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감정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은 북한사회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글로벌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제 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의 최종 주제도를 <그림 7> 과 같이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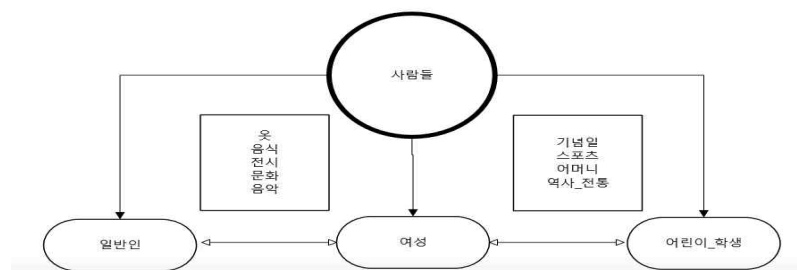


<그림 7 >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의 최종 주제도

최종 주제도의 핵심은 데이터 전체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정의하고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각 주제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정제된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단순 서술을 넘어 각 주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 최종 주제도를 해석하면 "감정, 사람, 문화"라는 대주제를 통해 북한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과 감성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을 자연스럽고 활동감 넘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국제사회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평양시민들 중심으로 묘사된 북한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승마와 수영 같은 취미를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공감가능하고 인간적인 국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의 데이터가 드러내는 대외선전 의미를 분석해보면, 해당 계정은 "사람, 국가행사_공휴일, 여성, 문화"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주제분석 방법론에 입각하여 각 주제 간의 연결성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종 주제도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사람"은 일반인,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들을 통해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인간적 면모와 정상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 공동체 활동,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사회를 친근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는 다른 주제의 기초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과 "국가 행사_공휴일"의 관계는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시민들이 퍼레이드, 축제, 기념식에 참여하는 모습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림 8> 트위터 계정_paramasivam의 최종 주제도

또한 "여성" 주제는 "사람"과 "문화" 요소를 연결하는 교차점 역할을 한다.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기여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가정과 공공 영역에서 모두 활발히 활동하며,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 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을 제작하거나 국가 축제에서 북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공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사람" 과 "문화," 그리고 "국가 행사 및 공휴일"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여성”은 전통적인 젠더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와 국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여성중심 메시지는 북한정권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진보성과 사회적 조화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주제는 모든 주제를 통합하여 북한의 전통과 현대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음식, 스포츠, 역사와 전통, 음악, 의류와 같은 하위 주제들은 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통의상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한 의류 게시물은 앞서 설명했듯이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과 스포츠 관련 게시물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며, "사람"과 "여성" 주제에서 보여지는 인간적 요소를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트위터 계정_Olivia Natasha 와_paramasivam 의 주제 간 연결성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볼 때, 북한 당국의 대외선전 메시지는 결국 북한을 정상적이고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보장된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유롭고 다채로우면서 동시에 이념적으로 안정적인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V. 연구요약 및 결론

북한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는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연계된 소셜미디어 채널들에 주목했고, 특히 북한 유튜브를 통한 대외선전 메시지와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를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외선전 채널로 활용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본 연구는 북한 트위터 계정 _Olivia Natasha와paramasivam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외 선전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 및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으로 두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두 트위터 계정은 특징과 성격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Olivia Natasha는 Yumi라는 여성을 계정 소유주로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다양한 모습을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해 외부세계에 전달하려 한다. Yumi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소감 글을 포스팅함으로써 비정치적인 북한주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콘텐츠다. 즉 외부세계의 일반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와 에피소드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로 소개하는 것이다. 반면 paramasivam의 경우 개인 보다는 국가적 이슈를 강조하고 개인의 내러티브가 아닌 국가 행사와 기념일 등을 소개하며 정보전달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우상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지만 국가적 행사 중심으로 게시물을 포스팅했다.

둘째, 두 계정의 특징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강조된 메시지의 주제에도 차이가 있었다. Olivia Natasha의 데이터는 총 9개 주제로 범주화되었고, “감정”과 “사람,” 그리고 “문화,” “경치_자연,” “여성,” “국가행사_명절” 등의 주제 순으로 많이 등장했다. Paramasivam의 경우 데이터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총 16개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등장하는 주제는 “사람”이며, 다음으로 “국가행사_명절,” “여성,” “문화,” “평양, 공장_기업소, 경치_자연, 장소, 국제, 주택, 애국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제의 상이성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트위터 계정은 해시태그로 “DPRK”와 “North Korea”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했다. 이는 해시태그를 통해 북한사람들과 북한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보다는 “DPRK”와 “North Korea”로 대변되는 국가인 “북한”을 글로벌 소셜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핵개발과 인권억압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PRK”와 “North Korea”라는 해시태그로 자신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것이

다. 동시에 “감정”과 “사람” 등을 강조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해외대중들이 북한을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두 트위터 계정의 주제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Olivia Natasha의 경우 "감정, 사람, 문화"라는 대주제를 통해 북한사람들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을 인간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다. Paramasivam의 경우 "사람"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들을 통해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인간적 면모와 정상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행사_명절”과 국가 지도자의 행적을 소개하였지만 이와 같은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과 "국가 행사_명절"의 관계는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시민들이 국가 퍼레이드, 축제, 기념식에 참여하는 모습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조화롭게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성들을 자주 언급하면서 여성들을 "사람" 과 "문화," 그리고 "국가 행사_명절" 간의 연결고리 또는 매개체로 활용한다. 결국 “여성”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와 국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받으며, 북한의 전통과 현대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트위터를 활용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선전 메시지와 전략은 결국 북한을 정상적이고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보장된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북한은 문화적으로 다채로우면서 동시에 이념적으로 안정적인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비연동 유튜브 연구에서 밝혀진 북한의 대외선전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즉 전통적인 선전매체와 달리 비연동 소셜미디어 채널은 김정은을 직접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체제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이는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설정하여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북한주민들, 그리고 문화와 예술 자원이 풍부한 북한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을 대외선전의 전면에 등장시킨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계정 중지와 삭제를 피하기 위해 대외선전 메시지를 지도자와 체제 우상화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소프트한 방식으로 변경했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북한 트위터 계정은 해시태그를 통해 “DPRK”와 “North Korea”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정상적인 국가임을 선전하여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내적으로 주민들의 외부세계와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선전에서는 뉴미디어의 발전에 맞추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체제의 안정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활발하게 전파해온 것이다. 이는 기술도구론의 예측과 유사한 것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발달이 김정은 체제에게 경제와 정치 영역을 통합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 방식과 그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은 정보화와 전체주의 체제 생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비연동 트위터 계정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 유튜브 분석과 함께 향후 북한 당국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대외선전 도구로써 트위터를 활용해 온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관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바탕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김용호. (2018).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한국과 국제정치*, 34(4), 123-151.
- 박성호 외. (2021).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5(1), 125-161.
- 박한우. (2018). 북한 유튜브 채널 분석: '조선의 오늘'에 대한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2581-2592.
- 박한우 외. (2011). 스마트 미디어와 SNS, 과연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구인가(1): 정치, 사회 부분 진단. *한국언론학회 2011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자료*, 53-70.
- 서정호, 전수진. (2021). 유튜브를 활용한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미지 변화 연구: Echo of Truth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74, 1-21.
- 송태은. (2013).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이중구조와 북한정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통일문제연구*, 25(1), 123-149.
- 이지순. (202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통일연구원*.
- 이현지, 정일권. (2012). 정치인의 트위터 메시지와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권자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261-299.
- 임을출. (2019).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방식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115-142.
- 장안리. (2022). 광고홍보학 교과과정으로서의 질적자료분석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중심으로. *PR 연구*, 26(3), 103-131.
- 하승희. (2020). 북한의 유튜브 대외 선전매체 활용 양상. *북한학연구*, 16(2), 171-205.
- 원우현, 이주현. (2007). 상호작용성과 상호작용: 새로운 광고 효과 측정방법에 대한 제언. *한국광고홍보학보*, 9(1), 223-249.
- Ko, K., Lee, H., & Jang, S. (2009). The Internet dilemma and control policy: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in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1(3), 279-295. <https://doi.org/10.1080/10163270903087204>

해외 논문

- Auxier, B., & Anderson, M. (2021). Social media use in 2021. *Pew Research Center*, 1(1), 1-4.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 57-71. <https://doi.org/10.1037/13620-004>

Bergin, M. (2011). NVivo 8 and consistency in data analysis: reflecting on the use of a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gram. *Nurse Researcher*, 18(3), 6-12.

<https://doi.org/10.7748/nr2011.04.18.3.6.c8457>

Dongo, I., Cadinale, Y., Aguilera, A., Martínez, F., Quintero, Y., & Barrios, S. (2020). Web scraping versus Twitter API: A comparison for a credibility analysis. *Proceedings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Integration and Web-based Applications & Services*, 263-273.

Liu, M., McKelroy, E., Kang, J., Harron, J., & Liu, S. (2016). Examining the use of Facebook and Twitter as an additional social space in a MOOC.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30(1), 14-26.

<https://doi.org/10.1080/08923647.2016.112058>

외국 도서

Christopher R. Kedzie.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Coincident Revolutions and the Emergent Dictator's Dilemma*. RAND Corporation.

Steinberg, S. (2007). *An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Juta and Company Ltd.

Zappavigna, M. (2012). *Discourse of Twitter and Social Media: How We Use Language to Create Affiliation on the Web*. Bloomsbury Publishing.

인터넷 자료

Baidu.

<https://baijiahao.baidu.com/s?id=1808694842199637224&wfr=spider&for=pc>

Chrome Web Store. (n.d.). X Twitter Scraper.

<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x-twitter-scraper/cedomiokkcmbeoekchahgmfcppnclal?hl=ko>

Nvivo homepage.

<https://lumivero.com/products/nvivo/>

NK News.

<https://www.nknews.org/2024/01/north-korean-propaganda-sites-targeting-south-go-dark-in-simultaneous-outage/>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twitternk-08312020154342.html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nyjy7l859o>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tl=true>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발표 2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고찰

이진송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고찰

이진송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정보통신 활성화와 수용 형식
4. 한류 수용 유형과 태도
5. 결론

주제어 : 북한 청년, 한류수용, 전자기기, 지역과 계층, 변화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에 주목하면서 지역과 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구조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정치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 생활을 하였고 2017년 이후에 탈북한 북한 전역의 15명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한류 수용은 새로운 문물을 소구하기 위한 우회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속적인 양상을 띠었다. 분석 결과,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다음을 함의한다. 첫째, 감시를 무력화하는 점조직 중심의 연결망에 기반해 수용 환경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한류의 수용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문화적 열망과 연결된다. 둘째,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일 때 더욱 점진적인 형태의 자기에로 나타나 북한 사회의 문화적 선도 역할을 한다. 한류는 북한 청년들에게 ‘미래 표상’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표출되었다. 셋째,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은 분단과 대립의 산물로써 문화적 표현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특정 주제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을 내재한다. 한류의 수용 태도는 일방향이 아닌 복합적 형식으로 서로 상충하면서 수용된다.

주제어, 북한 청년, 한류 수용, 수용 태도, 지역과 계층, 변화

I. 서론

북한은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한류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고 이듬해에는 “청년교양보장법”(2021)과 “평양 문화어보호법”(2023)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채택된 세 개의 법 모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류의 유입과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집권 첫해에 형법을 수정 보충하여 외부문화의 반입과 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구속력을 집행해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의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류 영상물¹⁾을 비롯한 외부문화의 수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이 새로운 법들을 제정한 배경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외부문물이 유입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행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장했던 사회주의 생활방식과 상충되는 물질 만연주의적 가치관이 북한 전역에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경험하면서 사고관을 형성한 청년들이다. 유년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자아에 각인된 생애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쉽게 변화될 수 없는 불가역성을 띤다.²⁾ 현재의 북한 청년들은 동경할 과거를 잃어버린 세대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준거점이 될 만한 경험이나 기억이 전무하다.³⁾

특히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10년은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대중적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독재 권력의 부정부패가 공론화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집단적 항거로 이어져 ‘아랍의 봄’이라는 광범위한 저항 운동으로 번졌다. 특히 튀니지, 이집트 예멘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또한 이 영향으로 2011년 2월 중국에서도 공산당 일당 체제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자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지만, 당국의 사전 진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부여한 사명은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를 ‘한류 영상물’로 한정하여 접근한다. 영화와 드라마는 전통과 관습, 역사, 사회 가치관과 사람들의 일상을 일정한 스토리 텔링의 서사로 그려 내기에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다. 특히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동일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

3)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19권, 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5, p. 21.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제8장에서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당의 영도 밑에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⁴⁾이라고 규정하였다. 청년동맹의 하위조직인 소년단 제9차 대회에서도 김정은은 서한을 통해 “혁명의 교대자, 강국건설의 역군”⁵⁾이라면서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항상 후대를 위한 시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정권의 수호집단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로써 이들의 사상적 결속력에 따라 체제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북한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국가의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배급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기에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결속력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식과 조직 관념의 약화로 이어져 개인주의와 물질 배금주의를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⁶⁾ 또한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체제를 불신하는 담론이 형성된다면 광범위한 대중성을 발휘해 사회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⁷⁾

따라서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북한에서 한류는 체제에 해가 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부합하고 또 상충하는지에 근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한류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수용의 경험이 어떤 사회 현상으로 귀결되어 북한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류 수용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수용 태도로 구분한다. 한류의 수용이 개인 영역을 넘어 또래 집단 사이의 담론으로 확장된다면 북한 사회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조선로동당규약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5) 노동신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서한 “소년단 기발 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2022. 12. 28.

6)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한국학술정보, 2007.

7)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수용자 이론을 접목시켜 구조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대와 설렘, 익숙함과 낯섦, 공감과 거부감의 공존은 사회적 정서에 따라 상이하다. 북한 청년들 역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기에 수용 결과도 차등적이다. 이때 개인의 경험은 북한 사회를 더욱 촘촘하고 조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한다.

1) 수용 태도 연구

수용자 연구는 문화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영국에서 홀(Hall, 1980)의 수용자 이론과 이를 연구 방법으로 발전시킨 몰리(Morley, 1986)에 의해 문화연구를 중점에 둔 연구(audience studies)를 중심으로 수용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홀은 ‘부호화·해독’(Encoding·Decoding)⁸⁾ 모델을 통해 수용자가 텔레비전의 지배담론을 수동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보았다. 즉 텍스트와 수용자의 관계가 단순하거나 획일적이지 않으며 수용자의 사회적, 담론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⁹⁾ 몰리는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젠더와 세대의 위치에 따라 수용자가 어떻게 “이용”되고 “해석”되는지 설명하였다.¹⁰⁾ 또한 홀이 주장한 정치 계급 외에도 젠더, 세대, 교육 수준, 인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몰리는 수용자의 사회적 위치, 계급과 해독의 다양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해독의 세 가지 위치, 즉 선호된 해독(preferred decoding), 교섭적 해독(negotiated decoding), 대안적 해독(alternative decoding)을 제시하였다.¹¹⁾ 수용자는 개인의 영역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때 주관적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적 태도는 사회의 주체로서 개인의 문화 및 심리적 정서와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태도

8) 홀은 ‘부호화·해독’ 모델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개념을 도출하였다. “선호된 의미”를 수용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의 ‘지배적 해독’(dominant-hegemonic decoding), 선호된 의미에 대한 부분적인 동의나 거부를 하게 되는 ‘교섭적 해독’(negotiated decoding), 그리고 텍스트의 선호된 의미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전체적으로’(globally)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반대적 해독’(또는 대항적, oppositional decoding)이 그것이다. 김수정, “수용자 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수용자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열린 논쟁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2010) p. 11.

9) 나미수,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pp. 15-17.

10) 임종수,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언론정보연구, 제47권, 1호, 2010) p. 8.

11) 나미수, 위의 책, p. 16.

(attitude)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관련된 신념과 감정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재빨리 반응해야 할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태도의 ABC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Affect, 느낌), 행동 경향성(Behavior tendency) 및 인지(cognition, 사고) ¹²⁾이다.

문화예술 수용태도는 언론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수용분석론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수용자 이론의 세 가지 갈래 가운데 하나인 수용분석은 작품의 기호를 해독하는,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독자를 연구한다.¹³⁾ 본 연구에서도 북한 청년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느끼는 이해와 해석, 감정 그리고 의미화 과정의 상호작용을 수용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남과 북의 상이한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한류 수용은 각이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상이한 태도는 한류의 수용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1) 연구 분석 모형

원래 문화수용은 문화의 특정 부분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미시적이고 실증적·분석적으로 고찰해야 한다.¹⁴⁾ 본 연구의 분석 모형으로 수용자 태도를 채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분단 80년으로 인해 남북 간의 정치 사회적 이질감은 문화적 괴리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 북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체계적으로 사상교육을 받기에 외부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남한의 문화를 수용할 때 내면에 기저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먼저 한류 영상물은 북·중 접경지역과 해외 방문자들에 의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단속과 통제는 수용의 걸림돌인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회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문화의 침체로 인해 한류를 비롯한 해외 문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층적인 양상이다. 수용자에 따라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면 선호된 해독의 형태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남북의 유사한 언어로 인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직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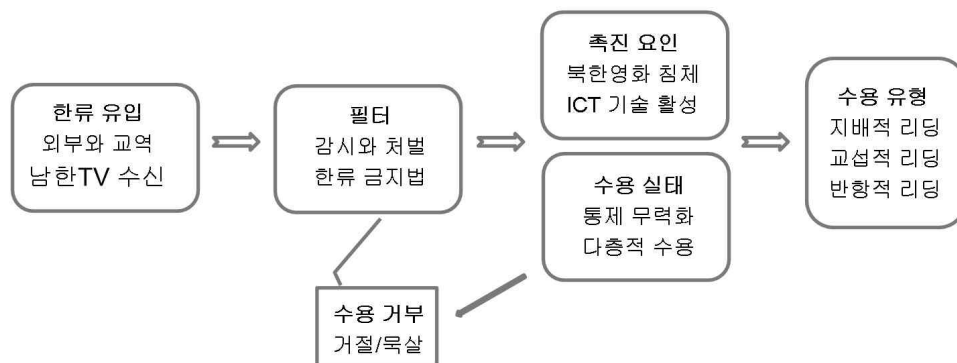
12) 이종택 외 옮김, “마이어스의 사회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20) p. 112.

13) 조현성, “탈북자의 남한 문화예술 수용태도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16.

14) 히라노 겐이치로, 위의 책, p. 116.

한 사회에 남한적 가치를 퍼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분 채택하는 교섭적 수용은 일정 부분에 공감하고 수용하지만, 자신에게 위해가 될 때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끝으로 기존의 문화 영향으로 한류 영상물은 도덕적 가치에 저해되는 불순한 선전물이라고 인식할 때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표 2-1】 한류 수용 태도 연구모형



출처 : 심층인터뷰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렇기 위해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를 질적연구방법의 일부인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사회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뷰는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시각으로부터 현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듣는 것이며, 연구자가 응답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노출되는 해석과 이해에만 접근이 가능할 뿐이다.¹⁵⁾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공간 문헌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간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다.

(2)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북한의 20대 청년들이다. 연구대상자는 2000년대생을 중심으로 모집하였으며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을 기점으로 북한 정치 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 생활을 하면서 세계관이 형성된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한 12년제 의무교육의 수혜자이며 북한이 강조하는 사상교육과 그 대치점인 한류에 의

15) 나미수,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p. 52.

해 사고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에서 한류를 경험하였으며, 2017년 이후 탈북한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점을 2017년 이후로 정한 것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정권 이양, 장성택 숙청, 당 대회와 근로단체 대회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변동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평양과 지방 도시, 접경지역과 내륙도시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한류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본 연구에 일부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류의 보급 환경이 현재 어떠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공유되고 확산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한류 경험의 유무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성, 도농 간의 지역적 차이, 정치적 성분과도 연관성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문화는 기성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전이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한류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한 2000년 초반에 경험한 40대 유경험자도 일부 포함하였다. 수용환경과 수용태도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미터와 같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 시기를 비교하는 것도 시대에 따른 한류 현상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표 2-2】 심층 인터뷰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No	성별	연구대상자	탈북시기	출신 지역	북한 직업	나이	면접 일시
1	여	대상자 A	2009	무산시	노동자	20대	2024.06.30.(FGI)
2	여	대상자 B	2014	혜산시	예술인	30대	2024.06.30.(FGI)
3	여	대상자 C	2016	삼지연시	학생	20대	2024.07.03
4	남	대상자 D	2017	평양시	해외근무	20대	2024.06.25
5	여	대상자 E	2018	단천시	학생	20대	2024.06.24
6	여	대상자 F	2018	보천군	학생	20대	2024.07.04
7	여	대상자 G	2019	혜산시	학생	10대	2024.07.03.(FGI)
8	남	대상자 H	2019	평양시	해외근무	20대	2024.07.05
9	여	대상자 I	2019	함흥시	노동자	20대	2024.07.08
10	여	대상자 J	2019	특별시	서비스업	30대	2024.06.30
11	여	대상자 K	2019	평양시	해외근무	40대	2024.06.12
12	남	대상자 L	2019	평양시	해외근무	40대	2024.07.11
13	남	대상자 M	2021	강원 접경지역	노동자	20대	2024.07.03.(FGI)
14	남	대상자 N	2020	평양	해외유학	20대	2024.07.30
15	남	대상자 O	2020	혜산시	학생	20대	2024.08.20

출처 : 필자 작성

연구 대상자 모집은 “스노우볼 샘플링”¹⁶⁾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친분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소개를 받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날짜와 장소를 정해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2024년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외에도 포커스그룹(Focus group) 형식으로 2명을 동시에 하였다. 포커스그룹 면접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비슷한 연령의 대상자들이었는데 각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하기에는 집중도가 낮았다. 그만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도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과 지역에 따라 한류 수용 역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 질문을 하였다.

- 남한 영상은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였는가요?
- 남한 영상물을 어떤 환경에서 시청했나요? 누구와 함께?
- 시청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 시청 후 친구 및 친척들과 시청 소감을 공유한 적 있는가요?
- 남한 영상물은 얼마나 자주 시청하였는가요?
- 시청할 때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하였는가요?

자료 수집은 연구에 참여한 10대 1명, 20대 8명, 30대 3명, 40대 2명에게 개인 신상정보 함구,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등의 윤리적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녹취 후에는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주제와 연구목적에 맞게 유형별로 세분화시켰다.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거나 진술한 내용에 관해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지를 재작성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서문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유무선을 통한 질의와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면서 수정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16)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기법은 연쇄 추천 샘플링, 인적 네트워크 샘플링이라고도 한다. 초기 면접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또래 친구, 지인들에게 면접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고 표본을 확장 시켜가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정부와 종교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성분, 출신 지역, 교육상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심층인터뷰의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소개받는 데 효율적이었다.

3. 정보통신 활성화와 수용 형식

김정은 집권 이후 괄목할 만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움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욕은 전자기기 보유의 확산을 불러왔다. 전자기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의 감시도 점진적인 양상을 띠면서 단속의 방법도 엄격하였다. 또한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노트텔과 한류 영상물의 판매도 전면 금지되면서 수용 환경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ICT 기술과 저장매체의 진화는 한류 수용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북한당국이 ‘정책’을 제시하면 ‘대책’으로 응답하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이 어떤 양상으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자.

1) 전자기기와 전자매체의 대중화

(1) 전자기기의 일반화: 뒤쳐지지 않으려는 욕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부쩍 강조하면서 해외 선진 기술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분야는 단연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기의 발전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는 젊은 층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에 청년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면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열의를 갖게 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간편성과 휴대성은 시공간의 확장을 의미하기에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일상의 문화로 부상한 것이다.

다양한 전자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장매체(USB, SD카드, TF카드)의 발전도 진화하고 있다. 전자기기와 저장매체는 상호 호환을 기반으로 하기에 불가분의 관계처럼 동시적 확산을 이루었다. 전자기기가 다양해질수록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기술도 향상되기에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마련된 것이다. 간편하고 소형화된 저장매체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보급품이 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과 기술의 등장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심지어 전자기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쟁적인 양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제 또래에는 많았어요. 노트북 사용화가 많이 풍부해졌고 남한처럼 고급 사양은 아니래도 잘 사는 애들은 갖고 있어

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나라에 등록하고 하나는 몰래 쓰는 거죠. 좋은 거는 하드 500기가 램은 8기가, 그리고 CPU는 i5 정도였던 거 같고요. (연구대상자 O)

2014년 전에는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좀 귀한 물건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돈 좀 있는 집들은 그래도 자식한테 다 사 주었어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좀 그랬어요. (연구대상자 C)

한편 유니세프가 2017년에 조사한 복합지표조사 MICS 자료¹⁷⁾에 따르면 북한에서 ICT 기기 보급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 69%, 유선전화 45.2%, 라디오 94.1%, TV 98.2%, 컴퓨터 18.7%로 집계되고 있는데, 특히 평양은 휴대폰 90.6%, 유선전화 82.6%, 라디오 96.8%, TV 100%, 컴퓨터 37.7%를 보유함으로써 지방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북한 내에서도 디지털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눈여겨 볼 대목은 청년층(15~30세)의 컴퓨터 사용률(표 3-1 참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또한 성별의 차이 없이 남녀 모두가 컴퓨터 사용이 원활할 정도로 균등하게 나타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일반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연령별 정보통신 기기 사용 현황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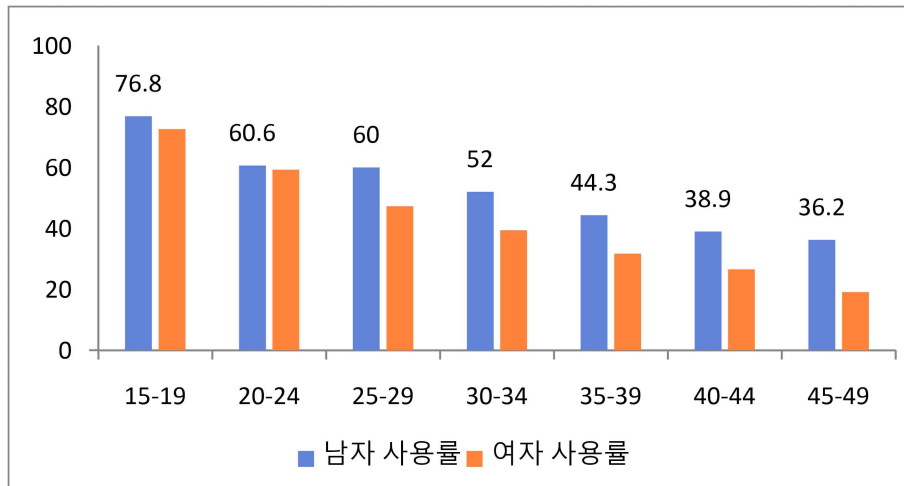
연 령	컴퓨터 사용	3개월 1회	주 1회	휴대폰 보유	3개월 1회	주 1회
15-19	74.7	67.3	47.75	24.1	76.3	50.15
20-24	59.9	49.45	37.85	49.65	89.75	69.45
25-29	53.65	43.65	31.65	57.4	89.95	73.1
30-34	45.7	37.5	26.35	57.5	88.4	71.7
35-39	38	30.55	21.6	58.05	85.2	69.75
40-44	32.7	26.9	17.95	56.1	84.55	66.85
45-49	27.65	21.5	13.6	54.85	84.95	67.05

1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 32-33.

주: 1) 조사대상 남성 4,179명, 여성 8,763명, 전체 12,942명,
 2) 지역구분 : 평양,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3) UNICEF MICS(2017)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3-2】연령 및 성별 컴퓨터 이용률

(단위: %)



출처 : UNICEF MICS(2017)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반면 유니세프 조사에서 북한 청년들의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노트북과 휴대폰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청년들은 보통 2~3개의 전자기기를 한류 수용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전자 기기의 주 사용층이 청년들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북한에서 전자기기는 한류 영상물과 외부 콘텐츠를 사용하는 용도로 인식되기에 북한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한다.¹⁸⁾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보안 및 추적 프로그램을 탑재하기에 비공식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 보안과 추적을 우회하는 기술 확산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을 활용한 한류 영상물의 수용 경로가 넓어졌기 때문

18) 컴퓨터와 노트북을 구입하면 국가에 의무 등록하고 연간 사용료도 20달러 정도 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이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밀리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자 M의 증언)

이다. 북한은 자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한류 영상물 차단에 기술과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외부의 파일이 컴퓨터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보안 기술을 탑재하였다. 조선컴퓨터센터(KCC)가 중심으로 개발한 ‘붉은 별’¹⁹⁾은 전국의 성·중앙 기관과 공장·기업소는 물론 개인 컴퓨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붉은기’ 프로그램이라고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죠. 전국의 PC에 무조건 설치하라고 지령이 내려와서 모든 컴퓨터 개인 PC에도 설치했는지 다 제출하게 됐어요. 근데 망했어요. 리눅스라는 한계와 프로그램이 너무 구리게 만들다 보니까 랙 걸려서 사용이 안되는 거예요. (연구대상자 D)

우리가 전담한 게 북한의 PC, 태블릿, 휴대폰 OS 예요. 휴대폰 OS 평양, 태블릿 OS 아리랑도 있어요. 이거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추적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코딩한 거랑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풀어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해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식이죠. (연구대상자 D)

북한은 보안 프로그램 ‘붉은 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였다. 한류 영상물의 이용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특히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능통한 기술 인력들은 암호화된 인증키를 입력하여 국가가 허용한 정상 파일처럼 등극시켰다. 이러한 대가로 미화 10~50 달러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되었다. 수요에 의한 기술 제공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기에 암암리에 성행하는 지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붉은 별’ 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한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컴퓨터를 소유한 청년들은 어느 정도 가정환경이 부유하기에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

19) 북한은 일찍부터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2006년에 개발한 “붉은별”이 있다. 2008년 1.0버전, 2010년에 2.0버전, 2014년에 3.0버전이 출시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2014, p.34. 참고, 2018년에는 서버용 OS, PC용 OS의 ‘붉은 별 4.0’ 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NK 경제, “북한 1만 7000대 서버에 붉은별 4.0 적용”, 2018. 10. 19.

는 기본적인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국가가 2중 3중의 감시망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응용하고 있다. ‘붉은 별’ 프로그램 이외에도 컴퓨터 내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사용 이력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비밀리에 공유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당국의 감시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지만 임시방편의 용도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극약처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붉은 별’ 정품 자체를 딱 구매해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려면 ‘붉은 별’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붉은 별’에서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상공간을 이용해 붉은 별이 있는 것처럼 가상 체계를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몰래몰래 남한 드라마도 보죠.

잡히면 큰 일이니까 백방으로 보안에 신경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구동기 몇 개 사용해요. 일단 숨기는 프로그램 일단 켜놓고 시작해요. 프로그램을 써서 드라이브를 아예 안 보이게 해요. 그리고 끝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ALT + F4를 눌러 구동을 꺼버려요. Alt Tab을 누르면 사용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봤던 이력을 바로 지워요.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연구 대상자 O)

즉 ‘붉은 별’ 프로그램도 평양과 지방에 따라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 주로 지방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국가의 공식 판매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통망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들의 대부분은 권력기관과 공모하여 법과 제도의 보호 속에 있기에 가격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국가에 등록하면 단속원들의 정기적인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들에게서 구입하면 번거로운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의 감시가 점진적일수록 이를 탈피하려는 방식도 즉각적이다. 즉 한류 영상물을 시청한 목록을 컴퓨터에서 지움으로써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의 실마리를 없애는 것이다.

하드 드라이브에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면 히스토리를 삭제할 수 있어요. 또 레지스트리라고 여기 경로 찾아가 파일 지우게끔 딱 설계된 게 있어요. PC 제어판에도 가면 기본적으로 있어요. C 드라이브에 가면 청소 버튼 이런 거로도 지울 수 있고요. 근데 복원 프로그램 돌리면 또 다 나와요. 동영상, 사진은 복원이 잘 안되지만 텍스트 파일로 복원이 돼요. 하드 드라

이브 초기화 해도 안돼요. (연구대상자 D)

컴퓨터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단속원들의 감시 또한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한류 영상물을 전문 단속하는 상무에는 전문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아 능력을 갖춘 단속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유한 컴퓨터 기술력의 우위에 따라 현장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단속원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컴퓨터 내에 설치된 드라이브 수와 현재 사용 중인 용량 확인, 접속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상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의심스러운 시청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하드 디스크와 컴퓨터를 압수해 공안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하거나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고심 또한 계속되고 있다.

물론 단속원들 전부가 완벽한 기술을 보유할 수 없기에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는다면 치밀하게 검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감시 기능을 회피하고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에 제한된 역량과 기술력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영상과 접속 경로를 바로 삭제하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은 진일보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접속 경로의 흔적을 아예 남기지 않는 가상 드라이브를 구현하고 있다.

방법 중 하나가 만약 1,000기가 짜리 컴퓨터를 쓴다면 500기가는 숨길 수 있잖아요. 컴퓨터 자체를 500기가짜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의 컴퓨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잖아요. 1테라가 1024 기가인가 그렇게 되는 데 500기가 밖에 없는 걸로 조작해요. 드라이브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약간 청소기처럼 생겼어요. 이름은 해킹툴이라고 영어로 써졌어요. 전 파일명을 바꿔서 사용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많지 않고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잘 몰라요.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종합 메뉴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난 히든 기능과 구동 드라이브 2개 만드는 것만 썼거든요. (연구대상자 O)

위의 사례처럼 전문 기술을 갖춘 청년들은 컴퓨터의 사용 경로를 탐색하여도 찾을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한다. 새로운 가상공간을 만들어 추적을 차단하는 기술을 접목시켜 활용한 것이다. 단일적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이전의 우회 프로그램과 달리 종합적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 있기에 상황에 따른 적재적소가 가능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하는 프로그램은 만능 역할을 한

다. 컴퓨터 내의 곳곳에 기록되는 흔적 지우기, 경로 탐색, 파일명 변경 등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극복하는 멀티기능(Multi Control)의 도래로 한류 영상물의 수용은 용이하게 되었다.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폰과 태블릿 PC에도 보안을 뚫는 여러 프로그램이 생겨 공유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에는 약 7천 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약 600만 대를 넘어 10년 동안 약 1,000배 성장하였다.²⁰⁾ 조선컴퓨터센터(KCC)가 주도해 개발한 휴대폰 OS ‘평양’과 태블릿 PC(판형컴퓨터) OS ‘아리랑’은 보안과 추적 프로그램을 탑재하였기에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외부영상물과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하지만 우회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보안 및 추적 기능을 무마시키고 한류 영상물의 자유로운 수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에는 비둘기 2.0을 태워야 영화를 변환해서 볼 수 있어요. 암호를 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문 그거 가지고 깨고 돈을 받아요. 원래 그것도 통제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영화 좀 보여달라고 하면 도와주죠. 그런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 출장자들이 미니 메모리 카드에 넣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연구대상자 K)

보안 깨는 프로그램 ‘비둘기’나 ‘참매’ 같은 것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으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흔하게 갖고 있어서 얻기 힘든 귀한 자료는 아니었어요. 돈을 내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다 갖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걸 손전화에 태우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었어요. (연구대상자 M)

북한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외부 영상과 파일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판형컴퓨터)에도 보안 프로그램을 탑재하였다. 접속 이력 감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찍는 스크린 샷 기능인 추적 뷰어(Trace Viewer)²¹⁾와 허용하지 않은 파일은 자동 삭제되는 서명시스템(Signature System)을 도입했지만,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참매’와 ‘비둘기’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은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을 정도의 인기 소장품이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얻는 것은 비용이 지불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구하기도 쉬운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우회 프로그램

20) 정은이·이해정,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 21.

21) 연합뉴스, ‘北정권 정보통제 기법 갈수록 정교화’, 2017. 3. 2.

의 사용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애용하고 있다.

북한의 보안 인증은 국가 인증과 휴대전화 자체 인증으로 나뉘는데, 국가 인증은 최상위 인증이고, 자체 인증은 일반 휴대폰 내의 기능으로 가능하다.²²⁾ 하지만 보안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여 추적이나 보안 기능을 완전히 따돌리는 조립 휴대폰이 개인들 사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가가 ‘정책’을 실시하면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도 우회 수단의 활용이 원활한 것은 한류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3) 액정 TV와 저장매체의 공존 : 간편하고 실용적인 기술의 조합

컴퓨터와 휴대폰처럼 감시와 추적의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매체는 액정 TV이다. 액정 TV는 일체형으로 TV 시청뿐 아니라 컴퓨터의 모니터로도 사용되기에 USB와 SD카드를 연결하는 포트가 장착되어 있다. 복사뿐 아니라 바로 지울 수는 신속성도 보장되기에 실사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액정 TV는 태양광 12V 전기로도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각광받는 전자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컴퓨터나 휴대폰보다 화면도 크고 화질도 뛰어나기에 시각적 만족도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하지만 액정 TV 역시 안전을 담보 하기에는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 액정 TV는 하얀 선으로 특수 제작된 안테나를 사용하기에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 이는 검열의 표적 대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전용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방법도 애용하고 있다. 물론 단속원들은 USB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검열을 대비해 당국이 허락한 영화나 드라마를 담은 USB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과거처럼 단속도 불시에 검문하는 게 아니라 인민반장의 입회하에 나름의 절차가 있어 전화로 사전에 귀뜸해 주는 등 서로 보호해 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액정 TV와 USB가 각광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노트텔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이다. 노트텔 전용으로 사용하는 CD 역시 한류 영상물의 주 시청 수단이라는 점이 공안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여러 번 복사하면 화질과 음질의 저하가 생기는 것에 반해 USB는 무한 복제, 무한 시청, 무한 사용이 가능하다. 주로 CD와 DVD는 북한 영화나 국가가 합법적으로 승

22) 데일리 NK, “北, 스마트폰 우회 프로그램 ‘비둘기’입수”, 2021. 1. 20.

인한 외국 영화와 만화 시청에 대부분 이용된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은 CD를 공식 판매점에서 사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여기기에 이용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사람이나 전자매체 모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긴다.

USB로 다 하는 거죠. 요즘에 또 액정 TV가 나오거든요. 얇은 거 있잖아요. USB로 연결되니까 다 통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속 나오면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USB를 막 뒤지거든요. 어디 있는지, 저희 세대는 CD랑 노트텔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노트텔이랑 CD는 단속품이라서 요시찰 대상이에요. (연구대상자 C)

액정 TV랑 노트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화면도 크고 바로 지울 수 있고, 또 복사할 수 있으니까요. 노트북은 혼자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잘 쓸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USB, SD카드로 잡고 넘기고 해요. (연구대상자 G)

전자기기 못지않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은 저장매체의 일반화이다. 북한에서 저장매체의 대중화가 도래되면서 한류 영상물의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은 보통 2~3개의 저장매체를 갖고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명 ‘만능키’ 역할을 하는 USB는 컴퓨터와 노트북은 물론 액정 TV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에 가장 선호하는 매력적인 제품으로 등극하였다. USB와 함께 리더기를 활용하면 SD카드와 TF카드의 호환도 가능하기에 기기들 사이의 연동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휴대폰과 태블릿 PC와 같이 USB의 접근이 어려운 전자매체들도 USB 허브를 활용하면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USB 메모리가 인기 높은 것은 여러 기기 간 호환 가능성이 무한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보통 북한 돈으로 4만원(5\$ 정도) 이면 16G 정도의 USB를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용량에 따라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즉시 교환하고 바로 지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용량보다는 내구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USB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전자 마찰로 인해 내부에 들어있는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크기에 실용성이 낮다.

(4) 한류 영상물의 치밀한 공유: 믿음은 곧 자백이라는 아이러니

한류 영상물 공유에 있어 금물로 여기는 것은 타인에 대한 선심이나 배려이다. “받은 것이 없으면 주지도 말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암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국가의 강도 높은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출로를 미리 타진하는 것이다. 한류 영상물을 상대에게 먼저 제공하면 ‘유포죄’가 성립되어 법의 판결과 처벌이 달라진다. 유포는 일방적인 배포와 같기에 공안기관에 발각될 경우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족과 관련자 모두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로 1:1로 교환하면 서로의 비밀이 보장되고 지속성도 유지되는 것이다.

아무리 친해도 1:1로 주고받지 않으면 안 줬어요. 제가 먼저 주면 유포가 되니까 처벌이 크죠. 그래서 딱 무조건 서로 주고받을 때만 교환해요. 너 뭐 재밌는 거 있어? 저쪽 거 있어?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남한 영상이란 거. 없다면 무조건 바로 돌아서죠. (연구대상자 I)

우리 학급이 50명 정도인데 남한 영화보는 건 한 5명 정도 될거 같아요. 모르는 사이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워낙 처벌이 세니까. 잡히면 막 소년교화소 보내니까. 그런데 역이면 인생 종치니까요. 군대도, 대학도 못가요. 그런거 보면 몸 사리죠. 그래서 진짜 딱 친구하고만 교환해요. (연구대상자 F)

이처럼 절제된 행동은 안전을 담보한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시청하던 보편적인 현상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공안 당국에 단속되었을 때 책임을 전과하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연결망도 해체될 수밖에 없다. 여럿이 함께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규율에 위배되고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모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따라서 한류 수용의 형식은 점조직 형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류 수용 현상이 정제되거나 주춤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 견고하고 치밀한 방식에 기반하여 공유하고 있다.

오히려 철저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주고받기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소수의 인원끼리 공유하는 소극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묘연한 분포를 형성한다. 또한 서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실체를 알 수 없기에 더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고구마 덩굴²³⁾

현상처럼 땅속 깊이 뿌리내려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역동적인 원리와 유사하다. 겉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연결망을 형성하여 은밀함과 기민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4.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형성한다. 국가의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의 제한 없이 사적 감정을 충만히 이입할 수 있는 지배적 수용, 일정한 경계를 두면서 공감과 반감이 교차하는 교섭적 수용, 한류 영상물을 북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불의로 여기는 반항적 수용으로 나누어 본다. 한류의 수용은 개인의 사회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에 복합적인 양상으로 귀결된다.

1) 지배적 수용: 청년들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서사

(1) 개인적 요인: 미래의 표상으로서 문명사회를 향한 갈망

북한에서 한류 수용이 비교적 적극적인 곳은 북·중 국경 지역이다. 접경지역 청년들의 경우 각종 외부문물의 영향으로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반적이다. 북한에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당과 법 기관, 그리고 반사회주의 행위를 전문 단속하는 ‘상무’와 연고가 있을 때 능동적인 수용 태도를 띤다. 북한에서 한류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국가의 단속 체계를 무마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배경을 암시한다. 특히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을 때 한류의 수용력이 포괄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특권층끼리는 서로 공모하여 비호하는 모종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는 지역적 풍토로 설명된다. 외부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연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부문물의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 특권층이기 마련이다. 모든 것

23) ‘고구마 덩굴 현상’이란, 모든 문화를 각각 하나의 유기체라고 주장한 토인비(Aronold J. Toynbee)가 1957년 『역사의 교훈』에서 ‘넝쿨식 현상’이란 개념을 들어 문명의 해후접촉(Encounter)시 문화를 수용하는 측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를 근간으로 히라노 겐이치로(2004)가 도입한 용어이다. 정경원 외, 중남미의 사회, 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35.

이 열악한 북한의 상황에서 외부의 문물은 삶의 풍요로움 그 자체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와 관련된 것은 우호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 수혜는 당연히 권력가들의 몫이다. 국가의 권력을 대리함으로써 비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상납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이처럼 지역적 특수성은 그 공간에서 성장하는 청년들도 그대로 답습되는 경향이 크다.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역시 획일적이지 않다. 한류로 일컫는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서 소비될 때 사회적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이 존재하기에 한류 수용도 여건에 따라 차등되기 마련이다. 한류는 특정 계층만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자리할 정도로 수용 환경도 다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한류 수용은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더욱이 권력의 주체인 당과 법기관의 자녀들 사이에서 한류 수용은 과감하다 못해 체제에 저항적일 정도로 나름의 문화 권력을 누리고 있다.

친구의 부모님이 보위부 간부인데 그 집에 가면 남한 영화가 엄청 많아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봐요. 보위부는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유롭게 봐도 걸리지 않아요. 부모님이 없을 때 몰래 보는데, 19금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대놓고 못 보잖아요. 그러면 몰래 꿈쳐가지고 친구들이랑 보곤 하죠. 개도 집에서 엄청 혼났어요. (연구대상자 D)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당, 진짜 많이 나쁜 짓을 한 건 시당 청사였거든요. 이건 진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제 USB 몰래 챙겨가서 가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불법녹화물을 봤죠. 친구 부모가 당 쪽에 있어서, 불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간부들이예요. (연구대상자 O)

당 일군과 법 관계자, 군인 가족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특권층이다. 사회적 지위를 빌미로 한류 수용은 더욱 베일에 가려져 공유와 확산을 넘나들고 있다. 지속적인 수용의 이면에는 한류가 북한 청년들에게 미래의 표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류를 통해 남한식의 연애편, 이성 관계, 미적 추구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포레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포레문화는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정 부류의 청소년집단이 그들의 가치관, 언어, 몸짓, 여가시간 활용, 취향, 인간관계 등에서 일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특징적 생활유형을 지칭한다.²⁴⁾ 새로운 것을 함께 공유하려는 포레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한류의 수용력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류는 문명사회의 징표라는 인식을 추구한다. 한류 영상물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욕망을 배출하는 대리 수단인 것이다. 북한에서 소외된 주제인 청춘들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사랑 이야기와 자유분방함을 다룬 작품들은 내면의 깊은 공감과 환호를 일으켜 열광적인 수용 태도로 이어진다. 남한에서 인기가 많았던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는 이성애에 대한 감정을 키우고, 개인의 욕망을 확장하는 지침서와 같다. 이들의 욕망은 단지 상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문화접변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그 나이 때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너무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나도 저런데 살고 싶다,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든지, 어리니까 또 연애 세포가 막 발달되어 있을 때잖아요. 뭔가 상상적으로 변하고 바뀌기보다는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로망인 거죠. (연구대상자 I)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다들 알죠. 아무리 영화를 각색한다고 해도 롯데타워 120층 넘는 게 나오는 데 그게 다 소품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복장, 귀티나는 말투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보이는 거죠. (연구대상자 F)

한류 영상물의 장점은 북한과 달리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 중심의 서사를 다루는 데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들을 위주로 인간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기에 거부감이 적다. 여기에 짜임새 있는 구성과 재미를 유발하는 줄거리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기 충분하다. 때로는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면서 공감과 희열을 나타낸다.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내면을 파고들어 요동치게 만드는 건 어찌면 당연지사이다. 동시에 북한당국이 강요하는 삶의 형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 배워온 총체적인 삶의 가치와 상충하면서 고정되었던 의식 체계를 허무는 사고의 전환도 경험한다.

반면 접경지역이라도 소도시의 경우 한류 수용이 소극적이다.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과 마주하고 있어도 외부 문물의 유입은 제한적이다. 백두산 인근 지역

24) 박진규,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2010), p.32

은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상교육의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천보나 심지연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 운동 관련 시설이 많아 ‘혁명의 성지’로 지정되어 있어 북한의 각계각층 단위들이 연례적으로 방문하여 사상교육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동도 엄격히 제한되기에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어려울 정도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부 문물에 대한 경계심도 더 높다.

(2) 동질적 요인: 언어의 공감력 확장과 자기에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한류 영상물은 남북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공감적 측면에서 이질감이 낮다.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동일 언어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다른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상징으로서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록 언어가 인간 사회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일단 하나의 언어체계로 정형화 되면 이는 사회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념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언어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요소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다.²⁵⁾

언어는 공감력을 높이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남녀의 애정을 다룬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남녀의 대화방식이 다소 거칠고 서툰 편이다. 반면 한류 영상물에 등장하는 청춘들의 서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영화 속 대사를 이용해 또래 친구들 간의 교감을 높이고 친밀감을 유발한다. 특히 드라마 속 멋진 대사를 이성에게 표현해 관심을 유도하거나 환심을 얻는다. 이성의 마음을 마력처럼 끌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준비해 구애의 제스처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북한에서 전무후무한 ‘내 안에 너 있다’나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등의 표현은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상대에 대한 공감을 확장한다.

남한 영화를 본 친구들이 연애도 잘 해요. 거기 보면 연애 멘트가 나오잖아요. 북한에는 없는 거니까 신선하죠. 이렇게 서슴없이 벽을 치면서 영화의 대사를 하면 좀 먹힌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인기도 많고 또 연애담을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연구대상자 M)

25) 박진규,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2010), p. 38.

저희가 이렇게 남한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친구들이랑 다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말에 가시가 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명언이 와닿지 않는 나이라서’ 이런식으로요. 또 ‘7살도 아니고 17살인데’ 하면서요. 저거 남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라는 거 알죠. (연구대상자 G)

친한 또래 사이에서는 남한의 사투리와 억양으로 서로 간의 담소를 나누는 웃음 소재로도 쓰인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처럼 북한에서 알 수 없는 생소한 억양과 표현은 신조어처럼 무의식적으로 남발하면서 사용한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다투면서 드라마 속 대사가 은연중에 등장하여 긴장감을 해소할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사적 공간에서 사용할 때가 많다. 북한당국의 규제와 통제가 심하기에 잘 모르는 친구가 남한식 표현을 사용하면 이미 알고 있어도 모른척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환경의 제약은 오히려 더 내밀하고 깊이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띤다. 소수의 친한 친구들끼리 남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모종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북한 청년들의 관심 역시 외형을 꾸미는 것에 집중되기에 동일한 목적의식에 따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패션과 헤어 스타일은 압도적인 관심사가 되어 함께 모방하고 실천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남한식 의복이나 머리 모양을 시도함으로써 영화 속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특별함을 경험하면서 집단 행위로 연결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행을 먼저 시도해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브로디외의 ‘구별짓기’ 현상이 북한 청년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신체 형태상의 차이는 몸가짐의 차이, 즉, 사회세계에 대한 관계 전체를 표현하는 제스처, 태도, 품행의 차이에 의해 증폭되고 상징적으로 강조된다. 여기에 특히 미용적 특징 또는 의류적 특징처럼 신체의 변경가능한 부분에 대한 모든 의도적 수정이 첨가된다.²⁶⁾ 다양한 분류법에 의해 구분되는 사회적 주체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탁월한 것과 천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스스로의 탁월함을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가 객관적 분류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표현되고 드러난다.²⁷⁾

26) 뵘에르 브르디외, 율긴이 최종철,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6), p. 347.

27) 뵘에르 브르디외, 율긴이 최종철,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6), p. 30.

그런 의미에서 한류 영상물은 북한 청년들에게 생소하고 무감각하였던 문화적 욕구를 마음껏 소생시키는 자극제와 같다. 스크린에서 보았던 남한의 패션을 자신의 감정과 육체로 이입시켜 새로운 나로 등극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주어 스스로에게 특별함을 선사하여 타자와 차별한다. 새로운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물질적 여유와 멋스러움을 호사할 수 있는 문화적 특권을 과시하는 것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애’로써 새로운 문물을 선도한다는 특별함으로 귀결된다.

(3) 공감적 요인: 역사적 실체와 현실적 실체

북한에서 역사는 소외된 분야이다. 북한당국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역사를 다루는 영화와 연속극들은 주로 착취와 억압에 예속당하면서 투쟁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선과 악의 이중적 대립을 진부한 형식으로 그리는 것이 전부이다. 북한이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 시각은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와 함께 피지배계층에 중심을 둔 ‘계급적 시각’과 민족이 역사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자주’에 기초하고 있다.²⁸⁾ 그러다 보니 한민족의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우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드물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세한 이해 역시 부족하고 기본적인 지식도 알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불멸의 이순신’, ‘허준’, ‘대조영’, ‘태조왕건’과 같은 역사 드라마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실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깊은 해석과 당시의 상황들을 실증적으로 재현하기에 흥미를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장군’이라는 표현은 김부자에게만 수여하는 고유의 호칭이지만 남한은 역사의 주인공에게 그 지위와 명예를 돌리고 있다. 절대 권력자에게만 특정되는 표현을 타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의 역사를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의 역사를 남한이 더 정통적으로 묘사한다는 인식과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이 더 우리의 역사나 전통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느낌. 북한 교육에서는 김일성의 역사에 대해서만 배우고 한민족의 역사나 이순신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생각하잖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옛날

28) 정연식, “북한의 역사 인식”, p. 83.

엔 4군 6진이 있다지만 일체 안 배워줘. 그래서 남한 드라마 보면서 새로운 역사관을 적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지. (연구대상자 L)

남한 사극의 역량이 북한이랑 똑같아요. 그때 놀랐고, 역시 한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일반 남한 영화는 북한이랑 뭔가 좀 달라서 어색한데, 사극은 말투랑 복장이 너무 비슷하니까 동질감이 들었죠. 북한에는 역사 영화가 많지 않고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남한은 역사를 왜곡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북한이. (연구대상자 L)

북한의 일부 고위층과 엘리트 청년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특히 분단 이후에 발생한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적 괴리와 달리 분단 이전의 역사는 남과 북의 공동 유산이라는 객관적인 인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보통 100부가 넘는 남한의 장편 사극을 밤을 꼬박 새면서 시청할 때도 있다. 사극 드라마는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많지도 않기에 여러 번 반복 재생하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역사 드라마만 전문 애청했다는 경험자의 증언을 빌려보면 특정 장르만을 선호하면서 깊은 배경지식을 쌓으려는 수용 태도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극보다 현대식 드라마에 더 열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북한의 역사 교육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역사관은 ‘주체사관’²⁹⁾으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는 북한 체제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편향적으로 재단해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적 접근보다는 북한의 시각에 따라 선별적으로 교육하기에 과거의 역사는 잘못된 사회라는 인식이 놓여있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동족에 칼을 들이댄 역모로 규정하고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 교육은 역사적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고무하기보다는 당과 김일성의 교시를 맹종하게 하는 교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⁰⁾

이러한 북한식 시각은 남한 사회를 평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 교육에서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선전하고 있다. 남한 사회가 미국의 예속

29) 김일성은 “리순신과 같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산 모범으로 될 수 있는 영웅적 인물들을 공산주의 교양에 많이 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일성저작집, 2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52. ‘주체사관’ 혹은 ‘주체의 력사관’이라는 표현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할뿐이었다. 홍종욱, ‘주체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2022년 가을, pp. 353-354.

30) 최용규, “북한의 역사사관과 역사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3), p. 92.

하에 있기에 일반 주민들은 최소한의 주권과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교육한다. 하지만 북한 청년들은 ‘태양의 후예’에서 남한의 군인들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군과 맞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심한 충격을 받는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기에 북한 체제의 선전과 교육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는 오히려 남한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연구대상자 H의 경우 재북 당시 군인이었다. 남자들 대부분은 10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기에 일반 주민들보다 더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는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기에 군인들의 적대감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를 보고 남한 사회와 군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남한의 군인들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필수품의 보급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 군인들의 정기적인 휴가와 자유로운 연애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동경심마저 유발하였다. 반면, 모든 게 열악한 북한군의 실상에 회의감을 가졌다고 한다.

드라마 상에서 미군이랑 한국군이 대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자연히 한국군을 엄청 응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경향이랑 다르다는 걸 그때 ‘태양의 후예’를 보고 느꼈던 거 같아요. 우리는 미제의 앞잡이인 줄 알았는데 국군도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고, 우리랑 이런 측면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고 우리가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 약간 느낌도 받게 되는 거죠. (연구대상자 H)

우선 가장 제일 먼저 꼽히는 게 복장이죠. 군복이나 군화가 너무 멋있잖아요. 북한은 그냥 한 벌 가지고 계속 입는데, 한국군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랑 취침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휴가도 나가서 막 놀고 들어와요. 저런 게 가능하구나. 이제까지 봤던 영화는 다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 영화만 유독 한국이 저렇구나, 한국도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 고되게 생활하는데 한국군은 저렇게 재미있게 한다는 생각이 강했었죠. (연구대상자 H)

2) 교섭적 수용 : 한류에는 적극적 - 체제에는 순응적

(1) 사회적 특권으로 파생되는 한류의 보편성

한류의 수용 태도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역력하다. 교섭적 리딩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류 수용은 선진 문명의 문물을 소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문화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북한의 정치 체제에 위배가 되는 언행은 반드시 절제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금물로 여기는 양가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류는 북한 사회 어디서든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남한의 문화라는 점에서 반드시 은폐되어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류가 북한에 유입되어 지금껏 명맥을 이어온 배경에는 교섭적 수용의 측면에 기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전후에 따라 한류 수용의 차이는 분명하다. 2012년 이전에는 한류 영상물은 누구나 쉽게 접하였기에 남한의 문화적 가치가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의 일부였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와 활성화 됨에 따라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이 높았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류 영상물 수용에도 적극적인 양상을 띠었는데 남한의 사회상을 한류 영상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한류가 북한에 대량으로 유입된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남한적 가치를 선호하는 문화접변의 양상이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던 절정의 시기이기도 하다.

남한 영화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볼 정도였죠. 한번 보면 다음에 보지 않을 수 없게 딱 만들어 놔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장면을 파격적으로 해나가지고 또 호기심에 보는 거지, 남한 드라마는 사상이 없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적인 이야기를 묘사하니까 재밌는거죠. 김정은 집권 전에는 노골적으로 보는 분위기였어요. (연구대상자 K)

한류 영상물의 영향으로 남한의 생필품이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의 선물로 등극되어 고위층들 사이에서 각광받았다.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중국 북경의 북한 대사관을 경유해야 한다. 북한 대사관 인근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한국산 도매 가게들이 즐비해 있어 남한 생필품을 사려는 인파들로 항상 붐빌 정도였다고 한다. 한류 영상물에 등장한 주인공의 멋진 의상이나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상인들에게 보여주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는 활기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때 남한제품은 물론 한류 영상물도 짐 속에 숨겨서 대거 유

입하였기에 북한 사회에 한류 확산을 불러오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의 수도로 일컫는 평양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평양의 고위층 사이에서는 남한의 고가제품을 소비하는 행위가 흔하였다. 몇몇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남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애용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제품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보급품이 많기에 개성 없는 유사 상품이 전부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품을 착용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징표와도 같다. 자녀들 둔 부모들도 ‘학부형회의’에 가면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노출되어 착용한 상품을 문의할 정도로 파급력도 컸다.

한국 영화 영향으로 북한의 여성들도 그때 정장을 많이 입었어요. 해외 갔다가 간부집 사모님들에게 남한제품을 선물하면 ‘이게 아랫동네 거네.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 하면서 만족해하지. 남북이 체형도 비슷하니까 골반이 딱 맞아. 평양의 고위층들은 거의 정장을 많이 입으니까 다 한국산을 입었어요. 재질 같은 경우도 중국 옷이랑 비교가 안되니까. (연구대상자 L)

전문 남한 상품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요. 친구들이 개성공단 제품 들어왔으니까 사러 가고 하면 우르르 그 집에 몰려가서 물건을 고르죠. 없는 게 없어요. 옷, 화장품, 전자제품 등 그냥 백화점이지요. 아무래도 평양에는 해외에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이 다 높죠.

북한에서 미용이나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한 스타일을 배워오는 거죠. 대부분 평양에서 나가니까 유행에 빠르죠. 펌이나 아이라인, 쌍거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한번 유행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하죠. (연구대상자 K)

그런 의미에서 한류 수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평양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평양 출신 5명은 모두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 유학이나 근무를 하면 국가의 감시가 느슨하고 조직 생활도 완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각종 전자기기의 활용이 수월하여 외부 정보의 접근에도 한결 쉬운 편이다. 물론 북한당국의 방침으로 해외 유학생은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의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빌려 수시로 이용한다. 이때 한류 영상물은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문화적 안정제처럼 멈

출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진다. 해외에서 접한 남한은 경제적 발전과 세계 문명을 주도한다는 인식이 북한으로 전이되는 가교역할도 한다.

하지만 한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부조리함에 맞서는 대항적 요소로 보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한류 자체를 반체제 행위로, 반체제 선전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 일탈 행위에 그치고 있다. 체제에 순응적 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류의 유입과 유포 행위는 가장 큰 범죄로써 법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한류는 비법 행위라는 인식을 내재하고 있다. 한류의 수용으로 자칫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척들도 연좌제에 연루되면 생사마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성택 사건 이후 당 조직들에서 남조선 영화를 뿌리 뽑자는 식의 내부 강연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서 사람의 동생이 대학생인데 남한 영상 보다가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2천 달러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다 2015년쯤부터는 평양에서 아예 돈으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생겼죠. (연구대상자 L)

김정은 집권하고 자수하라며 자백서를 계속 쓰게 했어요. 혼자 본건 괜찮은 데 친구랑 같이 본 거는 숨길 수 없잖아요. 친구가 만약 적어서 내면 나도 책임져야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몰래 보거나 딱 친한 사람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요. (연구대상자 D)

(2) 잠식될 수 없는 내면의 불안

한류 영상물이 확산하려면 수용 경험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수의 대상과 다층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사적 담론의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에서 한류는 항상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만 용인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서 한류 영상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자본주의 독소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한류 영상물을 접하더라도 비판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편함의 연속이다. 이러한 회의적인 환경에서는 수용 결과도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기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을 주입받기에 남한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인지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사상 검증의 잣대는 한류 영상물에 대한 경계심을 각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강제적 규율이 주입되는 과정은 개인의 사적 감정이 잠식되어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류 영상물을 접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은 이후의 수용과정에서도 큰 변화없이 그대로 발현된다. 한류 영상물의 흥미로운 극적 전개는 수용하고 싶은 마음의 동요를 불러오지만, 다른 한편에는 항상 경계하려는 억제력이 분출하게 된다. 호기심에 민감한 나이에기에 새로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경험하고 싶은 충동을 쉽게 억누르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감시의 눈초리가 자신을 향하는 듯한 수용 환경은 정서적 불안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오락적인 요소는 충분하지만, 사상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항상 경계하며 반신반의한다.

항상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보죠. 잡히면 정치적으로 풍비박산이 나니까요. 그냥 줄거리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즐겼을 뿐이고 거기서 사상적으로 변질되거나 자본주의 세상을 추종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서도 ‘여기서 물 들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죠. (연구대상자 E)

남한 영화를 보고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가슴이 막 철렁이잖아요. 들키면 진짜 끝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면서 또 계속 보게 되고, 막 편하게 앉아서 즐겁게 본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L)

이처럼 한류 영상물의 수용과정은 내면과의 사투 연속이다. 내면의 불안을 잠식시킬 방법은 권력을 동원하거나 뇌물로 무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가능할 때이다. 북한 고위층이 한류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법적 통제를 무마할 수 있는 타협 수단의 유무에 있다. 평범한 신분의 청년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기피하고 있는데 처벌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 한류 영상물이 적발되었을 때 법적인 조력자를 내세워 타협한다든가, 경제적 보상의 뇌물로 묵과할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처벌을 외면할 수 없다.

또한 국가보위성의 지도를 받는 전파 감독국은 밤마다 전파 탐지 차량을 동원해 대학생과 청년들 위주로 가택 수색도 불사하기에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

는 상황이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전자기기 보유 목록에 따라 인민반장의 입회하에 수시로 검열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색할 때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수상한 기색이 보이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떼어 내 포렌식으로 검사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이불을 덮고 본다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안테나 선을 뽑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류 수용의 이면에는 항상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면의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

3) 반향적 수용 : 반감의 서사와 응징의 망설임

(1) 남북의 대립은 곧 이질감의 서사

북한 청년들은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기적으로 주입받고 있다. 각 학교와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서는 수시로 ‘불순녹화물’에 대한 ‘자수 및 자백서’도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한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로써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응이다. 그외에도 방침 전달, 영화 문헌 학습, 생활총화와 사상투쟁회³¹⁾ 같은 제도를 통해 한류 영상물은 악성종양이라는 인식을 가증시키고 있다. 한류 영상물은 북한 사회를 해치는 침략의 선전 도구라고 전방위적으로 포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류 수용의 폭과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성행하는 한류 수용의 경험이 개인 차원에서 휘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류 영상물의 공유가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것처럼 한류 수용도 소극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다. 남한식 패션이나 메이크업, 억양과 말투 등으로 표출되는 몇몇 사례³²⁾들이 있지만 신변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한류를 모방했다가 적발되면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생활 평정서’³³⁾에도 반영되기에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31) 생활총화와 사상투쟁회는 북한의 모든 정치 조직들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호 감시 의례와 같다. 김부자의 교시와 ‘당의유일적영도체계 10대원칙’을 제시하고 국가가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을 기본으로 한다. 사상투쟁회는 조직과 집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사안에 따라 학교나 대학, 구역(구)단위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사회주의, 즉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된 한류영상물 시청 및 유포의 경우 노동교화형(징역)을 받게 된다.

32) 연구대상자 E와 D의 경우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유라헬이 입었던 하얀 드레스와 헤어스타일이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몸에 밀착된 스키니진이나 짧은 미니스커트는 당국에 의해 단속하지만 무릎 정도의 치마는 허용 범위라고 한다. 헤어스타일도 과하지 않는 정도, 즉 북한의 규정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는 허용한다.

33) 남한의 ‘생활기록부’에 해당되는 북한의 ‘생활 평정서’는 개인의 사상적 충성도를 핵심으

한류 수용을 곧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는 북한의 규범은 한류의 진입조차 거부감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낮으면 처벌도 가증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더욱 회피하고 있다. 한류 수용은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수세적인 자세를 넘어 반항적인 수용 태도를 일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류 영상물의 접근 기회마저 단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용의 서사에 있다. 극적 긴장감을 조장하기 위해 북한을 호전적으로 묘사하여 적의와 반항심을 조장할 때이다. ‘태양의 후예’처럼 북한 청년들의 인기를 많이 끈 드라마도 남북 군인들이 대치되는 장면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비록 드라마 일지라도 북한을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은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남한을 그릇되게 묘사하기에 상대에 대한 증오를 더욱 가증시키는 자극제와 같다. 남한 역시 북한처럼 화해를 도모하기보다는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되새기게 한다.

【그림 5-1】 스크린 속 남북 대립의 서사



출처 : KBS “태양의 후예”(위)와 영화 “코리아”(아래) 장면

로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신상 기록이다. 간부 사업과 진급, 당원 자격 여부 등의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폭력과 왕따 현상을 소재로 하는 내용은 북한에서 볼 수 없기에 충격을 더한다. 북한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남한은 오직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 사회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에 약자들의 삶은 항상 궁핍하고 차별당하는 이중적인 사회라는 선입견도 쉽게 지우지 못한다. 북한의 경우 긍정감화교양³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모범 사례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는 형식이 전반적이기에 남한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도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 남북의 수용 태도가 다른 것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코리아’라는 탁구 영화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갈라져야 하고, 서로한테 표현할 때도 약간 선이 있잖아요. 영화상에서도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느낌이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뭔가 희롱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태양의 후예’에서도 북한 군인들을 적대시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연구대상자 F)

이미 남한이 잘 사는 건 다 알아요. 생활 수준이 북한보다 높은 것도 다 알죠. 근데 북한의 시각에서는 잘 사는 건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잘살고 돈만 많고 하니까 삼각관계,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는 거죠. 남한 드라마를 볼 때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니까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죠. (연구대상자 H)

일부 청년들은 북한이 선전하는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발전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부조리한 사회라는 인식을 갖는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진 자가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점유해 개인주의적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온갖 극단적인 착취적 현상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34) 북한은 긍정감화교양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 일반화하는 것으로 일꾼들은 올바른 이해를 갖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전형적이며 생동하고 구체적인 모범적 사실들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신문, ‘긍정감화교양’, 2024. 01. 10.

(2) 또 다른 제어 장치: 부모들에게 향하는 응징의 처벌

북한에서 한류의 이용층은 청년들이다. 그렇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민감하고 조심스럽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 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자녀들의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사회적 경험이 미숙하고 체제의 속성도 미처 알 수 없기에 처벌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다. 부모들의 시선을 피해 친구들과 몰래 한류를 수용하다 보면 발각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사소한 실수가 벌미가 된다면 사회적 낙인을 찍히게 되고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다.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 수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들이다.

부모랑 같이 남한 영화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부모랑 보는 경우는 조금 선을 넘은 가족이죠. 그거는 그래요. 대부분 이제 큰 사고 날까봐 막는 입장이죠. 조금 도시 외곽의 농장 같은 데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다 엄격한 편이죠. (연구대상자 D)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남한 영화보고 이모한테 “우리는 왜 이리 못 살아요?”라고 물어봤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야, 죽겠으면 혼자 나가 죽어라, 왜 가족까지 다 죽일 거야”하고, 그리고 한번은 한국식으로 ‘이모 어디가요?’라고 물어봤다가 또 그냥 박살났죠. 북한은 말끝에 ‘요’를 안 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국 영화 못 보게 했어요. (연구대상자 A)

2024년 9월 4일 KBS가 입수한 북한의 내부 영상에는 평양시 대성구역 문덕고급중학교 여학생들의 한류 수용 적발 사례를 보도하였다. 16살 된 학생의 이름은 물론 부모의 이름과 직업 등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전부 공개하였다. 여학생의 부모는 교원이었는데 이를 두고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했으며 부모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같은 해 1월 BBC 뉴스에서도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담당 교원은 물론 학교 청년동맹 비서의 이름까지 공개해 연대적 책임을 물었다. 이처럼 한류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당사자만 문초하는 게 아니라 연좌제를 적용해 부모는 물론 소속된 기관의 관계자들까지 책임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

국가의 영역에서 규제하던 한류 영상물은 이제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한류 수용 행위를 제한하려고

전자기기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전자기기 이용 자체를 한류 수용과 연계 짓기에 제약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욕망은 언제나 규율과 단속이라는 또 다른 기제에 의해 조정된다.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와 범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³⁵⁾ 표현할 수 없는 언어는 생명력을 잃는 것처럼 가족 사이에도 한류는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금기어로 여기고 있다.

북한당국도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제5차 어머니 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은 “어머니들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명줄과도 같이, 피줄과도 같이 귀중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자녀들의 이색적인 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별난 옷을 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비사회주의적인 태도로써 이를 근절하는 실천적 자세만이 국가의 미래를 부흥시킨다고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자녀들의 정신 도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교양이나 사회 교양보다 가정 교양이기에 부모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부모에게 자녀의 통제를 위임하여 사적 공간에서 한류 접근마저 소멸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다.

5. 결론

북한에 한류가 유입된 지 어언 30년이 흘렀다. 분단 80년을 향해가는 변곡점에서 한류의 영향은 북한 사회변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가 어떤 양상으로 귀결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일었던 한류의 붐과 달리 북한에서 한류 현상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감시와 처벌이다. 한류의 유입 자체를 체제 전복 행위와 동일시 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한류의 수용 형식과 수용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평양과 접경지역, 내륙 지역에 거주하였던 연구 대상자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 청년들의 경우 일상에서의 한류 수용이 만연하였다. 외국과의 교역 활성화는 해외 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배양하여 한류의 수용 역시 다방면적으로 내재하려는 적극성을 유발하였다. 특히 한류 수용을 통해 각인되는 정서적 감정은 문화적 열의로 등극하여 미래를 표상하는 가치관으로

35)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p. 28.

발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점조적 네트워크는 한류 수용의 거침없는 촉매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리한 접근성은 누구나 한류를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의 조성으로 사회변화를 더욱 가속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반면 평양과 내륙 지역은 복합적인 수용 태도가 뚜렷하다. 북한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한류의 수용은 체제에 역행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북한의 규제와 규율은 청년들을 매개로 하여 일상의 영역을 구속하고 규범의 틀에 종속시키려는 의무성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의 정치적 해석에는 거리를 두지만, 문화적 접근에는 호의적이다. 한류로 파생되는 사회적 유행을 일상의 영역에서 적극 시도하고 구현하려는 의욕이 충만하다.

셋째, 한류 영상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서로 다른 가치관의 고착으로 설명된다. 북한에 적대적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는 자극적인 소재는 남한 사회가 오직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착취 사회라는 편견이 잔류한다. 물질만능주의적 시각이 남한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소중함보다는 개인의 영리와 탐욕이 판을 친다는 편견을 양산하였다.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이 지역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일괄적이지 않고 다층적인 편차를 보이는 것은 북한 사회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체제가 아무리 전체주의 국가일지라도 결코 획일적일 수 없는 것은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성이 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ICT 기술의 보급은 한류 수용의 다변화를 이끌었는데 개인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기저가 되었다. 전자기기 보유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한류 수용의 역동성을 태동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류 수용 자체를 체제의 저항적 요소나 체제 전환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에는 경계해야 한다. 한류 수용은 여전히 문화적 소비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크다. 한류 영상물이 북한에서 각광받는 것도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보편적 질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한류 영상물이 거부감보다 공감을 불러온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북한문화예술의 한계를 남한의 문화가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 중심적 접근에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북한 청년들의 시대적 열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 북한 청년들의 사고는 현실로부터 형성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 배급’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상의 모든 생필품을 자체로 부담하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던 체제의 선전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습관은 물질 지향적 사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형으로 표출되는 신분의 높고 낮음은 자연히 물질 우선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 세계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과감히 추구하려는 열의는 지속될 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짧아진 치마 길이와 어깨가 확연히 드러난 맨살은 결여된 사상과 이념의 빈 공백을 애써 메우려는 북한당국의 공여지책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 선동으로 누적된 피로감으로 해외로 향한 이들의 시선을 멈출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큰 열망으로 귀결되리라 본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체제의 불만은 가증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 수용의 다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남북의 문화적 화해를 앞당기는 대안의 모색도 절실하다고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Attitudes of North Korean Youth toward the Korean Wave

This study focused on the format and attitude of North Korean youth in accepting the Korean Wave and structurally explor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and class environments. To this end,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15 youths from across North Korea who had been members of North Korea's political organizations, the "Boys' Union" and "Youth League,"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defected after 2017. Despite North Korea's surveillance, the acceptance of the Korean Wave continued to take on a continuous pattern, actively utilizing roundabout means to seek out new cult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mply the following for North Korean youth in accepting the Korean Wave. First, it is expanding the base of the acceptance environment based on the network centered on point organization. The acceptance of the Korean Wave is connected to the cultural desire to pursue a new culture. Second, when the social status is stable, it emerges as a more gradual form of narcissism and plays a cultural leading role in North Korean society. The perception that the Korean Wave is a symbol of the future of North Korea was expressed evenly throughout. Thir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a product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and they result in differences in cultural expression forms. The theme of

negl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creates negative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generates rejection.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the Korean Wave is not one-way, but rather two-way in a complex form.

Keywords: North Korean youth, acceptance of Korean Wave, electronic devices, region and class, change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가. 단행본

김일성저작집, 제2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 2022.

김정일, “영화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김정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폐회사”, 로동신문, 2023.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천현식, “혁명의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한중모, 정선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나. 기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노동신문 사설』. 2012년 01월 30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서한.” 『노동신문』. 2022년. 12월. 28일.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은 중요한 정치적사업.” 『노동신문』. 2019년 12월 22일.

“망TV 다매체열람기 만방.” 『조선중앙TV』. 2016년. 08월 16일.

“당과 근로단체.” 『조선로동당규약』 제8장, 제56조.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김채원 외. 『예술과 정치』.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서울: 선인. 2013. p. 140.
- 나미수, 『질적 수용자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 59.
- 나미수.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 52.
- 이종택 외 옮김. 『마이애스의 사회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20. p. 112.
-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주)창비. 2020. p. 45
- 최윤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 2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청소년 정책 분석 연구』. 2022. p. 1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문화론』. 서울: 교육과학사. p. 24.
- 히라노 겐이치. 『국제문화론』. 김동명 역. 서울 : 풀빛. 2004. p. 84.
- 홍종욱. 『주체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2022년 가을. pp. 353-354.
- 홍장선. 『문화접변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한국학술정보. 2013. p. 41.
- 최용규.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 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3. p. 92.

나. 연구논문

-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19권 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5. p. 21.
-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통일연구원. 2013. p. 3.
- 조현성. “탈북자의 남한 문화예술 수용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16.
- 전미향.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p. 129.
- 정은이·이해정.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23. p. 21.
- 정은이. “북한 정보 산업과 스마트폰”, 『통일문제연구』, 2023. 제35권 2호, p. 38.
- 정경원 외. “중남미의 사회. 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35.
 정연식. “북한의 역사 인식”. p. 83.
 한성렬.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 2000.
 임종수.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언론정보연구』. 제47권 1호. 2010. p. 8.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년. p. 232.

다. 기타

“북한도 다채널화 및 시청료 징수.” 『아시아 프레스』. 2020년 06월 12일.
 “북한 1만 7000대 서버에 붉은별 4.0 적용.” 『NK 경제』. 2018년 10월 19일.
 “평양 시내 영상물 판매소서 美 애니메이션도 판매중.” 『뉴스1』. 2017년 07월 08일
 “평양의 삶.” 『KBS』. 2019년 08월 08일
 “북한, 휴대폰 회선 650~700만 추정...평양에는 와이파이망도”, 2022년 11월 15일
 “北, 스마트폰 우회 프로그램 ‘비둘기’입수.” 『데일리 NK』. 2021년 01월 20일.
 “北정권 정보통제 기법 갈수록 정교화.” 『연합뉴스』. 2017년 03월 02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선중앙TV가 방영하는 외국 영화의 편성프로그램 참조
 “사회주의문명국(강국).”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2년 01월 01일

3. 외국문헌

Sam, D. L. 「Acculturation: conceptual background and core componets」. John W. Berry. The Cambridge Han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 11.
 Hammersley, Martyn. & Atkinson, Paul.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p. 1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 32-33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발표 3

북한 시민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

김경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국제의료영역 객원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

- 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

김경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국제의료영역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서구 중심의 전형적 시민사회라고 함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발적 결사체라는 특성을 갖는다.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사적인 영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증폭시키고 응집시켜 정치적 공론장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민주적 정치과정과 정치제도를 강화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게 된다(김경미 2014).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국가 영역에 반하여 독자성·자율성을 가지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조직이나 그 기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를 일방적·획일적으로 포섭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와는 달리 사적 영역 또는 비공식적 부분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시민 사회적 욕구는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고 있었다(한승완 2014).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특성을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시민사회 맹아적 단계, 시민사회 전조가 되는 이차사회라는 이론적 입장이 제시되었다(서재신 1995, 21; 장경섭 1995). 동유럽 구사회주의에서 이차사회는 국가와 공식적인 분리가 불가능해 독립된 자율적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체제 전환의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했다(배정환 2006).

북한에서도 일찍이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감희 2021, 183-184), ‘반(비)사회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듯이 북한 나름의 이차사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비)사회주의는 북한 체제 지배 질서에 위배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 출범 초기부터 비사회주의 행위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대한 감시통제 체계가 존재해 왔지만, 1980년 북한 경제의 침체와 농민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비사회주의 개념의 확대, 1990년대 장마당 경제와 대외문화 유입에 의한 반사회주의 확산 등 반(비)사회주의 발달은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홍정길 2024, 10).

본 연구에서는 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 시민 사회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북한 MZ세대가 경험하는 반(비)사회주의 현상 즉 시민 사회적 구성요소는 어떠한지, 시장과 대외문화, 사적 관계망, 의식 영역을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특성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북한 MZ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아동기부터 시장경제 시대를 몸으로 겪으며 자란 20~30대 사이의 젊은이들로서 지배담론에 반하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장마당 세대로 규정하였다.

II. 문헌 고찰

1. 북한 시민사회 관련 연구

북한 시민사회와 관련된 연구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북한에서 가까운 시일에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내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논문이 있다. 그 이유는 사적 영역의 정치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종교 단체 등이 당의 통제와 감시하에 있어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표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다만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이 대중적 반감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조직화와 자율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안청시 외 1994:). 또한 북한의 경우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극심한 억압으로 인해 ‘빈사’의 시민사회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북한에서 시민사회는 이미 ‘근절된’(eradicated) 상태 또는 ‘뿌리 뽑힌’(rooted out) 상태로 규정하기도 한다(박정원 2013). 다른 유형의 논문은 북한 체제의 이차사회, 비공식적 관계망을 주목하며 잠재적 시민사회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이차 사회를 분석하는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의 의식 세계,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 생활세계에서 이차적 요소들의 생성과 확산은 중대한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과 만날 때 시민 사회적 질서 형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장경섭 1995). 또한 북한에서 아직 비공식적 관계망은 사적인 이해와 이익의 관계에 머물러 있고, 담론 역시 일상의 절박한 쟁점인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공적 담론의 대항 담론”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공적 담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장세훈 2005; 조한범 외 2010, 46). 또한 조선노동당의 비밀문건 분석,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북한 시민사회 실태를 분석하며 잠재적 시민사회를 설명하고 있다(정원희 2024; 전순영 2024).

마지막 유형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는 논문을 통해 시민사회 잠재성을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주민의 국가신뢰도 하락, 결속력 약화, 빈부격차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 개인주의 확산, 물질 중시 등은

정치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이우영 2024). 북한 시장 경제의 발달로 북한 도시민들의 사적 관계망이 활성화되면서 공적 관계망 위축과 기능의 저하, 공적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이 이에 포섭되고 통합되면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장세훈 2005).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외국 논문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가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통제를 일상생활에 주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체제 정통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심은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폭될 수 있다는 것(Dukalskis et al. 2020), 북한 시장에서 어떻게 공식 담론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도전하며 ‘비공식 담론’(hidden transcripts)을 일상화하는지 분석하며 체제 변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논하는 논문(Joo 2014)들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들은 북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잠재성을 주목했다면 본 연구의 차별점은 북한 잠재적 시민사회가 머금고 있는 시민사회적 요소(속성)들을 시장경제 영역, 대외문화 영역,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지배담론에 반하는 의식 영역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시민사회적 요소와 비교 분석하며 그 특성을 탐색한다는 데 있다.

2. 사회주의 이차사회: 시민사회적 요소

이차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식적 규범과 관습 아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차사회는 사회주의 체제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국가-사회 통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식 담론에 반하는 사적 담론이 펼쳐지는 공간, 개인과 집단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차사회는 국가-사회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영역으로까지 발전할 수 없었지만, 고르바초프에 의한 체제 전환기에 구체제 위계적 질서 해체, 자율적 정치·경제 질서 도입을 위한 독립적, 자발적 사회그룹 및 사회운동단체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었다(배정환 2006). 본 연구에서는 망아의 시민사회인 이차사회를 시민사회적 요소라는 렌즈로 설명하려고 한다.

헨키스(Elemer Hankiss)는 헝가리에서 국가의 공식 이념과 정책 목표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행위를 이차사회로 명명하고 그것을 시민사회 속성으로 본다(Hankiss 1990). 이차사회는 암시장 등 시장경제 속성을 갖는 제2경제영역, 지배 문화에 맞서는 대항문화-대안문화로서 제2문화영역, 공식적 미디어가 침묵하는 정보가 유통, 소비되고 소문과 가십이 교환되는 관

계망인 제2공공 영역, 지배 이념이나 사상이 미치지 못하는 대중의 의식 또는 세계관을 나타내는 제2사회 의식, 협회나 스포츠 클럽 등 제2사회활동 영역 등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탈)국가적 소요들이 존재하는 ‘비공식적 사회 공간’ ‘이차적 사회 공간’을 일종의 잠재적 시민사회로 파악하면서, 잠재적 시민사회 구성요소로 이차 경제, 이차 의식, 이차 사회(관계) 등을 꼽는다(정경섭 1995). 스타(Starr)는 소련에서 산업화로 초래된 도시화와 통신수단 발달 등에 주목하며, 어떤 요소가 시민사회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starr 1988, 안청시 외 1994, 147에서 재인용). 즉 산업화로 인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당-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적 영역 확장, 라디오, 녹음기, 전화 등 통신기기 발달로 외부 세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또 교육 수준의 증가로 사회현실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일반대중의 의식 향상 등 요소가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를 실시하자 자발적 결사체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 형성과 발달을 위한 요소로 비공식적 부분의 확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샘슨(Sampson)은 비공식적 영역을 관료 기구의 부패, 뇌물, 특혜 등, 경제영역에서의 지하 경제권 형성, 문화영역에서의 지하유인물과 루머 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공식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 개인 생활 중시 등의 요소가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다(sampson 1986-1987). 또한 쉘라펜토흐(Shlapentokh)도 소련에서의 사적 영역의 확장과 그 영향력을 강조한다(shlapentokh 1989). 그에 따르면, 공적영역은 국가로 구성된 영역,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로 이루어진 영역, 사적 영역은 개인과 가족, 친구, 친척 등으로 이루어진다. 스탈린 시대 이후부터 소련에서 사적 영역이 공적영역을 침식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가 매개자 역할을 했고, 사적 영역에 의해 국가가 잠식될수록 시민사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사회 존재와는 애초부터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주의 내에서도 시민사회 요소가 싹트고, 국가 기능이 약화된 특정한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이차사회 즉 시민 사회적 요소를 구성하는 시장경제 영역, 대외문화영역,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공식 이념에 반하는 의식 영역을 중심으로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를 탐색하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의 준비와 자료수집

현상학의 목적은 체험을 변형시켜 그 본질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어떤 가능한 인간 경험이 현상학적 탐구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신중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상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이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체험한 그대로 상기하는 방식으로, 기술한 경험에 대해 가능한 해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상기해야만 한다(신경림 외 2004, 235).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현상학적으로 묻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그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236).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문제는 추측과 선이해, 가정 등에 의해 현상학적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현상의 본성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탐색하려 하는 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형적 지식체를 ‘괄호 치기(bracketing)’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체험적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체험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밝혀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MZ세대 중심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탐색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현상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깊은 통찰이 있는 탈북민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 한류 및 외국 문물을 경험한 대상, 김정은 집권 이후 2013~2020년 사이에 북한을 떠난 대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 분포의 균형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 표집에 부합한 연구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고, 그들의 일반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2〉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 례	구 분	성 별	나 이	학력(재북당시)	살던 지역
1	E	남	30 대	대 졸	평양시
2	F	남	20 대	고 졸	신의주시
3	G	남	30 대	고 졸	청진시
4	H	남	30 대	대 졸	청진시
5	K	남	20 대	고 졸	평성시
6	M	남	30 대	대 졸	함흥시
7	N	남	30 대	고 졸	해주시
8	P	남	30 대	대 졸	평양시
9	Z	여	30 대	대 졸	청진시
10	X	남	30 대	대 졸	청진시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2024년 6월~8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면담 시간은 60분~90분이었다.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정부가 규제하는 불법 경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한류 등 대외문화를 유통하거나 소비한 적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반감을 공유한 적 있는지? 어떠한 의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할 때, 전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우선하였고, 면담 중에는 참여자의 비언어적 요소까지 관찰하면서 겪은 그대로의 체험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특히 면담 도중 참여자의 진술이 애매모호하게 다가올 경우, 다시 물어보며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하려고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했고,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면담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2회 정도 전화 면담을 더 진행하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연구자의 통찰 등을 별도로 기록하며 자료를 생성해 냈다.

2. 자료 분석 방법

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연구 주제의 본질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자료수집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 현상학이 다뤄야 할 체험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현상학적 판단중지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판단중지’는 겪은 그대로의 현상과 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현상학적 절차다(신경림 외, 2004, 34). 겪은 그대로의 연구 참여자 체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 자신이 가진 가정이나 추측 등 선형적 지식체가 현상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연구하는 내내 ‘판단중지’를 자각했다.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 Giorgi의 절차를 따라 1단계에서는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sense)하기 위해 기술한 질적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가능한 한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를 면담자의 체험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자의 이해나 가정, 추측에 ‘괄호 치기’ 하며 고유한 체험 그대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이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하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체험 전체에 대한 감을 얻은 후 2단계에서는 체험의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면담자의 진술에서 자연스럽게 의미 단위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텍스트를 읽으며 면담자의 언어로 의미 단위를 규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의미 단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공통적인 의미 단위끼리 묶었고, 매 묶음마다 의미 단위를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4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 단위를 시민 사회적 요소에 대한 구조적 서술로 통합하였다. 즉 연구자는 MZ세대의 시민 사회적 요

소의 의미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하는 내내 연구 참여자 각자의 체험을 현상 그대로 보기 위해 질적연구 학자들이 제시한 보편적인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가 진행되는 내내 연구자의 선이해, 가정 등을 곁집으면서 현상학적 절차를 따랐다.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을 진술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 장소와 시간, 면담자와 관계 등에 주의를 기울였고, 또 면담 과정에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관찰하며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는 언어와 그 언어에 함축된 웃음과 음조, 비언어적 요소 등 정서적 맥락까지 기록하여 연구 참여자 이해에 통합하려고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될수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관찰자의 위치에서 경청하였고, 비대면 면담(2차 면담) 때에는 참여자가 진술한 언어의 뜻과 감정 등을 좀 더 명료하게 하려고 반영적 질문을 하며 개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 2회 이상 검토와 논의를 거쳐 연구자의 주관성, 편향성을 줄이고 질적자료 분석의 신빙성과 명증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끝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현상의 맥락적 적합성, 연구 결과가 보편화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될수록 많은 자료를 생성하고 포화시키려고 했다.

IV. 연구 결과

MZ세대 연구 참여자 시민 사회적 요소 체험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면담 자료와 전화 면담, 기타 기록한 현장 노트 자료를 토대로 진술문을 통합하였고, 지하경제 영역, 대외문화 영역, 비공식적 네트워크, 의식 영역으로 구분하고 시민 사회적 요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 진술한 내용의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여 30개의 하위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범주의 속성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 체험의 핵심 의미는 8개, 즉 시장경제영역: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황금만능주의 확산, 대외문화영역: 정보습득, 대외문화 모방/외부세계에 대한 동경)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끼리끼리 관계, 활동/변질된 대학문화-군대문화, 의식영역: 체제 비판적 사고, 의식의 변화/체제 저항적 결사체 조직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5〉 MZ세대 시민 사회적 요소 분석

계 층	구 분	핵심 의미	하위 의미
MZ세대	시장경제 영역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	불법 장사 위해 직장 조직문화 이탈 군대로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 수단 방법 다해 돈벌어야 한다는 욕망 강해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 확산 돈이 곧 충성심, 애국심이라고 인식 왜 충성 해야 하나? 체제 불신 깊어 돈이 내 목숨 지켜준다고 인식
		황금만능주의 확산	대외문화 통해 다양한 정보습득 대외문화 통해 낭만적 사랑, 자유 꿈꿔 20대는 한국문화를 모방하고 즐기는 세대
			아동기부터 외국에 대한 동경 싹터 친구끼리 한국 PDF 공유, 사회변혁의 식 싹터 한류 소비 계층끼리 공감대 형성 북한 체제 미래 없다고 인식, 탈북 단행 친구끼리 반체제 의식 공유 친구끼리 김정은에 희망이 없다며 탈북 모의
	대외문화 영역	정보습득 대외문화 모방	오롯이 생존만 관심, 국가는 나와 상관 없어 안전을 위해 친구끼리 대화를 녹음하기도 한국 드라마를 선전용, 광고용으로 느 끼기도
			성적과 실력을 돈으로 사는 대학문화 최우선이 생존, 군대는 차선인 세대 군대는 지옥 가는거라고 느끼며 기피 “부모가 군대생활, 아들은 군사놀이” 제대군인을 3년 석기, 종신 석기라고 조롱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 사회라고 인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끼리끼리 관계, 활동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 사회라고 인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변질된 대학문화-군대문화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 사회라고 인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의식 영역	체제 비판적 사고 의식의 변화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 사회라고 인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저항적 결사체 조직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 사회라고 인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1) 시장경제 영역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동을 보냈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는 지하경제와 불법의 일상화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MZ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 군인, 직장인, 고등중학교 졸업생들로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불법 경제활동에 대해 진술한다. 직장인은 배급도 월급도 없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큰돈을 벌면서 직장문화, 규율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다. 군인 출신도 군대에서 먹고살기 위한 불법 경제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어 큰돈을 벌었던 경험을 진술한다. MZ세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절대빈곤을 경험하며 수단 방법 다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망이 강하다.

불법 장사 위해 직장 조직문화 이탈

조직에 묶어놓고 강연회, 생활총화, 노력 동원만 시키니까 저희가 공장에 다닐 이유를 못느끼는거죠. 장마당 세대는 직장의 조직문화, 규율, 상식 같은 거 몰라요. 돈만 찢러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노골화되다 보니 그런 거에 매이지 않지. 출근 안하고 8.3 노동자로 돈만 내고 불법장사하며 큰돈을 벌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게 없어요. (N)

제가 배를 사서 운영하면서 사회적 과제라든가, 뭐 충성자금이요, 생산계획이요, 왕창 돈을 걷어가요. 그 돈을 내야 바다에 나가는 출입증을 떼는데, 그래 저는 라진에서 배를 탈 때 그냥 해양 초소 군인이나 보위부에 뇌물 주고 위조 출입증 만들었어요. 국가에다 내면 한 40% 내는데, 뇌물을 줄 때에는 10% 정도만 주면 되니까요. (G)

군대도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

군대도 불법을 안하면 먹고 살수 없어요. 대대장이나 정치지도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몰래몰래 대원들을 돈을 벌만한 곳으로 내보내요. 그돈으로 간부들이 먹고 살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밤에 도둑질 나가서 몇천만원 만들어 대대장이나 정치지도원한테 담배사주고, 돈을 바치고 신임을 얻었죠. (F)

수단 방법 다해 돈 벌어야 한다는 욕망 강해

그냥 뭐를 하든지 돈 많고 싶다. 제가 김책공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히 공부했던 게 권력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권력을 잡지 못할 경우, 돈을 벌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럼 어떤 불법이 있을까? 정말 돈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고요. (H)

군대에 가서도 어떻게 하나 불법이든 뭐이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군대 생활이 쉬워져요. 군대서 당원이 되려는 목적도 권력을 질 수 있는 발판이니까, 입당해야만 제대되어 간부로 써주고 하니까. 한자리를 차지해야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F)

황금만능주의 확산: MZ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처럼 ‘전쟁이나 콧터져라.’ ‘이 세상이 망해라’라고 불평하기보다 목숨 걸고 돈 벌어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신념이 강해 충성심보다는 돈이 최고, 돈이 곧 애국심, 충성심, 개인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돈이 곧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 권력을 질 수 있고, 또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돈은 내 목숨을 보증하는 보험,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돈을 갈구한다. 이렇듯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고질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황금만능주의 의식이 강하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 확산

이 세대는 세상이 왜 이러지? 망해라, 전쟁이나 터져라, 이렇게 불평불만 하기보다는 생존 문제에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성공하길 바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지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마되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의식이 있어요. 장마당 세대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돈이만 다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어요. (N)

북한에서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왜냐하면 돈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돈이 곧 권력이었고 파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뭐 뱃속에 있던 아이도 나오자마자 돈 달라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돈을 중요하게 여겨요.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살아요. (M)

돈이 곧 충성심, 애국심이라고 인식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비리를 많이 해 돈을 더 많이 챙기냐? 그것을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끌어와 충성 자금으로 바치고, 뭐 금전적인 어떤 거를 많이 해결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충성심의 평가 기준이 돼 있었지요. (N)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입당폰트가 내려오잖아요? 이 폰트가 결국은 돈에 팔리더라고요. 이번에 당에서 군자금이 필요하고 뭐 군량미로 옥수수 10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충성심으로 인정받아 입당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으로 충성심이 평가되고 입당도 하는거죠. (P)

왜 충성 해야 하나? 체제 불신 깊어

아, 나 하나만 잘 살자, 내 집안, 내 가족, 내 형제가 잘살아야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국가에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나에게 차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왜 충성해야 하나? 난 내 멋대로 돈벌며 잘 살겠다. 너무 얽매여 사는 게 귀찮았고. (G)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되고), 또 국가에서 하라는 것들에 대해 자꾸 불만이 생기고 국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장사를 하면서 북한 전역을 떠돌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 실체들이 너무 진절머리 났어요. (N)

돈이 내 목숨 지켜준다고 인식

어렸을 때부터 생존하자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마약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비싼 핸드폰을 3~4개 사놓아요. 내가 장사하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집에서 이 핸드폰을 팔아서 날 구출해 달라, 이렇게 생명을 담보? 불법 장사하다가 위험하게 되면 이것 팔아서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재고를 하나 마련해 놓죠. (G)

2) 대외문화 영역

정보습득, 대외문화 모방: MZ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한류와 대외문화를 즐기며 모방하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던 경험을 진술한다. 장마당과 함께 성장한 세대는 한류 등 대외문화를 통해 케이팝, 서울말(한국말)을 배우며 낭만적인 연애, 사랑, 자유를 꿈꾼다. 특히 20대는 30대보다 훨씬 더 거리낌 없이 대외문화를 모방하며 내면화·생활화하며 성장하는 세대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주인공의 휴머니즘, 이성을 대하는 태도, 멘트 등을 모방하며,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게임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을 아이디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의 자유, 풍요를 선전용, 광고용이라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다.

대외문화 통해 다양한 정보습득

사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정보까지 캐치하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실례로 편의점에서 캔값 500원을 계산하네? 그러면 이 캔값이 북한 화폐 기준으로 2~3천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싸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캐치할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거든요. (X)

(간부, 부유층 자녀) 금성학원 애들이 USB 소비하고 유통이 빠르고, 애들은 정보유통도 빨라요. 예를 들어 보위부에서 불시 검열한다, 하면 애들은 모든 거를 철저하게 대비해 놓고 있어 단속에 잘 걸리지도 않죠. 한국 영화에 나오는 화려한 거리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캐릭터, 뭐 어느 정도는 잘 산다고 인식은 했지만. (P)

대외문화 통해 낭만적 사랑, 자유 꿈꿔

USB를 보는 애들은 대개 간부 자식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자식일 수도 있고, 여유가 있어야 여가생활도 하니까요. 외국영화를 보면서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좋았어요. 자유롭게 영화관서 팝콘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너를 좋아한다, 자유? 낭만적 사랑? 이런 것이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K)

제가 경험했던 동생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세계가 문란해요. (20대) 애들이 게임하는 거를 보면 서로 모르는 친구들하고 키스도 하고 술 마시고, 이게 그냥 게임놀이 중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도 바로 나가지 않고, 군사복무도 기피하고, 그러더니 되게 바른 생각을 안 갖고 있구나. (Z)

20대는 한국문화를 즐기고 모방하는 세대

(30대)는 한국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살짝 부끄러워서 (따라) 하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놓고 좋아하는 세대가 나오거든요. 10년 아래 친구들은 게임에서 아이디랑 대놓고 수지 뭐 이렇게 쓰는 애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면 걸그룹 이름을 아이디로 쓰는 거죠. 애네는 한류 문화를 즐길 자세가 돼 있는 세대고. (X)

20대가 한류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멘트라든가 주인공의 어떤 휴머니즘, 이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모방을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 좀 더 문화적으로 나이스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게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이 한류의 러브 장르를 좋아하는 게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X)

한국 드라마를 선전용, 광고용으로 느끼기도

제가 대학때 돈많은 집 애들과 어울리면서 USB 홍콩영화, 미국 영화도 많이 보고 한국 영화도 보았어요. 저쪽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구나? 약간 CF처럼 선전용? 광고용? 느낌이죠. 예를 들어 야~ 한국 사회는 저렇게 잘 사네? 저기 여자들은 저렇게 예쁘네? 전기불이 밝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CF 같은 거죠. (H)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아동기부터 한류 등 대외문화에 노출되며 외국에 대한 동경을 싹틔우며 성장한 MZ세대 연구 참여자 경우 충성심 같은 신념이나 정서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다. 즉 일부 참여자는 유치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위대성 교양, 혁명 교양에 내몰리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고 주입받지만, 충성심은 싹트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학 시절, 자아 정체성 확립

하고 독립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년기에 북한 체제가 정말 나쁘구나, 내가 사회 변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찰하며 질문한다. 반체제 감정을 품기도 하고, 또 탈북을 단행하기도 한다. 한류를 즐기는 친구들끼리 세계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설픈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아동기부터 외국에 대한 동경 싹터

7살 때 친구 집에 갔다가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랑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고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때부터 외국문화를 많이 보면서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위대성 교양을 배우면서 딱히 그런 충성심은 안 생겼죠. 그때 들었던 소문이 대한민국에 가면 그냥 청소만 해도 한 달에 2000달러 이상을 번다는 얘기였거든요. 한달에 2000 달러를 번다니 놀라는 거죠. (K)

친구끼리 한국 PDF 공유, 사회변혁의식 싹터

(친구가) PDF로 된 어떤 텍스트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 파일에 한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진짜 이 체제가 나쁘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젊은 혈기다 보니까 생각의 전환도 빠르더라고요. 대학에서 철학 공부도 했었으니까 뭐 사회적 변혁을 한번 일으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죠. (E)

한류 소비 계층끼리 공감대 형성

대부분 드라마를 같이 보는 친구들은 공유가 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관계인데 여기서 비유하면 같은 약쟁이들끼리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비밀을 어느 정도 공유한 사이고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함께하는 사이, 저 스스로는 앞섰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꺼리는 게 많은 그런 관계죠. (X)

드라마도 함께 보면 어느 정도 신뢰라는 어설픈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이 없다가도 어떤 한류라든가 이런 데서 접속 딱 돼가지고 서로가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등장) 배우나 무슨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급속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X)

북한 체제 미래 없다고 인식, 탈북 단행

외국 문물에 많이 접하면서 구조적으로 이 체제에서는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탈북 결심을 더 굳히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저희집이 토대가 안 좋아요. 제가 김정일 정치대학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그때부터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되고 불신하게 되더라구요. (M)

3)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끼리끼리 관계, 활동: MZ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김정은 체제는 나와 상관이 없으며, 김정은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결론은 속임수, 수탈이라고 느끼며 등돌린다. 이 세대는 친한 친구끼리 반체제 의식을 공유하며, 희망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노예로 사느니 죽더라고 한국으로 가자며 탈북을 모의하기도 한다. 그들은 친구들과 대외문화를 즐기며 불평불만을 공유하는 경우, 누군가의 고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이 확장된 공간에서 대외문화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MZ세대이지만, 본능적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이 내면화되어 있다.

친구끼리 반체제 의식 공유

리과대학교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북한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부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 친구가 저를 믿고 북한의 어떤 나쁜 점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이러면서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원했던 건 뭔가 반감을 가진 친구들을 섭외해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 (E)

친구끼리 김정은에 희망이 없다며 탈북 모의

저와 함께 탈북을 계획했던 가족은 평양 최고위직에 있다가 연좌제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김정은이를 마음대로 비난하고,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 이 새끼는 또 4대를 물려주려고 할 거고, 어차피 여기서 사는 애들은 다 노예다, 여기에 있어봤자 희망이라는 게 없다,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한국) 가야 된다. (E)

오롯이 생존만 관심, 국가는 나와 상관없어

북한에 삶의 여유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시그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어떻게 먹지? 내일 자고 깨면 어떻게 밥을 먹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대화를? 이제는 국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점점 무뎌가는 거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도 해왔기 때문
예요. (N)

새로운 정책 변화가 나타나도 체감상 드는 그 어떤 느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정책이 말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결론은 계속 채찍질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핵이든 자력갱생이든 무슨 정신이든 그런 데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국가 정책에 관해 화폐 교환을 할 때 거의 칼만 안 들었을 뿐 그냥 몰수구나 라는 걸 느꼈고 (X)

안전을 위해 친구끼리 대화를 녹음하기도

친구들끼리도 서로 혹시 고발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거(한류) 볼 때도 저도 물리지(고발당하지) 않으려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녹음을 해놓는단지도, 나중에 어디다 말한다면 너, 나랑 오늘 같이 죽는다, 먼저 말하든 어쩌든 해봐라, 하면서 녹음하는 거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경계는 하지요. 아무리 친구라 해도 믿을 수 없지요. (G)

변질된 대학문화-군대문화: MZ세대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황금만능주의 문화를 확장 심화하며 기존의 국가 질서와 관념을 깨버린다. 그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느끼며 병역기피 문화를 만들어낸다. 군대 생활을 돈으로 대신하며 ‘부모가 군대 생활하고 아들은 군사놀이 한다’라는 시대어를 만들어낸다. 또한 군대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머리가 굳어진 상태의 제대 군인을 석기 시대에 빗대어 ‘3년 석기’ ‘종신 석기’라고 조롱하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한 대학에서 성적과 실력을 돈으로 사며, 교수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학생으로서 예의, 교수의 밥그릇을 학생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간다.

성적과 실력을 돈으로 사는 대학 문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온다,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대학 가서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학점 받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도덕 없는 짓이다,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 그

예의라는 게 교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교수들의 수입은 결국 학생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돈으로 성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심해요. (P)

대학생들은 돈을 내고 좋은 성적을 따요. 그런 관행은 내가 다닌 공대도 같고 사범대학도 같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같고, 교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험이란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 돈을 많이 낸 학생이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오면 괜찮지만, 성적이 낮을 경우 따로 불러다가 시험지를 다시 쓰게 해요. 교수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지. (R)

최우선이 생존, 군대는 차선인 세대

대학생들은 군대 가는 거 차선이에요. 지금은 훨씬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 되니까, 나는 보위부라든지 정권 기관 쪽으로 가서 권력으로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졸업 후 입당을 빨리 하기 위해 군대를 나가겠죠. 내가 생존을 위해 미래를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간부를 할지? 과학자가 될지? 이렇게 하면서 선택이 바뀌지요. (E)

저는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과연 내가 10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더 최우선이 될까? 또 출세를 위해 군대 간다면 편한데로 갔다가 빨리 제대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K)

군대는 지옥 가는거라고 느끼며 기피

저희는 군대 가는 거? 그냥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나가면 먹지 못해 허약 걸리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군사 복무를 하고 돌아오면 돈도 없고 뭘 하겠습니까?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군사동원부 쪽에다 돈을 주고 군대 안가려 해요. 아들이 군사복무 편하게 하려면 돈을 보내야 하니까 부모가 죽어나죠. (G)

저희 장마당 세대 때는 돈없는 애들이나, 공부 못하고, 뺨없는 애들

이 군대 나가는 걸로 돼있어요. 북한이 의무병력제라고 하지만 평양 시내 대학이나 중앙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군대에 안가요. 많이 문란해져 가지고 비리가 엄청 심했고, 한창 사회가 썩어 문드러질 때였죠. 그렇게 무법천지 체제가 안 무너지니 신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H)

“부모가 군대생활, 아들은 군사놀이”

진짜 군대 생활은 부모들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애들은 군복 입고 군사놀이 가고, 부모들이 등골이 휘게 돈 벌어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대대가 부업할 수 있는 콩 종자 300키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한두 달 놀다가 콩종자 300키로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진짜 군 생활하는 건 부모들이 하고 애들은 가서 군사놀이 한다라는 일화가 유행해요. (N)

제대 군인을 3년석기, 종신석기라고 조롱

(석기라는 말은) 돌도구를 쓰는 그 단계에 진화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군에 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인간관계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야 되는데 자꾸 우정으로 가려고 하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군복무 풀로 채우고 오면 개네를 무슨 3년 석기, 5년 석기, 그렇게 부르고 평생 어떤 애는 개선될 가망이 없어. 그러면 종신 석기. (X)

4) 의식 영역

체제 비판적 사고, 의식의 변화: MZ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과 같은 가치관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가치들은 형성되지조차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들은 대학 시절에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맞나?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인 구조인가? 북한이 누구나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인가? 비판적 질문을 던지며 성찰하게 된다. 그들은 새파랗게 젊은 애(김정은)가 세습으로 정권을 침탈했다고 여기며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비교 관찰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개인 중시, 풍요를 추구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존엄성이 건드려질 경우, 기존 세대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고 조직적으로 복수하려는 심성도 가지고 있

다.

체제 의심, 체제 불신 깊어져

진짜 새파랗게 젊은 애가 수령으로 나선다고? 갑자기 김정은이 수령이 된다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왕조 국가였나?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상당히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컸죠.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3개월 만에 북한에서의 가치관? 이런 신념이 몽땅 붕괴돼 버리고 하다 보니까 탈북 결심할 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좀 미쳤던 것 같아요. (P)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살고 있냐?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지, 괜히 짧은 혀 때문에 진짜 그 귀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E)

자본주의는 인간 중시의 사회라고 인식

친구가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약점? 왜 계획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단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인간을 위해 잘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사회다,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었죠. (E)

제가 상상한 자본주의는 길가는 사람 코 베가고 하품하면 이빨 뽑아가고, 길에서 싸우면 말려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라디오로 지역별로 112 출동 시간 몇분 몇초라는거 들으며 한국이 치안도 좋구나,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동경하며 탈북을 감행했던 거죠. (M)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세대

저희 세대는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이 더 커요. 저희 세대는 뭐 사회주의 국가? 집단주의? 어떤 그런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개인주의, 개인 중심이지요. 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도 맞지도 않고 이제는 뭐 그냥 조직 생활도 돈으로 다 하잖아요? 개인 중심으로 능력자들을 찾아요. (N)

개인주의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하고 정상회담하고 통일된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한국말로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여기서라도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즐겨볼까? 이런 거예요. (G)

인간의 존엄성 자각하는 세대

나도 사람인데 왜 때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감이 컸어요.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이런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우리는 권력은 없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혈서로 복수전이라고 썼지.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무조건 복수하겠다고, 내 주권을 지키겠다고, 그거로 저희가 국가 보위부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친구는 다 죽고 집도 다 망했어요. (F)

저항적 결사체 조직: 이과대학 출신 연구 참여자는 대학 선배들이 체제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했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 진술한다. 선배들은 국가과학원 간부직 자녀들로 재학 중 스터디 형태의 조직을 결성했지만 밀고에 의해 전원이 처형되었다. 한편 군인 출신의 연구 참여자는 심각한 군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구 세 명이 혈서로 ‘복수전’이라는 결사체를 조직하였음을 진술한다. 그들 역시 체제 전복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밀고에 의해 국가보위부에 감금되었고, 그 사건은 김정은으로부터 방침을 받은 특별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김정은은 아주 위험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그 청년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군복무를 계속하도록 하라고 방침을 내렸지만, 두명은 보위부에서 의사문사하고 한명만 살아서 탈북하게 된다.

대학생들 사회 변혁 목적으로 결사체 조직

저의 할아버지 친구분이 중앙당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 경질당한 사람이있어요. 그분이 대학생들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반정부 조직들? 결사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 대학(리과대학)에서 대학생들 몇명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결사체를 조직했는데, 그들은 모두 국가과학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

들이다, 그들이 나중에 사회를 뒤집어엿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딱 뒤통수 치면서(고발하면서) 결국은 조직이 와해가 됐고 다 잡혀 처단되었다고 해요. (E)

군대 폭력 방어 수단으로 결사체 조직

제 친구 세 명이 혈서를 썼어요. 우리를 건드리는 거는 복수하자 이런 의미로 복수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관이나 부대원들을 복수한다는 의미로 혈서를 썼어요. 그것이 국가 보위부와 중앙당까지 올라가서 2014년 2월 17일 김정은의 비준 과업이 내려 왔어요. 이 동무들의 행동은 재미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동무들을 잘 교양하여 우리 대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뭐 체제를 위협하는 조직? 혈서를 쓰고 구테타를 준비한다? 이런 거로까지 해가지고 국가 보위부에 체포되었어요. 저희 친구 두 명은 거기서 죽었는데, 저도 다 죽었다고 못 산다고 군대 병원에 보내졌어요. 군대에서 폭력이 심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 혈서까지 쓰고 뭉쳤죠. (F)

V. 논의

공포통치와 사상주입으로 체제를 일방적·획일적으로 확립하려는 절대권력자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사회 비공식적 영역에서 반(비)사회주의가 일상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비)사회주의 현상을 사회주의 국가 시민 사회적 요소라는 개념적 틀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이차사회를 설명하는 시장경제 영역, 대외문화 영역,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의식 영역 등 비공식적 영역에서 생성되는 잠재적 시민 사회적 구성요소가 북한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장경제 영역에서 불법 경제활동 일상화, 황금만능주의 확산 등 공식 담론에 반하는 시민 사회적 요소가 발견된다. MZ세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불법이 일상화된 사회환경-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불법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생존 지향적 불법 경제 활동에 몸 담으며 돈이 충성심-애국심을 대체하고, 돈이 최고가 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즉 충성심-애국심과 같은 공적 가치보다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몰두하며 큰돈을 쥌 수 있는 권력을 탐하기도 한다.

다음, 대외문화 영역에서 한류 및 외국영화, 드라마, 가요 소비를 통한 정보와 지식습득,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등이 발견된다. MZ세대는 아동기부터 한류 및 대외문화를 접하며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세대다. 그들은 대외문화를 즐기는 세대로서 패션스타일, 헤어스타일, 사랑(연애), 서울말(한국말) 등을 모방하며 몸으로 살아내는 세대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외국에서 살고픈 꿈을 꾸지만, 일부는 한국의 자유와 풍요, 여가생활 등 자본주의 이모저모를 북한의 선전 선동처럼 가짜일 거라고 불신하며 믿지 않는다.

다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MZ세대 끼리끼리 관계와 활동 공간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문화 생활양식이 전파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MZ세대는 돈으로 성적과 실력을 사며, 교수에게 뇌물을 봉납하는 것을 학생으로서 예의라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간다. 군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며 기피하는 병역기피 문화, 돈으로 군대 생활을 대체하며 “군대생활은 부모가 하고 자식은 군사놀이” 한다는 시대어를 유행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과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현실에 무지한 제대 군인을 석기 시대 사람에 빗대어 ‘3년 석기-5년 석기-종신 석기’라며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사적 공간을 공유하는 친한 친구끼리라도 불신과 경계심은 늘 거두지 않는다. 일례로 함께 한류를 즐기면서도 상호 고발하지 못하도록 녹음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쌓는다.

끝으로 의식 영역에서 체제 비판적 사고와 의식의 변화, 저항적 결사체 형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MZ세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대학 시절에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맞나?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인 구조인가? 북한이 누구나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인가? 비판적 질문을 부모님에게 던지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말라, 세 치 혀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질책을 들으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한두 명의 친한 친구끼리, 또는 자기 스스로 현실을 성찰하며 자유와 풍요의 자본주의를 인간 중시 사회로 동경하며 개인주의 삶을 추구한다. 특히 비가시적 영역에서 ‘비밀조직’으로 단기간에 존재하다 절멸된 자발적 결사체가 발견된다.

MZ세대 중심의 시민 사회적 요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문제인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체제 불신, 충성심-애국심 변심, 불평불만, 조롱, 자발적 결사체 등 의식 변화와 함께 사회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조차 공론화되지 못하고 담론이 무수히 파편화되어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요인을 기반으로 동유럽 사회주의와 북한을 비교 분석하며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다. 1970~1980년대 소련은 외국 도서와 신문, 잡지 등이 팔렸고 외국 방송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단파 라디오도 마을 가게에서 살 수 있었고, 일반인도 돈만 있으면 공산권 국가로의 해외여행, 국제결혼, 해외 거주도 가능했다(안드레이 란코프 2009, 46-47). 이 시기 공공장소에 모인 대중들의 불평불만은 정치적 주제가 중심이었고 그것은 지식인 반체제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조정아 2011).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시절, 당-국가체제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각종 스포츠조직, 취미 단체, 일부 직업단체, 사회복지 단체들이 존재했고 이들 단체는 비정치적인 것만큼 당-국가에 대한 종속성이 약했고 때로는 반정부 활동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한승완 2014). 특히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회 및 자발적 종교적 시민단체는 비정치적 단체들 중 국가로부터 가장 자율성을 확보했고 당-국가 지배체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에도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시민사회 활동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제공했다. 일례로 1980년대 동독의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과 같은 태동기 시민 운동은 동독 교회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었고, 통일운동에서도 교회와 시민사회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박정원 2013). 특히 비공식적 영역에서 공동의 대안 담론을 만들어내는 반체제 지식인 계층이 시장 및 시민과 결합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성장에 기여했다(정영철 2014). 심지어 시민사회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루마니아에도 사회의 독자적 측면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반체제 저항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었다(Tismaneanu 1992, 142 재인용, 박정원 2013). 이처럼 동유럽 사회주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자율적·독립적·저항적 시민사회가 체제 내부의 작은 섬과 같이 고립되어 ‘왜소한 상태’ 또는 ‘빈사의 상태’로나마 존재할 수 있었고, 그것은 지배체제에 대한 제한적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의 대안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즉 동유럽 사회주의 시절, 시민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통제와 제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공간’, 비판적 사고와 대안 가능성을 논의할 ‘언어와 담론’, 자유로운 표현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시민사회 ‘씨앗’이 발화하고 자랄 수 있는 ‘토양’과 ‘빛’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시민 사회적 요소, 즉 ‘씨앗’은 있지만 ‘토양’과 ‘빛’이 없다. 북한은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10대원칙’¹⁾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비롯한 반

1)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10대원칙 9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

(비)사회주의 요소를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반(비)사회주의 척결을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 청년교양보장법(2021.9),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을 제정했다. 북한은 반(비)사회주의를 외부의 위협보다 더 두렵게 느끼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 통제기구를 통한 처벌과 공포 분위기 조성, 선전 선동을 활용한 사상교육 강화 등 다각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강동완 외 2023). 이처럼 북한에서는 사회의 독자적 속성을 띠는 시민 사회적 요소를 반당적-반혁명적 요소로 규정하며 기초적인 조직화 혹은 공적 소통 공간을 절대 소멸한다. 즉 김정은은 절대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다수가 다른 생각을 함께 품을 수 없도록 공적 소통 공간을 완전히 독점함으로써 대안의 공동지식이 비집고 들어올 여유를 절대 차단하고 있다. 이 살벌한 환경에서 유발되는 시민 사회적 요소는 제도적 억압과 감시통제 속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시민 사회적 요소가 파편화되어 비가시적 영역에 가려져 있다는 점, 개인들의 문제의식이 연결되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분절된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 결국 ‘지속 가능한 공동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가 비가시화의 구조에 갇혀 정치적 담론으로 공론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론장이 제도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며, 사적인 의견 교환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감시통제와 처벌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사고-언어-행동을 검열하게 만들며, 사회적 모순을 인지하고 비판적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적-심리적 기능을 마비시킨다. 특히 북한에서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도구, 생존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개인’ ‘자유’ ‘공공성’ ‘책임’ ‘권리’ 등 민주주의 핵심 언어가 부재하며, 그 결과 북한과는 다른 제도의 가능성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다른 제도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안, 공포, 죄책감을 유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상은 곧 위험한 행동, 반혁명적 행동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공동지식 형성의 실패로 이어지며 결국 체제 비판적 인식은 개인 내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사회는 체제의 모순이 인식되기도 전에 중단되고, 저항은 언어로 표현되

성 동지의 교시를 관찰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개별적 간부들이 아래 단위의 당, 정권 기관 및 근로 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당 중앙의 승인 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위키, [www.https://namu.wiki](https://namu.wiki)

거나 사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더 나은 제도에 대한 희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억압구조는 단순히 외부 정보의 차단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폭력과 감시, 언어-사고-사상의 통제, 그리고 상상 자체를 위협으로 각인시키는 심리적 억제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결론적으로 북한 시민사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단편적 정보 유입을 넘어, 표현의 공간을 열고, 인식을 연결해 공동지식을 형성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엔과 시민사회는 단순한 정보제공자를 넘어 상상력의 촉진자, 공동지식의 매개자, 공론장 형성의 동반자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재 북한 사람들은 서로가 ‘말은 못하지만, 모두가 김정은 체제가 망하길 바란다’라는 잠재된 집단인식, 혹은 억압된 인식을 공유하며, 친한 친구 2~3명 극소수끼리의 비공식적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좀 더 많은 다수가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표현과 소통의 틈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을 통한 USB, 휴대폰, DVD 등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단’의 실질적 보급과 접경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전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라디오 방송, USB 콘텐츠, 탈북민이 만든 콘텐츠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도와야 한다. 정치 선동이 아닌 문화, 건강, 교육, 가족 문제 등 일상 언어로 콘텐츠를 구성해 공감과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탈북 여성의 장마당 생존기’, ‘간부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청년의 이야기’ 등 탈북민 서사를 발굴해 생활 속 불평등과 부조리를 문제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감정과 경험을 매개로 한 공동 인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다자외교를 통한 정보통제 완화 압박, 유엔 인권이사회 및 관련 기구를 통한 정보 접근 권리 보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개입은 북한 사람 개개인의 자각을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연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감 희. 2023. 『북한 녀자로 살기』. 파주: 한울앰플러스.
- 강동완, 유판덕. 2023. “북한의 '반(비)사회주의 현상' 인식과 대응전략 연구.” 『통일문제연구』 35(1), 201-230.
- 김경미. 2014.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의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일고찰.” 『국제지역연구』 18(2), 131-155.
- 박정원. 2013. “동유럽 공산 체제 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 붕괴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133-169.
- 배정환. 2006. “체제 전환기 러시아 사회운동단체의 기원, 조직적 발전과 분화.” 『슬라브연구』 22(1), 27-50.
- 서재신. 1995.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드레이 란코프. 2009. 『북한 워크 아웃』. 서울: 시대정신.
- 안청시, 김근식. 1994.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3), 137-161.
- 이우영. 2024. “발표_2023 북한사회변화와 2024 변화 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73, 113-130.
- 장경섭. 1995. “북한의 잠재적 시민 사회: 이차 의식, 이차 경제, 이차 사회.” 『현상과 인식』 18(4), 133-156.
- 장세훈.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 신의주 혜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00-134.
- 전순영. 2024.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 재구성된 시민사회지표(CSI)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6(1), 261-298.
- 정영철. 2014.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한국과 국제정치』 30(1), 125-148.
- 정원희. 2024. “조선노동당 비밀문서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담론 201』 27(2), 43-83.
- 조정아. 2011.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7(1), 25-74.
-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2010. 『북한의 체제 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 한승완. 2014. “국가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재고-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에

주는 함축.” 『사회와 철학』 28, 347-376.

홍정기. 2024.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차단 위한 北 3대 악법 제정과 북한 인권 실태.” 『월간국방외교저널』 39-44.

Dukalskis, A., & Lee, Junhyoung, 2020. “Everyday Nationalism and Authoritarian Rule: A Case Study of North Korea” *Nationalities Papers* 48(6), 1052-1068.

Joo, Hyung-min, 2014. “Hidden Transcripts in Marketplaces: Politicized Discourses in the North Korean Shadow Economy” *The Pacific Review*, 27(1), 49-71.

HANKISS, E. 1988.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n Alternative Social Model Emerging in Contemporary Hungary?” *Social Research*, 55(1/2), 13-42.

Sampson, S. Winter 1985-1986. “The Informal Sector in Eastern Europe.” *Telos*, 66, 44-66.

Shlapentokh, V. 1989.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토론 1

서정호
가천대학교 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전략과 메시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서정호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hoseo@gachon.ac.kr

1. 연구 요약 및 전반적 평가

2025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24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세션에서 발표된 염승우·박은아 연구팀의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전략과 메시지 연구: 북한 두 트위터(현 엑스) 계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는 폐쇄적인 북한 정권이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대외선전을 펼치는 방식과 그 함의를 탐색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트위터(X) 계정의 게시물 541건을 내용 분석하여,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 및 메시지 프레임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기법을 적용해 계정들의 게시물 텍스트와 해시태그를 코딩하고 주요 주제 (theme)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트위터 계정에서는 “사람”, “감정”, “국가행사와 명절”, “문화”등의 주요 주제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북한이 정상적이고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개인과 공동체 활동이 보장된 사회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대상 계정들은 게시물 전반에 걸쳐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풍부함을 부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유롭고 다양하면서도 이념적으로 안정된 “정상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예컨대 두 계정 모두 해시태그 #DPRK, #NorthKorea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North Korea”라는 단일하고 통합된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김정은 정권은 트위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과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북한 체제를 대외에 과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유튜브 등 일부 플랫폼에 한정되었던 북한 뉴미디어 선전

연구를 트위터(X)라는 새로운 매체로 확장함으로써 학술적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공식 대외선전 웹사이트와 연동된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비연동 채널에 집중한 데 비해,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지만 외견상 개인 계정으로 위장된 “비연동” 트위터 채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돋보인다. 발표논문은 NK News 등의 보도를 토대로 해당 트위터 계정들이 북한의 미디어회사 ‘서광(Sogwang)’에 의해 운영되는 대외선전용 채널임을 밝혔고, 나아가 콘텐츠 특성과 정기적 포스팅 패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 계정이 북한 당국의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대상 채널의 실체를 규명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서 질적 주제분석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Braun & Clarke의 절차 준용, NVivo 도구 사용 등), 2인 이상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는 등 엄밀한 연구수행에 노력한 점도 돋보인다. 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들과 해석은 선행 연구들이 관찰한 북한 선전 전략의 변화상과 궤를 같이하며, 이를 트위터라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크다. 요컨대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뉴미디어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향후 관련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가치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주요 논점 및 심층 논의

발표논문이 제시한 발견들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해당 연구를 읽고 떠오른 몇 가지 핵심 논점과 추가적인 심층 토론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논의는 비판보다는 심화된 이해와 확장을 위한 제언적 성격임을 미리 밝혀둔다.

(1) 비공식 대외선전 채널의 운영 주체 확인과 한계:연구진은 분석 대상 계정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비연동 선전채널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앞서 요약한 대로, 외부 전문매체의 확인 보도(예: NK News의 서광 운영설), 콘텐츠의 일관된 기조(북한 체제 옹호·미화), 개인이 올리기 어려운 내부 일상 영상과 정기적 업로드 패턴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하승희(2020)등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일관된 친체제 콘텐츠와 정기성”이라는 기준과도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운영 주체 추정의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공식 인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계정들이 진정 누구의 손에서 관리되는지 100% 입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혹자가 “해외 거주 친북 성향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이 국가 개입 없이 글로벌 SNS에 접근해 자신의 일상을 영문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연구팀의 판단에 힘이 실리지만, 향후 추가 증거(예: 관련 계정 운영자 정보의 노출이나 당국 발표 등)가 나온다면 더욱 분명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당 분야 연구의 상존하는 난제이므로,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각도 근거를 들어 추론을 전개한 점은 오히려 신중하고도 적절한 접근이라 사료된다.

(2) 북한 대외선전 메시지의 이중성 - “부드러운 일상” vs “공격적 담화”: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트위터 선전 메시지는 매우 온건하고 일상적인 톤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 풍부한 문화유산, 평온한 축제와 명절 등이 강조되어 “위협적이지 않은 정상 국가”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선전매체에서 흔히 보던 직설적인 체제 선전이나 수령 우상화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양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소셜미디어상 부드러운 서사가 북한의 공식 담화 수위와 병행하여 활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대외 담화를 통해 보이는 수사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 홍상희 외(2025)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김여정 담화문에서 나타나는 담론은 미·남한 정권 교체에 따라 유화적 협상 기조에서 제재·억지·위협을 강조하는 적대적 기조로 급변하였다. 특히 바이든-윤석열 시기에는 트럼프-문재인 시기와 달리 “평화”나 “대화”같은 conciliatory 용어는 사라지고, 남한 정부를 향한 노골적 비난과 군사적 경고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하드 파워적인 공식 담화에서는 체제의 결연한 입장과 적대적 경고를 발신하는 반면, 소프트 파워적인 뉴미디어 채널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투트랙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종류의 메시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북한의 국가 전략 목표(안보와 이미지 개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자는 이러한 이중성에 주목하면서, 향후 연구에서 두 메시지 간의 연계성 혹은 괴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가령,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의 친선·일상 이미지 홍보가 김여정 담화와 같은 공식 담화의 내용 변화와 어떻게 동조하거나 괴리되는지 longitudinal한 비교분석을 한다면, 북한 선전 전략의

내부 조율 메커니즘을 한층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의 변화 - “우상화”에서 “일상성”으로의 전환:본 연구 결과는 북한대외선전 이미지 전략의 거시적 변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선행연구인 서정호·전수진(2021)은 북한의 대표적 유튜브 채널 “Echo of Truth”분석을 통해, 과거 김일성 일가의 혁명성과 우상화 이미지에 집중되었던 프로파간다가 최근 들어 여성의 일상생활, 북한의 자연 풍경 등 “자연스러운 일상성”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 혁명미술 ‘조선화’ 전통에 뿌리를 둔 영웅적 이미지 대신, 뉴미디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전 기조가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염승우 · 박은아 연구팀의 이번 발표논문 역시 이러한 흐름을 트위터 사례에서 확인시켜준다. 두 트위터 계정은 김정은이나 당국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개인의 서사”를 통해 북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적 연출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계정들에서는 평범한 주민들이 등장하여 음식을 먹거나 여가를 즐기는 모습, 북한 도시의 거리 풍경과 전통명승지 소개 등이 다수 포착되는데, 이는 “사회주의 선전일군이 개인의 일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분장”한 새로운 프로파간다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노골적인 독재 이미지의 희석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며, 동시에 국제사회 일반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북한 선전 당국은 여성 진행자나 청소년 등 “부드러운” 이미지의 화자를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Echo of Truth의 여성 진행자 사례나 Sally Parks라 불리는 북한 어린이를 주인공 삼은 영상 등이 그 예이다. 본 연구 대상인 트위터 계정의 명칭(예: Olivia Natasha, Yumi)에서도 이러한 친근한 여성 캐릭터상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여성의 모습과 일상을 부각하는 것이 뉴미디어상 “자연스러운 북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논문의 분석 결과는 북한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 변천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북한 선전선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사례를 추가해주었다고 하겠다.

(4)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한 고찰:연구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볼 점도 있다. 첫째, 텍스트 중심의 주제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시각콘텐츠 분석과 연계할 필요성이다. 북한의 뉴미디어 선전은 글보다 이미지와 영상 활용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 계정들도 트윗에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함께 게시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연구진은 주로 텍스트

(본문+해시태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컴퓨팅 텍스트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되지만, 이미지 자체에 담긴 프로파간다 메시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예컨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배경 인물들의 표정, 복장, 장소(놀이공원, 전통유적, 마트 등), 영상의 연출 기법과 내레이션등은 모두 텍스트 이면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요소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적·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나, 이미지에 포함된 상징 요소를 계량화하는 시도도 병행한다면 북한 뉴미디어 선전의 총체적 전략을 파악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간적 변화 추이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트위터 계정의 콘텐츠도 수집 기간 동안 어떠한 추세 변화를 보였는지 궁금해진다. 가령 2020년~2023년 사이에 코로나19 초기나 미국/남한 선거 시점전후로 게시물 주제나 어조에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양 계정 간에 미묘한 역할 분화(하나는 문화·관광 위주, 다른 하나는 정치행사 위주 등)가 있었는지도 흥미로운 포인트이다. 발표 논문에는 시계열적 분석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었으나, 만약 데이터에 시기별 토픽 변화가 관찰되었다면 김정은 정권의 선전전략 미세조정을 읽어낼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방역 성과 과시나 자력갱생 강조 관련 게시물이 증가했다가, 이후 국제교류 재개 분위기속에서 관광 홍보성 콘텐츠가 늘어나는 패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 범위를 넘는 추가 논제이므로, 토론자로서 청중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제기해본다.

(5) 뉴미디어 선전의 효과와 수용자 반응:북한이 이처럼 공을 들여 소셜미디어 선전을 전개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외 인식 개선과 영향력 확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전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발표 논문에서는 계정의 팔로워 수나 반응(interactions)등은 다루지 않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수용자 측면의 분석도 보완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트위터 계정들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 내용이나 리트윗 양상을 통해 국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과연 선전 의도가 담긴 콘텐츠임을 간파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호기심 어린 긍정 반응도 존재하는지, 혹은 친북 성향 계정들의 조직적 반응이 감지되는지 등을 분석하면 선전효과의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한우(2018)는 북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선의 오늘’에 대한 이용자 댓글을 분석하여, 상당수 해외 시청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호기심, 흥미 위주로 소비함과 동시에 회의적 시각도 공존함을 보여준 바 있다. 마찬가지로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별로 이용자 군집의 성격과 댓글 프레이밍을 비교하면 매체별 선전 효과

의 편차도 드러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선전전략을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그 전략의 성패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외선전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만큼, 메시지 송신자뿐 아니라 수신자와 매개채널에 대한 연구가 어우러질 때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북한 대외선전이 처한 플랫폼 환경의 제약과 기회에 대한 논의이다. 발표논문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 북한의 유튜브 채널 다수가 계정 차단과 폐쇄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Echo of Truth나 기타 비연동 채널들이 서비스 약관 위반이나 미국의 제재 준수 등의 이유로 차단되자,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우회하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트위터(현재 X)의 경우, 비교적 콘텐츠 제한이 느슨하고 북한 당국자나 기관의 공식 계정도 활동한 전례가 있어(과거 외무성 계정 등), 지속성이 더 나은 플랫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X 플랫폼의 소유주 변경과 정책 변화도 진행중이어서(예: 계정 인증 정책,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변화 등), 북한 선전계정의 노출도와 영향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이후 X 플랫폼에서는 추천 알고리즘 조정으로 팔로워가 적은 계정의 트윗이 눈에 띄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팔로워 수가 제한적인 북한 선전계정은 이전보다 도달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커뮤니티 노트 등 이용자 주도 검증 기능은 북한 선전 트윗의 신뢰도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다른 채널로 다각화(예: 텔레그램 활용, 틱톡 진출 시도 등)하거나 콘텐츠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계에서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웨이보, 위챗 등 로컬 플랫폼과 자체 사이트를 연계하며 우호국 대상 선전 및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플랫폼의 제약이 심화되면 친선국 플랫폼으로 선전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대외선전의 플랫폼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연구 역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추가 논의사항 및 연구 제언

위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본 발표논문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 아이디어와 보완 제언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중 플랫폼 비교 연구:트위터(X)뿐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북한 선전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플랫폼별 전략적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매체의 이용자층과 매체 특성에 따라 북한이 강조하는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입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지 중심의 관광·미식 콘텐츠를, 트위터에서는 기사 링크와 해시태그를 활용한 뉴스형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식의 차별화전략이 있을 수 있다.

(2) 시각 자료 및 서사 기법의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영상 등 멀티미디어 요소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게시물에 첨부된 이미지의 내용 분석, 영상의 연출 기법(브이로그 형식, 자막 스타일 등), 화자(Voice)의 캐릭터 분석 등을 통해 텍스트-이미지 간 일치/불일치를 검증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선전선동부가 어떤 연출상의 선택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변환하는지 밝혀줄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스토리텔링 기법(예: 1인칭 체험담 형식, 과장된 수사 최소화 등)에 대한 질적 연구도 병행된다면, 프로파간다의 수사학적 완성도와 대중심리 활용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수용자 반응 및 효과 측정: 선전 메시지의 도달 범위와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 API나 웹 스크래핑을 통해 해당 계정들의 팔로워 통계, 게시물별 좋아요/리트윗 수 추이, 댓글 언어와 감성 분포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선전계정의 실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집단에게 주로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선전계정이 어떤 계정들과 상호작용하고 연결돼있는지(예: 친북 성향 계정 네트워크 형성 여부) 살펴본다면, 온라인 여론공간에서의 영향권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정량적 효과 분석은 정책 측면에서도, 북한의 대외선전을 단순 허세로 볼 것인지, 실제 여론전에 일정 효과를 내는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부 선전과의 연관성 연구: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외선전과 대내선전의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 뉴미디어 선전은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를 향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역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정보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도 정부의 대외선전 영상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에 홍보되고 있다”는 자부심이나 혹은 체제 선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북한 내부 TV나 신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예: 반제국주의 투쟁, 자력갱생등)와 대외 SNS 메시지(문화강국, 평화애호 국가이미지)가 어떻게 분업되고 조율되는지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김정은 시대 선전선동부의 전략 변화를 거시적으로 보려면, 대내 매체 콘텐츠 분석과 대외 소셜미디어 콘텐츠 분석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파간다”의 실체를 규명하고, 북한 정권의 선전 담론이 국내 통치 정당화와 국외 이미지 세탁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고 있는지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연구의 기여와 향후 연구 방향

연구의 핵심 기여:염승우·박은아 연구팀의 「김정은 정권의 뉴미디어 활용전략과 메시지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대외선전 전선인 소셜미디어 공간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연동 트위터 계정을 발굴·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이 전통 매체에서 뉴미디어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유튜브 중심으로 밝혀진 바 있는 북한 선전 기조의 변화(우상화 → 일상성 강조)와 일맥상통하면서도, 트위터라는 텍스트 기반 매체에서 확인되는 해시태그 담론과 주제 프레임을 통해 그 변화를 정량·정성 혼합 방식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특히 “정상국가 이미지”와 “소프트한 개인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북한 선전의 최신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북한 당국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나갈지 예측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이 직면한 딜레마와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사례 연구로서도 가치가 있다. 북한 사례는 인터넷 기술 발전이 민주화 압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선전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음(일명 “빅데이터 역설”)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정보기술과 전체주의 체제의 생존 문제를 논하는 폭넓은 담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

미래의 연구자들은 본 논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경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 제언된 바와 같이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선전전략 비교, 시각·영상 데이터의 분석 고도화, 수용자 관점의 효과 평가, 대내 담론

과의 연계성등이 그 구체적 방향이다. 이와 함께, 북한선전의 성과와 한계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소셜미디어 선전에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다른 공공외교 사례와 비교한다든지, 대북제재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선전 메시지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장기 추적한다면, 선전활동을 북한 대외정책의 한 부분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 출신 연구자들의 시각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에서 바라본 대외선전의 의도와 효과를 질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의미있는 확장이 될 것이다 (예: 과거 자신이 접했던 선전물의 영향에 대한 증언을 통해, 선전 콘텐츠 제작의도 해석 등). 학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데이터과학 등 학제간 접근을 통해 북한뉴미디어 선전을 분석할 때 더 풍부한 통찰이 도출될 것이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토론자는 본 발표논문이 제기한 핵심 주장과 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 연구가 북한 사회변화 및 미디어 전략 연구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다. 김정은 정권 하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실태를 empirically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디지털 시대 북한 체제의 자기표현 방식과 국제사회 여론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층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학술 호기심 충족을 넘어,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제안보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대외선전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심리전 수단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 체제의 취약성과 변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창(window)이 되기도 한다. 발표논문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북한의 대내·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변화의 징후를 포착하고,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학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토론 2

이시효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문_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 고찰”에 대해

이시효 연구교수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북한의 청년 세대의 한류 수용 태도’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이미 논문에서 ‘아랍의 봄’ 사례를 들었듯이) ‘외국 정보의 유입이 폐쇄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을 경험하며 성장한 북한 청년 세대가 인구구성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측면에서¹⁾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주도할 ‘청년 세대’의 한류 수용 태도를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강동완을 중심으로 북한의 한류 수용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2010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2020년대 급격히 줄어들었다(조현성, 2023).²⁾ 그 원인으로는 다양한 면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로 인한 북한 이탈주민 숫자의 급격한 감소, 2023년 중국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 연구의 위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17년 이후 북한 이탈 청년을 주 인터뷰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북한 한류 수용의 최근 현상 분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쉽지 않은 인터뷰 대상자의 모집과 가장 폐쇄적 국가인 북한의 내부 주민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귀중한 연구물이다.

본 연구는 ‘한류 수용 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진행했다.金正은 정권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기기와 프로그램 확산, 통제 및 회피 기술의 발전, 청년층의 한류 수용에 대한 상이한(지배적, 교섭적, 반항적) 태도, 지역 및 계층별 수용 태도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이 힘든 조건에서도 중요한 북한 내부 현안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토론자는 이 논문이 학술 논문으로서의 치밀함과 논리적 전개, 통일성을 보강해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하길 하길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토론자로서) 논문의 검토, 수정, 보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논문 전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한 연구 질문이 일관적이지 않다. 국문 요약과 결론 부분에서

1) 이시효, 김성배, 김명희. 2022. “평양 청년세대 ‘이중’ 의식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2호. 113-145쪽.

2) 조현성. 2023. “북한 내 한류 현상 연구의 현재와 미래.” 현상과인식 제43권 3호. 51-76쪽.

는 연구의 주요 질문으로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태도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환경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 분석 결론에 해당하는 4장 내용에서는 주로 한류 수용에 대한 북한 청년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한 질문과 2차적 질문을 논리적 전개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가 파악하기에 논문의 주요한 질문은 한류 수용의 지역 및 계층 격차 보다는 '태도'로 보였다.

둘째, 구체적인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학술적 치밀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이론은 제시하지만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는 근거이론,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다. 모든 질적 연구가 방법론을 정확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크로스웰(Creswell) 등이 제안하는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학술적 정교함과 논리적 서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 또한 연구방법론 설명에서 인터뷰 대상자 모집 및 인터뷰 진행 방식을 기술한다면 학술적 이해와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인터뷰 대상자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 한류를 접한 대상자 외에 해외 사업이나 유학 중 한류를 접한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부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해외 체류 중 한류를 접한 대상자가 북한 내륙에서 접한 대상자와 다른 측면을 보인다면(예를 들어 접한 내용 및 수용 태도 등) 본문 분석에서 그 차이를 언급하는 것도 논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논문 전반적으로 북한 관련 일반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출처 표기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부분에서 "북한 청년의 한류 수용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층적 양상이다"라는 서술 이후 이어지는 설명은 출처를 필요로 한다 (이 양상은 출처없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만약 이 내용이 선행연구가 아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연구가설임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 연구의 인터뷰 중에 파악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라면 어느 인터뷰 대상에게서 들은 내용인지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논문 전반에 출처 표기가 없이 기술된 내용이 여러 곳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3)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John W. Creswell & Cheryl N. Poth.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옮김. 학지사.

넷째, 3장 제목에 ‘한류 수용의 사회적 배경’ 등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보기에는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은 4장 ‘한류 수용 태도’로, 3장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확산’ 내용은 ‘한류 수용’의 배경에 해당한다. 한데 목차에서는 3장과 4장을 동일한 성격으로 다루고 있어 논문의 전체 구도와 논문을 통해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논문 전체 구조 (목차를 포함한) 연구질문과 결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논문 전체적으로 일관된 관점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5장 결론 부분은 3장과 4장 분석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루지 못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3-4장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북한 한류의 확산과 청년 세대의 한류 수용 태도를 다루고 있다. 반면 결론 부분의 내용 요약 (첫째, 둘째, 셋째)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태도’ 보다는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논문 전체 전개에서 일관된 논리적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4장에서도 ‘1) 지배적 수용’은 요인 파악을 중심으로 서술된 반면, ‘2) 교섭적 수용’은 태도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또한 같은 장 내에서 1)은 콜론(:)을 사용해 주제목과 부제목 분리한 반면, 2)는 구분이 없다. 논문 전체적으로 통일된 관점과 서술이 필요하다.

여섯째, 논리적 서술에서 학술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서술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쩌면 당연지사이다’ 등). 논문 전체 서술이 학술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휘 선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

< 세션 2. >
2024년 탈북연구자 북한사회변화연구

토론 3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에 관한 연구-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토론문

조현정 (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 북한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급격한 변화를 거침.
- 장마당이 생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생존 중심의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사적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확산
-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 내 ICT교육 및 활용을 통해 정보와 문화의 흐름에서 비공식 디지털 네트워크 기능 강화
-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집단 기억과 문화적 내러티브 차원에서 세대별 ‘기억 자본’의 차이가 존재
- 그럼에도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일상연구에 대한 이론 적용과 다층적 접근은 여전히 필요함.

2. 이 연구의 중요성

- 북한 내 잠재적 시민사회 탐색의 공백 접근
-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동을 경험한 20~30대, MZ세대가 겪은 사적(불법) 경제활동, 외부정보 노출, 비공식 네트워크 형성, 체제의식 변화 등 사회 일상에서 관찰되는 시민 사회의 맹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모색하였음.
- MZ세대는 아동기부터 장마당을 비롯한 사적 경제와 외부정보를 체험하며 성장한 세대로써 사적 경제의 일상화, 외부문화 정보 습득, 비공식 관계망, 체제 비판적 의식 등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북한 주민의 사적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학 측면의 이차사회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MZ세대의 잠재적 시민사회의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 이차사회 개념을 검증한 측면은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대외문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의식 영역 등 4가지 측면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북한 사회 변화의 내재적 동력을 MZ세대 중심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MZ세대 중심의 시민사회 변화 동인과 저항 요소의 조명

- MZ세대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접근을 통해 그들의 사적 공간에서 경험된 ‘반(비) 사회주의’ 현상을 당사자의 언어로 복원하고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에 부합하고 있음.
- 이차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도출한 부분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세대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MZ세대의 ‘사적 자유선호’가 충돌하는 지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갈등을 통해 세대별 북한 시민 사회적 요소의 변화 징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

□ 이차사회(Second Society) 개념의 적용

- 헨키스(Hankiss, 1990), 스타(Starr, 1988) 등이 제시했던 동유럽 사회주의 맥락에서의 이차사회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여 반(탈)국가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비공식적 사회 공간’(잠재적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음.
- 이차사회 개념에 기반하여, 북한 MZ세대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① 시장경제 영역(불법경제 일상화·황금만능주의), ② 대외문화 영역(정보습득·모방·외부세계 동경), ③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끼리끼리 관계·변질된 대학·군대 문화), ④ 의식 영역(체제 비판·저항 결사체)으로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사회 속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MZ세대의 속성은 확산되기 어려우며,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조차 비공론화, 파편화 등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통해 그들의 은폐된 일상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요구하게 하고 있음.
-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공적 공론장이 전면 봉쇄된 상태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이차사회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명확히 분석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맥락과의 차별적 기능을 어느 정도 검증하고 있음.

3. 종합 의견

□ 세대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이 연구는 서두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 조직이나 기능은 불가능하지만, 국가의 의도와 달리 사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적 욕구는 다양한 층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연구의 핵심 대상이 북한 MA세대인 만큼, 왜 이 세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탐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세대 개념을 간과하고 있음. 세대 개념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분석하는 범주의 역할로서 세대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 연구에서 세대별, 세대간 분석은 북한 주민의 일상 전환의 궤적을 엮어보고, 시민사회 잠재력과 리스크를 평가하여, 사회변화 동인과 저항요소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세대 개념의 일반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 대상을 ‘MZ세대’라 규정했을 때, 이 용어가 갖는 보편적 의미(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주의, 가치다양성 추구 등)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북한 MZ세대의 특징이 특별한 현상인지 아니면 타 국가들의 MZ세대 패턴의 일부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임.
- 기존의 세대 연구는 후기 산업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생활체계를 기존의 사회적 범주나 통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현상을 전개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음. 이러한 세대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세대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 붕괴, 그리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그동안 사회과학의 주요 범주로 여겨지던 ‘계급’과 ‘민족’이라는 행위자의 중요성과 함께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전상진, 2004). 사회현상 설명함에 있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과 가치를 파악하고 있음(이병준 외, 2019). 아래에 세대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K. Mannheim, 1923)의 세대 개념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세대 개념 이론: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K. Mannheim, 1923)

만하임이 세대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대 사회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사회구조적 범주들, 즉 계급 및 계층, 신분 혹은 개념들이 어떤 이유로 부분적인 유용성을 갖게 되는가를 캐묻기 위함이다. 만하임의 세대 이론은 실증주의적-생물학적 입장과 역사적-철학적 입장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세대를 ‘청(소)년기에(17-25세)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코호트(들)로 정의한다. 그의 개념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생물학적 조건, 즉 출생코호트, 연령과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주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들에게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의식을 부여하는 과정에 주목한다(Mannheim, 1964).

더 나아가 만하임은 세대 문제를 핀더(Pinder, 1926)의 ‘동시대의 비동시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세대는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동시대 속에서의 비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시대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각기 독자적인 경험 구조와 의식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병준 외, 2019).

- 국내에서도 90년대 초반 이후 미디어에서 신세대, X세대 등 세대를 분류하여 세대문제를 다루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세대 연구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사회학(Mannheim의 세대 개념), 정치학(Ronald F. Inglehart의 세대 교체이론)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대 이론을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수 맥락에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론의 보편성·제한성을 함께 밝힐 수 있음.

□ 이론적 설명에 대한 도식화

- 이론 검토 시, 이차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연구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
- 왜냐하면, 동유럽 사회주의 맥락에서 출현한 ‘이차사회’ 개념을 북한 사회로 확장함으로써 비가시적 시민사회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동유럽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적 차이로 인한 과도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MZ세대가 갖는 시민 사회적 요소는 확산 경로나 강도가 기존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서 세대별 비공식 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혼합연구(Mixed Methods)

- 정량적 설문조사(탈북민·접경지역 주민 등)를 통해 시민 사회적 요소의 확산 수준·영향 요인을 수치화하고, 질적 면담 결과와 교차 검증 필요. 특히 세대별 연구는 심층면담 같은 질적방법과 설문조사·패널데이터 분석 같은 양적방법을 결합하여 방법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매체와 시민사회의 연관성 탐색

- 손전화·USB·라디오·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이 이차사회 요소 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필요.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환경과 친숙하며, 세대별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친숙도나 활용도가 크게 다르므로, 이 차이가 잠재적 시민사회 참여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

□ 도시와 농촌 간 변이 탐색

- MZ세대 중 여성과 남성, 도시와 농·어촌 출신 MZ세대의 경험 차이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별·젠더별 시민사회 형성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 필요. 다층적·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해 동일 세대라도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지 또는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음.

5. 나오며

- 이 연구는 북한 MZ세대의 사적 영역에서 생성되는 시장경제·대외문화·네트워크·의식 분야의 시민 사회적 요소를 이차사회 개념을 적용하여 규명함.
- 동유럽 맥락의 이차사회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만의 특수성(공적 공론장 폐쇄 속 이차사회 요소의 파편화·비가시화)을 드러냈으며, 향후 혼합·종단·디지털·젠더·지역 관점의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세션 3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 세션 3. >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발표 1

**일본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다나카 유코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대표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본의 국가행동계획과 여성의 역할, 과제

다나카 유코 대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일본여성의 현실

먼저 현재 일본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2025년 성 격차지수는, 148개국 중 118위로, G7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남녀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101위, 중국은 103위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남녀격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는 여성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필요한 300만엔의 공탁금을, 잠정적 특별조치로 삭감할 것을 권고하였습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면서도, 정규직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75.8%로 유지해 왔습니다. 나아가 많은 여성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55.8%입니다. 왜 이토록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가 하면,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니까”라고 하는,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과거의 일본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녀가 함께 육아를 하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민당 정권은 일본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의 권고

일본은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은, 국제연합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관한 신념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작성된 조약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SDGs” 실시 과정에서, 조약 규정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 성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질문지에 대한 조약 체결국의 답변과 질의응답, 대

화를 토대로, 위원회는 정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임무의 일환으로, 국회에 현재부터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할 때까지 최종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일본이 권고를 받은 항목은 너무 많아서, 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 여성 차별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법해석이나 법집행에 일관성이 없음. 따라서 여성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법률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함

- 황위계승의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이상2가지입니다. 황실전범에 대한 권고에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 매년 내고 있는 사업분담금의 사용처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제외할” 것과 “올해 예정되어 있던 동 위원회 위원의 방일 프로그램 실시를 연기”한다고 위원회에 연락하였습니다.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지키기 위해 실행된 ‘권고’에 보복이나 다른없는 행동을 하였기에,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은 올해 2월 정부에 보복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내인권기구’를 만들 것, “아이누 여성, 부락여성, 재일 한국·조선인 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여성, 및 이주민 여성들의 복합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용, 건강, 공적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평등한 접근권을 확보할” 것, “여성 기능실습생의 노동조건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신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해외에서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차별적인 관행으로부터 여성 이주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달 선거에서 외국인 차별과 여성 차별을 핵심당론으로 하는 극우정당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는 차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나 성적 착취에서 벗어난 이들이 언어 문제나 제한적인 장기적 사회복지지원책 등, 보호쉼터나 법적 서비스 접근이라는 관점의 장벽에 직면하는” 것을 염려하며, “젊은 여성 및 여아(특히 경제적 곤란 또는 가정이 불안정하여 매춘을 강요받는 여성과 여아)의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예방에 특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현실은 2015년경부터 비영리조직 ‘Colabo’에 의해 해외에도 알

려졌습니다. 미 국무성이 일본의 JK(여고생) 비즈니스가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남성들이 Colabo를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었기 때문에 Colabo는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부터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1902년부터 일본인은 한국 각지에도 유곽을 만들었고 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경숙 저 “완월동 여자들”은 일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저자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창립자이며, 완월동은 부산에 있었던 한반도 최초의 유곽입니다. 1970년대에는 124개의 성매매 점포가 있었고, 1,250여명의 여성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600여명의 여성은 미등록 상태로 성매매에 종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화재를 계기로 반대운동이 활발해져서, 2004년 9월 23일 성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북미모델에 가까운 “성매매방지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때 한국정부는 “여성인권 관점에서 없애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2025년 6월 정경숙씨는 일본을 방문하여, Colabo주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성매매방지법” 입법을 위한 여성인권센터 설립 운동을 올해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정체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은 이 외에도, 체결국의 개인이 여성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를 시급히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적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이 혼인 후에도 혼인 전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별성제도(夫婦別姓制度)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은 정식으로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지시대가 되어 호적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별성제였습니다. 1898년 일본은 서양을 따라 강제적으로 ‘부부동성’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혼인 시 성을 바꾸는 사람의 95~96%가 여성입니다. 이 커다란 불균형과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호적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

구좌 개설, 여권 취득은 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결혼 후 성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1996년 심의를 거쳐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법안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제출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강제적 부부동성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수의 단체들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작성되고 29년이 지난 현재, 의원들이 법제화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동성 규정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 가족의 유대감과 자녀의 행복은 같은 성을 쓰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 부부동성제도 하에서,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고, 부부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부부동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 부부동성제도 하에서, 여성은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게 됩니다. 결혼 전 성의 비공식적인 사용 확대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결혼 전 성의 비공식적인 사용 확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가부장제의 유지존속을 위해서입니다.
-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진짜 이유인 가부장제 유지존속을 숨긴 채,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인 인격권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심의회의 민법개정법안을 30년 가까이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정면에 있는 의원회관 앞에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집회와 스탠딩 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제화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과 많은 단체들이 방문해 주셨고, 서로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이 모임은 2023년 2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그 전해 12월 자민당 기시다 총리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폐지하고, 새로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반격능력 보유”를 축으로 하여 “자위의 범위”를 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영구히 이를 포기”하였던 “무력으로 위협 또는 무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기시다 Kishida

국가안전보장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방위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방위력정비계획 Defense Buildup Program

이미 2015년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여, 헌법9조는 사문화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안보 3문서”는 헌법 9조를 사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 9조를 거의 파괴하였다고 해 될 정도입니다. 나아가 방위비를 증액하고, 5년간 43조엔의 군사비를 확보하는데, 그 재원은 세금 징수로 조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징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9월에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소집되어, 군비산업 확대와 수출이 발표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전 2020년 9월 30일에 간 총리가 일본학술회의의 회원후보자 6명을 이유도 없이 “임명거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독립된 아카데미는 어느 나라에나 있고, 독립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거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이 때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의 2차대전 전의 일본에서 있었던 학자 탄압을 떠올렸습니다.

간 Kan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일본은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새로운 전전(戰前)”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쟁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 중에는 독신인 사람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고령자도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던 군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복지나 교육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소비세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방문 호스피스에 대한 보수는 인하되었고, 호스피스의 공적지원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급여 인상도 없고, 육아지원이나 근본적인 교육비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상정한 때부터 생활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준비로 인한 생활 파괴를 저지하지 위해, 2023년 1월 11일 몇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위기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곧바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GDP대비 2%의 군사비 철회”와 “멈추지 못하는 군비확장을 그만두고, 여성과 아이들, 청년, 사회적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서명운동을 벌여, 약 75,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쇄하여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정당에 서명자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이날 오사카와 구마모토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후 삿포로, 미야자키, 오이타, 이바라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45년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그 전 즉 2차대전 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 처음으로 투표권과 입후보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전전(戰前)”에 직면하였습니다. 2차 대전 전에는 군부가 여성들을 조직화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주적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발소리’에서 시작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은 전쟁준비와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의 현 상황과 교육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오키나와 특히 남서제도가 군사화되는 것을 주시하면서, 대만의 유사사태를 의식하는 것 등을 테마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서제도 Ryukyu Islands

발촉했을 때는, 이미 오키나와 본섬과 대만 사이에 있는 남서제도에 자위대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되자 규슈에도 기지가 건설되었고,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요새화되었습니다. 400발의 토마호크를 구입하고, 이지스함,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밖에 유지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일본에서 떠나 원격으로 지령을 내릴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작년부터 자위대와 미군, 호주군과 “킨 소드 25”훈련을 실시하고, 탄도 미사일을 상정한 주민피난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은 자위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이용공항”, 구마모토항은 특정이용항만이 되었습니다. 민간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항이나 항만은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킨 소드 25 Keen Sword 25

규슈, 남서제도,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여 일미합동군사훈련도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일미에 국한되지 않고 다국적화되었습니다. 육상자위대와 인도 육군과의 군사훈련 “다르마 가디언 24”를 기타후지 훈련장과 아사카 훈련장에서 실시하였다.

다르마 가디언24 Dharma Guardian 24

기타후지 훈련장 Kitafuji Training Area

아사카 훈련장 Asaka Training Field

‘아이언 피스트 25’는 육상자위대와 미군의 제3해병기동군과의 공동훈련으로 오키나와, 가고시마, 구마모토, 나가사키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25 Iron Fist 25

제3해병기동군 III Marine Expeditionary Force

2025년 4월,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일본은,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서태평양에서 유사사태 발생 시에는 일본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면 전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력하여 전투력, 살상력,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합동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오션’ 구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구마모토 멤버가 알려주셨습니다. 여성들은 관념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나 군비확대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문, 잡지, 책 등의 미디어에 게재하거나 라인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X 등의 SNS를 통해서도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

지면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선거운동’도 합니다. 그 때마다 현수막을 디자인하고, 누구나 편의점에서 그 디자인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혼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손에 들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것도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을 존중하기에 팩트체크를 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를 비판합니다.

지자체장이나 정치가의 태도에도 목소리를 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대재해가 될 때도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대재해였던 간토대지진(1923) 때, 무수한 재일조선인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 중심지였던 도쿄도의 도지사는 매년 개최되는 추도식에 참석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추도문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데,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차별 의식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간토대지진 Great Kanto Earthquake

이에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내도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정부에도 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국 약 2,400개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용 “방위백서” 약 6,100부가 배포되었는데, 이를 “즉시 회수할 것”을 방위 대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면서 방위력 강화 대상국이라고 하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부추기는 듯한 정보를 교육현장에 확산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해악이 됩니다. “전쟁은 학교에서 시작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물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소재로, 미사일이 비둘기로 변신하는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에는 입회금도, 입회규칙도, 회원명부도 없습니다. 누

구든지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만나서,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도,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카프를 매는 것으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자료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발족 성명서

기시다 정부는 5년간 43조원, GDP대비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는 상세한 부분까지는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군비확장은 주변국가들과의 긴장 상황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본을 위한 것일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워 온 저출산 대책이나 노동자 임금 인상, 여성이나 한부모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지원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합니다.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는 작년 말,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일하는 여성의 과반수를 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육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논의는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교육을 위한 공적지출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나 급식비 무상화는 3조원이면 된다고 하였으나 미뤄졌습니다. 이상태로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세대의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가고, 해결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군사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를 증세함으로써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보았다.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 Meetings on a Social Security System
Oriented to All Generations

자민당 세제조사회 LDP Research Commission on the Tax System

아이들이나 여성, 저출산 대책을 소홀히 한 군비확장은 일본을 쇠퇴시키고, 주변 국가를 적으로 돌리게 될 뿐입니다. 군비확장 전에 외교적인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평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인 정치에서 탈피하여, 생활과 평화를 지키는 ‘여성’의 시선을 가진 정치가 필요합니다.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산업이나 기술, 인재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없이는 남성도 아이들도 빈곤화되게 됩니다.

전후 안전보장원칙을 뒤집는 것이, 국회심의나 총선거, 국민투표 없이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멈춤 없는 군비확장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와 여당, 각 여당의 대표, 연합대표에게

1. GDP 대비 2%의 군사비를 철회할 것
2. 멈춤 없는 군비확장을 추진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성과 아이들,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

이상의 2가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일조선인 추도문과 관련하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게 보내는 요청서

동경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귀하

2024년 8월 20일

요 청 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대표 다나카 유코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표명한, 간토대지진 때 학살을 당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추도문을 올해도 발송하지 않기로 한 것에 항의하며, 추도문을 발송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나카 유코 Tanaka, Yuko

고이케 유리코 Koike, Yuriko

토쿄도위령협회는 간토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형 위령공양제를, 추도비가 건립된 197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역대 도쿄도지사는 이 행사에 지사 명의로 추도문을 보냈습니다.

토쿄도위령협회 Tokyo Metropolitan Irei Kyoukai or Tokyo Metropolitan Memorial Council

위령공양제 grand memorial service or major Buddhist memorial service

그러나, 고이케 도지사는 취임한 이듬해 2017년부터 이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올해 9월 1일 위령공양제에도 보내지 않을 것을 직접 표명하였습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때, 재일조선인들이 유언비어 때문에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중앙방재회의 보고서 (2009)에서도 확인되며 연구자 사이에서는 이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 Central Disaster Management Council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이케 도지사는 추도문을 보내야 합니다.

고이케 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내는 것은, 도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를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이케 도지사가 거듭 강조해 온 ‘다이버시티(다양성)’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추도문 발송은 일본이 재일조선인 학살했다는 가해의 역사와 마주하겠다는 동경도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여, 9월 1일 위령제 때 역대 도지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학살당한 재일조선인들을 위한 추도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나카 유코 (田中 優子)

여성 평화 및 군비확장 반대 모임(Women's Group for Peace and Against Military Expansion) 대표

호세이대학교 명예교수, 전 총장

에디토리얼 엔지니어링 연구소 Edit School 대표

호세이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국제일본문화연구과 운영위원장, 사회학부 학부장, 총장 등 역임. 전공 분야는 근세 일본 문화 및 아시아 문화 비교.

< 세션 3. >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발표 2

**대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

평연원
타이완 여성단체 전국연합회 대표이사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여성차별철폐협약> 추진 과정에서 타이완 여성단체의 역할과 도전

평엔원 (타이완 여성단체 전국연합회 대표이사)

요약

타이완은 2000년쯤부터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현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제정치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은 함께 협력

하여 CEDAW 정신과 규범을 국내 법제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 글을 통해 CEDAW가 타이완에서 추진된 과정과 민간 분야의 주요 역할을 돌아보고자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법>(CEDAW 이행법)이 통과된 후 이론 성취를 심도있게 탐구하고 CEDAW를 추진하면서 직면한 도전과제 등을 분석했다. 끝으로 여성운동의 시선으로 미래 양성평등 운동에 대한 바람을 제기한다.

주제어: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운동, 성별주류화, 국가여성주의, 타이완

1. 타이완의 CEDAW 추진 과정

타이완 사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CEDAW)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시에 초기의 거리 캠페인 방식에서 국가 여성주의(state feminism) 노선으로 옮겨갔으며, 1997년 행정원에 전국단위의 여성권익촉진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다. 여성운동이 제도권 내에서 더 많은 의견을 대표하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최초의 정당 간 정권교체로 집권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인권입국(人權立國)’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여러 항목의 인권 협약을 제창하며 정치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1.1 민간분야의 주요 역할

타이완의 젠더 학자와 여성단체는 일찍이 국제인권 단체 특히 민간단체와 왕성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주로 두 개의 국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와 비정부기구 회의(NGO-CSW)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산하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APEC-WLN) 등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이다. 이를 통해 타이완 참가자들은 국제 젠더 거버넌스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등의 정책도구를 타이완 젠더 정책에 도입하기도 했다.

2004년 4월, 천야오화(陳瑤華) 박사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사례발표회에서 처음으로 CEDAW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타이완 여성단체전국연합회(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 NATWA)는 <타이완의 CEDAW 실천을 추진하는 민간연맹>(CEDAW 추진민간연맹)의 결성을 이끌었으며, 주요 구성원으로 타이완 여성단체전국연합회(NATWA), 타이완 여성학회(Taiwanese Feminist Scholars Association), 여성신즈기금회(Awakening Foundation), 중화민국 YWCA, 리신사회복지사업기금회(Garden of Hope Foundation) 등이 참여했다.

1.2 대내외 동시추진 전략

당시 민간단체는 “대내외 동시 추진(裡應外合)”의 전략을 취했다. 행정원(한국의 행정부에 해당)과 입법원(한국의 국회에 해당)을 동시에 활용하여 CEDAW를 추진했다. 여성운동학자 천야오화와 장궈(張珪)는 외부초빙위원의 신분으로 각각 행정원 인권보장추진 TF팀과 행정원 여성권익촉진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안했다.

행정원 여성권익촉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는 2005년 “CEDAW 추진 4년 실천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으나 원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 장궈 교수는 정부가 마땅히 CEDAW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상대적으로 행정원 인권보장추진 TF팀의 활동은 순조로웠다. 천야오화 교수는 2004년 10월 회의에서 내정부(內政部,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가 책임기관으로서 CEDAW의 서명 및 비준을 인권 중점 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여 동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TF팀은 2005년 5월에 법령검토, 인권지표 확립, 국제회의 및 공무원 훈련 추진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이들 준비작업은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 같은 해 7월 12일, 행정원은 ‘타이완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에 관한 안건’의 통과를 결의하여 입법원에 심의하도록 발송했다. 천수이벤 정부는 당시 두 개의 협약과 CEDAW의 추진을 ‘인권입국’ 정책의 성과로 보았다. 입법원에서의 CEDAW 안건 심의과정은 이상하리만큼 순조로웠다. 2006년 12월 18일 ‘외부위원회’ 심의가 처음 열렸고, 겨우 1주일 남짓 지난 12월 28일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두 개의 규약)의 입법원 심의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순조로웠다.

1.3 첫 번째 국가보고와 독특한 심사 체계

그러나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는 여전한 도전이었다. 2007년 2월 9일, 천수이벤 총통은 가입서에 서명하고 발송했다. 우방국인 나우루에 위임하여 유엔 사무처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3월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제2758호 결의안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는 천수이벤 정부에게는 큰 좌절을 남겼다.

외교적 좌절이 있었지만, 이는 행정원 담당 부서 차원에서는 예상된 일이었으며 CEDAW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도 했다. 타이완이 유엔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해도 국내에 CEDAW의 실행을 감독하는 체계는 꼭 필요했다. 2008년 행정원 여성권익회촉진위원회는 외교부가 작성한 CEDAW 국가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게는 인권보고서 작성이 생소하여 회수율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재단법인 여성권익촉진발전기금회(이하 ‘여권기금회’라 한다)가 공공 부문을 훈련시키고 보고서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CEDAW 국가보고서의 사무처가 되었다. 여권기금회는 CEDAW의 각 조문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CEDAW 강의를 위탁했고, 국가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개최하며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등을 지도하면서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다.

국가보고서의 심사에 대해 말하자면, 타이완은 여타 체결국과는 달리 유엔 CEDAW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엔에 갈 수 없다면 유엔을 타이완에 초청한다”는 독창적인 심사 절차를 고안해 냈다. 여권기금회가 국가보고서에 정통한 국제전문가를 초청하여 타이완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CEDAW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Hanna Beate Schoepp-Schilling 박사, 신혜수 박사, Anamah Tan 등 세 명을 초청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유엔의 심사 절차를 모방하여 우선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이 제기한 의제 리스트에 정부가 응답하면, 다시 심사위원을 타이완으로 초청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2009년 3월 27일 마무리되었다.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민간단체 또한 병렬 보고서(그림자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CEDAW 이행법의 통과와 제도 개혁

첫 국가보고서 심사가 끝난 후 CEDAW의 이행은 잠시 멈추었다. 법률 체계에 심사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타이완은 ‘두 개의 규약’의 경험에 비춰 협약 이행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인권협약을 법제화하여 국내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2.1 <CEDAW 이행법>의 통과와 효력

행정원 인권보장추진 TF팀은 2007년 11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법>(이하 ‘CEDAW 이행법’이라 한다)의 초안 제정을 의결했다.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 초안은 2010년 5월 13일 행정원 회의를 거쳐 입법원 심의에 회부되었고, 2011년 5월 20일 최종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 입법으로 ‘CEDAW 조문과 유엔 CEDAW 위원회’의 해석을 확정했으며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CEDAW에 국내법의 지위를 부여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협약 이행을 위한 각각의 조치를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 간 협조와 연락, 체결국과의 국제협력, 협약 적용 시 준수해야 하는 해석의 원칙, 협약 규정에 따라 현행법령과 행정조치를 일정 기간 내에 제정·개정·폐지할 의무, 또한 경비의 우선 편제와 보고 제도의 완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행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보고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전문가, 학자, 민간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2.2 젠더 평등을 위한 전문책임기관의 설립

<CEDAW 이행법>의 발효와 동시에 2012년 타이완의 젠더 평등은 또 다른 중

요한 발전의 분수령을 맞이했다. ‘행정원 젠더평등처(性別平等處)’가 행정원 본부에 설립되어 젠더 주류화 정신에 따라 설립된 최고 수준의 젠더평등 전담기관으로 4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여성권익촉진위원회는 명칭을 ‘젠더평등회’로 개칭했고 2/3의 위원을 민간단체 또는 젠더전문가 및 학자로 구성하는 등 젠더평등처의 참모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단체는 이를 ‘젠더평등 원년’이라 칭했다. 젠더평등처의 직무에는 명확하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행법을 추진하고 국가보고서를 편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CEDAW의 이행과 지도감독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전문기관의 직능을 갖추었다. 여성권익촉진기금회는 ‘정부/민간 대화 플랫폼’이자 ‘CEDAW 국가보고 사무처’라는 참모 조직으로서 국외 심사위원의 초청, NGO 등 민간단체의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3 3만여 건의 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

<CEDAW 이행법>이 통과된 후, 타이완 정부와 민간단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CEDAW의 현지화 모델을 시도했다. 그중 주요 성과로는 법규 조치와 CEDAW 규정의 적합성 검토와 제2차 국가보고 심사 등이 있다.

젠더평등처는 2012년 전면적인 젠더 법령 검토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두 협약의 검토 모델을 참고했다. 워크숍을 통해 각급 정부의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실시하여 여러 부처의 관련 법규와 조치 등이 CEDAW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2년 동안 총 33,157건의 법규와 행정조치를 검토했으며 그중 228건은 CEDAW 규정에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 강화, 여성의 노동권 및 재산권의 제한, 여성의 혼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 대우, 여성 신체와 출산의 자주권 위반, 부계 중심의 강화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군인 및 가족 우대 조례>에서 딸이 결혼하면 우대 사항이 없어지지만 아들은 결혼 후에도 우대 혜택을 유지하는 규정이 젠더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검토 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검토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 중 215건이 개정되었다. 젠더 차별이 명백한 법률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법률 검토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2.4 국가보고서 심사 절차의 제도화

제2차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심사는 1차에 비해 더욱 구조화되고 심화되었다. 젠더평등처와 여성권익촉진기금회는 상세한 국가보고서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했고 각 조문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책임 권한이 있는 조직의 담당자가 각 조문의 의미와 자신의 업무와의 관계 등을 토론할 기회를 제공했다. 여성권익촉진기금회는 플랫폼 조직으로서 NGO 등 민간단체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했고, 심사위원회와 민간조직의 대화를 조율했다. 민간보고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는 2008년 8개에서 2014년 29개로 늘어났으며 총 33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성격과 관심 의제는 더욱 다양해져서 전통적인 여성 의제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도 포함되었다. 또한 타이완 인권촉진회, 장애인 연맹, 타이완 LGBT 가족 권익 연맹, 트랜스젠더 스테이션 등 첫 국가보고서 심사에도 참여한 이들 단체는 젠더 문제가 어떻게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특정 집단의 여성에게 더욱 복잡한 차별과 피해를 일으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제 심사회에서 교차 차별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위원회는 35개 항목의 최종 의견과 권고를 제시했다. 젠더평등처는 두 협약을 참고하여 ‘각 기관 별 취합의견에 대한 피드백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관련기관이 답변 계획과 일정,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심사 과정을 거쳐 CEDAW의 타이완 정기 국가보고서의 운영 모델을 수립했다.

3. 제도화 이후의 성과와 도전

타이완은 CEDAW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바로 최근(2025년 7월) 행정원 젠더평등처와 관련 부처는 올해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보고를 위해 민간단체 공청회를 4회 개최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실질적인 법령 개정 촉진(성과)

4년마다 개최되는 CEDAW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이미 여성과 젠더 단체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많은 중요 법률의 제·개정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제4차 국가보고서의 서두에 정부의 CEDAW 추

진 성과를 회고했는데, 혼인평등권의 경우 타이완은 동성결혼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으며, 디지털/온라인 젠더 폭력 방지 법률도 갖추었다. 또한 5개 항의 젠더평등을 추진하는 주요 의제를 제정하여, 0~5세 아동의 전면적인 돌봄 제공, 가정친화적인 직장환경 마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조례>, <취업서비스법>, <민법> 등의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와 인신매매 금지, 여성의 출산환경 개선, 결혼 최저연령을 남녀 모두 동일한 18세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구체적인 사례는 <CEDAW 이행법>의 법률적 기반으로 타이완의 젠더평등 정책 또한 제도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법률과 정책 단계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3.2 여성주의 관료의 부상(성과)

또 다른 진전은 행정원 젠더평등처의 공무원과 각 부처의 많은 젠더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여성주의 관료(femocrats)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민간 여성운동 단체의 파트너로서 여성단체와 함께 젠더 정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CEDAW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CEDAW 이행법의 통과와 함께 타이완의 ‘젠더주류화’의 길이 크게 열린 것도 사실이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은 매년 젠더 의식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CEDAW의 훈련을 받았으며, 일부 공무원은 젠더평등에 관한 부서 내부 강사 또는 실무위원이 되었다. 이들이 젠더 민감성과 전문성, 인지력 등에서 성장하며 더 이상 민간 젠더 전문가나 단체에 모든 판단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공무원이 반(anti) LGBTQ 단체와의 공개 대화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3.4장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타이완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젠더’ ‘여성’ 혹은 ‘가정’ 등의 이름을 내세운 보수단체(anti-LGBTQ)가 많이 등장했다. 이들은 CEDAW 등 젠더평등 관련 공개 토론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진보적인 여성단체나 젠더 단체의 대표가 회의에서 발언하기 어려울 때 젠더평등처 공무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반대 단체의 질의와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이제는 젠더평등의 수호자가 되었다.

3.3 지체되는 쟁점 법안 개정과 관료주의의 저항(도전)

물론 모든 공무원의 젠더 전문성이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는 없으며 단체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기관마다 CEDAW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법규심사 위원회가 CEDAW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검토하고도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는 법률이 10여 건이 넘는다. 예를 들면 <제사공업조례>(祭祀公業條例) 제4조(제사에 참여는 남성 자손으로 제한한다)는 CEDAW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해석 제728호는 이 조항을 원칙상 합헌으로 해석하여 사법기관이 간접적으로 젠더평등을 부정한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또한 <형법> 제288조의 낙태죄는 CEDAW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지만 담당부처인 법무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규는 관련 부처의 관심 부족(사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조건의 완화), 또는 사회적 공론 부족(사례: 트랜스젠더에게 ‘수술 없이 변경을 허용’하는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임), 입법원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진척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부 부처나 기관은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CEDAW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산만하고 기술관료화 되는 현상도 보였다.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한 인원의 직급이 너무 낮거나 업무 관련성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때도 있었다.

3.4 반대 세력의 부상과 대화 공간의 붕괴(도전)

CEDAW에 민간 참여의 길이 열리면서 서로 다른 입장의 ‘민간 의견’도 생겨났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 이후 ‘각 기관의 1차 종합의견 심사 및 피드백 회의’(2014)부터 반대 단체가 조직한 ‘타이완 종교단체 가정 보호 대연맹’이 여러 회의에 참가했다. 이들의 대표 발언은 자주 시간을 초과했고, 일부 발언자도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CEDAW 국제심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회의의 원래 목적인 종합적인 의견과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방해했다. 결국 정부와 다른 단체의 의견 개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했다.

이는 참여형 민주제도는 가능한가라는 사회적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참여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는가? 적대적인 언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죄가 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종료된 제5차 국가보고서 민간단체 좌담회에서 ‘젠더평등 단체’라는 이름으로 젠더 화장실 및 젠더 할당제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성별 역할을 복구하자는 발언을 이어나가며

거의 절반의 발언시간을 소모하기도 했다.

3.5 여성운동 단체의 저조한 관심(도전)

또 다른 문제는 여성단체의 CEDAW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제3차 국가보고서부터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원인을 여성운동의 다원화에서 찾기도 한다. 행정원 젠더평등위원회 또는 입법위원의 협조를 얻으면 CEDAW를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여성운동 단체의 제한된 자원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더 이상 CEDAW의 참여를 주요 활동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된 이유도 있다. 그밖에 여성권익촉진기금회가 여전히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여성단체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보고서 작성과 절차적 의제에 쏠려있다. 장기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CEDAW 국가보고서에 다수의 보수적인 반 젠더 단체가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의 발언은 LGBTQ에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인상을 주며 오히려 회의 중계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4. 결론: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대

2000년 이후 CEDAW가 타이완에 자리 잡은 과정은 타이완에서 젠더주류화가 발전한 시기이기도 하다. 민간단체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국가 의사일정과 법제화의 단계로 진입했다. 나아가 젠더평등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운영 기반을 다졌다. 타이완은 이미 ‘협약체결’이라는 절차뿐만 아니라 각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토론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다루는 의제 역시 ‘함께 돌봄’에서 ‘다원화된 젠더 정체성의 권익’ 및 ‘중층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환경’ 등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

CEDAW 추진 경험은 타이완의 국가 페니미즘이 제도적으로 이룬 성취와 영향력을 잘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존재하는데, 제도든 입법이든 추진 주체가 꾸준히 감독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는 반-LGBTQ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CEDAW의 추진이 정부의 법령이나 제도 개정, 관련 공공 부문 간

의 협력 촉진에 그치지 않도록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감독하며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앞으로 여성운동의 발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타이완의 CEDAW 추진 과정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에 의존해 왔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CEDAW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래의 여성운동은 이렇게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보고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감독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실무에 바탕을 둔 정책건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으로 돌발적인 의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회적 컨센서스 부재’를 이유로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구조적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도전에 대해서는 참여형 민주제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여 인권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대화를 완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멀고도 고된 길을 가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받고 젠더와 약자의 인권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참고자료

1. 허비전(2008), 타이완의 CEDAW 가입 전략과 노력. 격월간 엔카오. 32(4), 43-53.
2. 우웨이팅(2019), 지속적인 전진, 진정한 CEDAW 실현의 성취: CEDAW 제3차 국가보고서 심사평. 타이완 인권학 간행, 5(1), 107-111.
3. 관샤오웨이(2020), 타이완의 CEDAW 실현, 회고와 검토. 타이완 국제법학 간행, 16(2), 59-84.
4. 펑즈랴오(2019). 잃어버린 이야기: 쿼어 관점에서 본 CEDAW 제3차 국가 보고서. 타이완 인권학 간행 5(1) 119-124.
5. 천이원, 옌스이(2015). 타이완의 <보편적인 여성인권>? CEDAW의 현지화와 도전. 2015 타이완 여성학 학회 토론회.
6. 천야오화(2011). 타이완의 첫 번째 CEDAW 국가보고서와 인권 감독 메커니즘 - 유엔 체제 밖의 사례. 계간 타이완 국제법. 8(20), 53-93
7. 펑차오란(2021). 칼럼: 젠더 평등과 국제인권협약의 교차. 계간 젠더 평등 교육. 94, 14-17
8. 예더란(2022). 멀고 먼 길 - 타이완의 성교육 전면실시의 어제와 오늘. 계간 젠더평등교육, 96, 125-137.
9. 옌위루(2019). 여성인권협약의 제안과 변화: 타이완의 CEDAW 국가보고서와 심사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 타이완인권 간행. 5(1), 99-105.
10. 랴오하오샤(2021). CEDWA의 현지화 추진과 실천 - 천진옌 교수 인터뷰. 계간 젠더평등교육, 94, 39-45.

펑 옌원 (Peng Yenwen)

대만 전국여성단체연합(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s)
상임이사, 전 이사장. 대만 국립중산대학교 공공사무관리학과 교수

< 세션 3. >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토론 1

권연이
도쿄대학교 방문연구원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문: 여성정치참여의 한일비교와 국제연대를 위한 제안 다나카 유코 “일본의 국가행동계획과 여성의 역할, 과제”

권연이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방문연구원)

1. 총평

일본 내 여성 차별과 인권문제의 현황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확장의 흐름속에서 이에 맞서 펼쳐지고 있는 여성운동의 역동적인 현장을 깊이 있게 조명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 ‘새로운 전전(戰前)’에 대한 우려가 항간에 회자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전의 전전(戰前)과 다른 점이 바로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운동이 장래의 일본정치와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할 때 희망적이라 생각된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 혹은 ‘확인되지 않은’ 가족의 결속력을 이유로 지속되고 있는 부부동성 규정은 오늘날 많은 일본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해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제도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누가 ‘거부권자(veto player)’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 젠더 차별 철폐와 소수자 인권 신장, 군비확장에 맞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해 현장성, 분석력을 갖춘 매우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 오랜 기간 학자로서 경륜을 쌓고 현재는 여성운동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식과 실천적 감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본받고 싶은 부분이며 앞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2. ‘평화추구 및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모임’ 의의

일본사회내에서 여성과 외국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키고, 동시에 군비확장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여성운동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 여성운동이 단순한 항의나 담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과 제도적 대응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투표하지 말자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

나,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1인 선거운동’, 팩트 체크를 통해서 허위 발언을 한 후보자들을 비판하고,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지자체장이거나 정치인에게 요청서를 발송,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와 스탠딩 시위, 군비확장 동향을 현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신문, 잡지, 책,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확산·교환하는 활동 등은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시민사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른바 “어드보커시(advocacy)형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정책의 채택 또는 철회를 유도하고, 정부활동과 정치인의 발언을 감시하며,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공식 성명서나 청원, 거리 시위 등 다층적 압력전략을 활용하여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행동계획(NAP) vs 여성·평화·안전보장(WPS)

‘국가행동계획(NAP)’이란 국가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별 국가행동계획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성·안보’ 등 구체적으로 한정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여성·평화·안전보장에 관한 국가행동계획(WPS 관련 NAP)”이라고 해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UNSCR1325)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외무성과 내각부가 주관하며 국제안보, 평화, 젠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이외에,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도 존재한다. 주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이 주관하는 기업의 인권 관련 구제 메커니즘, CSR, 국제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신매매, 테러리즘, 사이버 보안 등등 국가행동계획(NAP)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한다.

4. 일본의 WPS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 경과와 평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여성평화안전보장(WPS) 이행을 위해서 수립한 국가행동계획(NAP)은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왔다.

표1. 일본정부의 WPS 국가행동계획(NAP)

단계	결정내용
제1차NAP (2015-2018년)	-외무성 주도, 유엔 안보리 결의1325호 및 후속 결의 이행을 위해서 최초의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 수렴. -여성의 참여, 인도적 지원, 인권 보호, 법의 지배, 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등.
제2차NAP (2019-2022)	-민관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일본 내 재난대응이나 평화유지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제3차NAP (2023-2026)	-2023년6월 각의결정.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공간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등 새로운 안보 개념 포함. -SDGs와의 연계,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조화를 강조.

일본정부는 NAP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협의 구조를 공식화하고,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안보 부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더불어 이러한 국가행동계획이 국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국내의 WPS와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 정책 자원 배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외교안보, 개발협력, 재난대응 등의 분야에서 여성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일본사회내에서 실질적인 여성 참여, 인권, 젠더 평등의 관점, 즉 내부-외부 통합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WPS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일본사회 내부의 여성인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인권, 외국인 여성 및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성 및 일본사회에서 전통이라고 여겨져 온 황실전범, 부부동성제도, 나아가 평화와 복지를 해치는 군비확장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5.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한일비교

WEF(the world economic forum)의 2025년 Global Gender Gap Report에 근거해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지위 및 정치참여에 관해 조금 더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성 평등 수준에서 조금 높고 순위도 우위이지만, 대체로 정치·경제 분야에서 성 격차가 지속 중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교육·건강 분야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거의 평등한 수준이나 경제

•정치 분야에서는 심각한 성 격차가 지속 중이다. 일본은 전년 대비 정치 참여에서 후퇴를 보이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여성 고위직 진출은 완만하게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2. 2025 Global Gender Gap 한국, 일본 항목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경제참여 및 기회	-여성 고용률60%, 남성76.9% -임금격차 평균26~31%	-경제점수61.3%, 전년 대비 상승 -관리자·임원급여성 비율 낮음.
교육 성취도	-고등교육 이수율 OECD 최 고수준, 여성이 교육에서 우 세함	-교육·입학을 거의 완전 평등 (99~100%)
건강 및 생존	-교육, 건강 격차 매우 작음. 전반적으로 평등 수준 높음	-평균 수명, 생존비율 거의 동일. 건강 점수 매우 높음
정치적 권한 부여	-국회의원 여성 비율 약19% (OECD 평균인30% 미달) -장관 비율도 제한적	-정치점수 약8.5%로 하락(11.8→8.5) -국회의원 여성 비율 약15.7%. 장관 수 감소로 최소 수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살펴 보자. 한일 모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이 제도를 통해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률 제정을 통해 정치분야에서 남녀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여성 정치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은 여성 후보자 할당제 도입과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표3.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한일비교

항목	한국	일본
참여 현황	여성국회의원 비율은19% 수준.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10% 내외로 낮은 수준.	여성국회의원 비율은10% 초반으로 한국 보다 낮고,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 낮음 (町村議會12.2%, 市区町村議會15.4%, 都道府県議會11.8%)
장려 제도	-비례대표제 확대:정당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비례	-정치분야에서 남녀공동참가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2018

	대표 당선을 늘리고 있음. -여성 정치참여 지원사업: 여성정치인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정치 참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강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 관련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음.	년 제정된 이 법률은 중의원, 참의원, 지방의회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수를 균등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함. -여성후보자 할당제(쿼터제)도입노력: 정당들이 여성후보자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 -정치자금 지원확대: 여성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	--

6. 여성 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의 모색

일본 여성운동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의 제언과 세개의 질문을 드리고 싶다. 우선,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일본이 젠더 이외에도 다른 여러 인권 보장 이슈에서 국제규범에 입각한 국내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동감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제도(권연이2023)에 있어서도 유엔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국제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규범의 ‘내면화(internalization)’가 일본사회내에서는 실패하거나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발전속도를 감안했을 때 세계성평등이 이루어지는데 123년이 걸린다고 추정되고 있다(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p20). 한일의 여성운동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일본사회의 여론을 움직여 내부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본시민사회의 정치와의 연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다. 한번 성립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지고 존속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제도이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일본정부 및 사회의 소극적 정책대응의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발표에서 논하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며 또 가능성은 어떤 점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운동에 의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은 한국에서도 정치개혁운동 과정에서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대부터 부적격 정치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해왔다. 선

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낙선 운동은 한국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그 성공률이 약 60%에 미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이 방식이 한국에서는 주효했으나 일본은 정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가 개인을 지원하는 ‘후원회’ 조직이 지역의 정치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개인중심정치(candidate-centered politics)’가 강하게 작동하는 정치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후보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운동의 지속성을 놓고 생각할 때, 성공 경험의 축적이 운동의 효과적 전개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제도와 정치문화에 맞는 운동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여성들의 평화운동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미·중 대립, 러·우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증가 등 안보위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22년 12월 여론조사결과(한국일보 실시)에서 핵무장에 대해 60-70% 정도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핵보유를 용인하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위기’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른 가운데, 평화운동이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현장의 활동가로서 다나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셋째, 이번 세션3에서 논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WPS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여성운동이 주변 국가들과 연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받아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의 젠더 정책 및 여성운동과 비교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교훈을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

< 세션 3. >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토론 2

이경아
호서대학교 연구교수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대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역할과 도전”

(臺灣婦女團體推動「消除對婦女一切形式歧視公約」的角色與挑戰)

이경아 (호서대 연구교수)

위 논문은 한국사회가 대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추진과정, ‘협약’의 성과와 한계뿐만 아니라, 대만의 여성운동을 이해하는 데도 의미 있는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과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 국가로서, 정치·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여 중요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대상이다. 성평등방면에서는 대만이 좀 더 선진적인데, 첫째, 2023년 OECD가 발표한 사회제도젠더지수(SIGI)가 대만은 9.2로 179개국 중 6위(아시아 1위), 한국은 19.8로 59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대만의 국회의원(立法院의 立法委員) 비율은 2022년 42.3%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약 19%)의 두 배가 넘는다. 셋째, 대만여성의 평균임금 수준은 2022년 기준 남성의 약 84% 수준으로, 한국의 약 70%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미 ‘동성혼인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2023년에는 동성부부가 자녀도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만 여성운동이 주도적으로 이룬 성취이다. 대만의 ‘협약’ 비준 및 그 이행 역시 여성운동의 결과이므로, 본 토론자는 대만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해 ‘협약’의 이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총체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대만은 1971년 이후 UN에서 퇴출되어 비회원국이 된 관계로 인하여, 협약 비준(2007)이 비교적 늦어졌지만, 당시 대만사회의 성차별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고, ‘협약’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여성운동과 진보정권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는 군사계엄 해제(1987) 직전 국민당정권이 반대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여, 1986년 비로소 진보정당인 민진당(民進黨)이 설립되었고, 2000년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민진당은 설립 초기에 사회적 동원기초가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운동과의 협력하에 여성의 지지 획득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여성운동 역시 조직화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민진당과 여성운동은 자

신들의 취약한 사회적 기초를 극복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양자 사이에는 강력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 작동하였다. 여성운동의 조직화 수준이 한국에 비해 취약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큰 것은 진보정권(민진당)과의 적극적인 협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협약’의 비준은 여성운동에 친화적인 진보정권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보수정권의 재집권 후에도 ‘협약’의 이행이 순조로웠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협약’ 이행을 위한 여성운동의 효과적인 전략들은 무엇이었는가? 3) 여성운동단체 간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발표문에서 ‘협약’의 이행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에 입각한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토론자의 생각에도 대만은 국가페미니즘에 입각한 성 주류화가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 및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여성운동과 진보정권과의 강력한 협력관계 외에, 내실 있는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립 및 페미니즘 관료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먼저, 대만의 성평등전담기구는 한국과 달리 최고행정기관인 ‘행정원’ 본부 내에 2개의 직속조직(性別平等處와 性別平等會)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회는 각급 지방정부까지 조직되어 있다. 성평등회의 위원장은 행정수장인 행정원장(대만의 행정수장은 한국과 달리 총통이 아니고, 행정원장임, 따라서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의 권한이 한국에 비해 훨씬 강력함)이 맡아,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강력한 정책 조정 기능이 작동한다. 한편, 다수의 여성단체대표가 직접 성평등회의 위원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 정부 내에는 국가페미니즘을 실행할 다량의 ‘페미니즘관료(Femocrats)’가 형성되어 왔다. 대만의 행정원 인사행정총처(人事行政總處)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행정공무원 4-5급(서기관-사무관)에 해당하는 대만의 6-9등급 중 여성비율은 51.3%에 이르며, 그 중 부서책임자를 맡은 여성비율은 오히려 더 높은 52.1%에 달한다. 이러한 조건이 국가페미니즘적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적 조정기능을 가진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립과 페미니즘관료의 형성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가?

3. 대만의 여성운동이 주도하여 2004년에 통과시킨 대만 특유의 ‘성평등교육

법(性別平等教育法)’은 중앙과 지방의 각 교육단위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행정원) 전체가 이 법률의 정신을 적극 수용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1/3 이상 차지하도록 하여, 성주류화가 실현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형성이 ‘협약’의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영향은 어떠한가?

4. 대만 여성운동은 동성애자인권운동과 연합하여 2019년 민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진적인 ‘동성혼인 합법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였다. 또 성평등교육법에 성 취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적 법률과 제도를 완성한 경험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 같은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5. ‘협약’ 이행 및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은 강력한 기독교 및 유림 등을 포함하는 보수세력의 반대가 극심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대만종교단체애호가정대연맹(臺灣宗教團體愛護家庭大聯盟)’ 등 보수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만의 기독교세력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평민들의 이민사회인 대만은 유교 세력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협약’의 이행에 유리한 환경으로 판단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 세션 3. >
동아시아 국가의 WPS 활동과 국제협력

토론 3

장혜영
제21대 국회의원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21세기 두 번째 쿼터의 시작, 평화를 원하는 동아시아 3국 여성들의 공통의 도전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장혜영 (제21대 국회의원)

들어가며

2025 한국여성정치센터 국제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정당인 정의당 소속의 여성 정치인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정의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이자 한국여성의정의 이사, 그리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비영리단체 ‘망원정x’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이하 WPS)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시기에 세계는 무력분쟁하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분명히 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WPS에는 21세기를 평화와 번영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세계 각국의 희망과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첫 쿼터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꿈꾸었던 평화와 번영은 간데 없고 세계 곳곳은 분열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제주의의 보편적 규범으로 간주되어온 가치들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그 가치를 앞장서 지켜온 나라들의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시 이러한 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동아시아 각국이 한데 모여 WPS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오늘이 매우 뜻깊습니다. 규범은 성문화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이 지난 25년간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공통의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 그 의미와 과제를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도모해나가야 할 일들의 방향과 전략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공통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상황에 관하여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 다나카 유코 대표님의 "일본의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여성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발표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권고에 비추어 본 일본 여성들의 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2022년 12월 자민당의 기시다 전 총리가 당시까지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폐지, 새로운 “안보3문서”를 발표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의 내용을 사실상 파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저지하기 위해 2023년 1월 11일에 결성된 ‘평화를 추구하며 군비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모임’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의 법률화, 황위계승의 남녀평등 보장을 위한 황실전범 개정,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내인권기구 도입, 다양한 교차적 약자성을 가진 여성들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 도입, 선택 의정서 채택과 부부별성제 도입 등 구체적 제도 개혁이 권고되고 있지만 성매매방지법 도입이나 부부별성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입법이 좌초되거나 황실전범 개정에 대한 권고에 정부 차원의 보복이나 다른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일본 여성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던 2차 대전 당시에 비교해 현재를 여성들이 투표권과 입후보 권리를 가진 “새로운 전전(戰前)으로 분명히 명명하고 군부가 여성들을 조직한 과거를 넘어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혼란의 시기에 조장되고 학습된 절망과 체념을 넘어 분명히 존재하고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희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유효한 언어이며, 평화를 원하는 일본 여성들의 누적된 실질적 노력 위에 만들어진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래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 현실에 적절한 언어와 행동으로 개입하는 바로 그 순간들이 다른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을 군비 충당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분명히 발표한다든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 비어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지 않는 도지사에게 추도문 발송

을 분명한 언어로 요청하는 행위는 평화의 미래로 연결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 문은 하나가 아니며, 일본의 여성과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군비증강 요구와 연결된 조치들을 거부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곳곳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표현의 방식을 안내하는 단체의 마음 씬씀이에서 사람들이 마주한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낍니다. 무력분쟁의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것이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행동하는 일본의 모든 여성들에게 크나큰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만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으로 평엔원 타이완 여성단체전국연합회 상임이사님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추진 과정에서 타이완 여성단체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발표는 국제정치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유엔의 CEDAW를 국내 정책과 법률에 반영한 과정을 생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발전한 여성운동의 에너지가 국가 여성주의 노선으로 승화, 제도권과 여성운동이 협력하여 ‘인권입국’의 기치 하에 CEDAW라는 국제규범의 형성에 발맞추어 타이완 내의 실질적인 여성차별철폐와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왔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CEDAW가 타이완에 자리잡은 과정은 타이완에서 젠더주류화가 발전한 시기”이며, 타이완은 이미 “‘협약체결’이라는 절차 뿐만 아니라 각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토론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서술은 법률로써 동성혼을 보장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위상과 41.5%에 달하는 아시아 최고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라는 현실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젠더평등에 관한 부서의 내부 강사나 실무위원이 되어 더 이상 민간 단체나 전문가들에게 모든 판단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로 반 성소수자 단체와의 공개 토론회에서의 대응에서 이러한 역량이 드러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이러한 타이완의 사례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이 공통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가부장적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물론 지난 25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타이완에도 제사에 여성 자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사공업조례’의 합헌 판단이나 법무부의 형법상 낙태죄 개정 필요성 불인정에서 드러나듯 관련 현안에 대한 부처의 관심 및 관점 부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이슈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공론의 부족, 여성운동의 다원화와 참여형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젠더평등’의 이름으로 성중립화 장실이나 젠더할당에 반대하며 전통적-성별이분법적 성별 역할을 복구하자는 주장이 CEDAW 테이블에 등장하는 역설적인 상황 등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제규범의 발전이 선형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조건들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들을 분명히 직시하며 국가와의 협력에 기반한 여성운동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힘주어 외치는 타이완의 여성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한국은 1984년 CEDAW를 비준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법, 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6월 3일 발표된 CEDAW 제9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한국의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핵심 권고를 다시 한 번 제시했습니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주 배경, 종교 등 모든 형태의 교차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법 제정이 지연된 점을 “심각한 우려”로 명시했습니다.
2.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 - 여성가족부의 존치와 기능·예산·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부처 축소·폐지 논의가 “성평등 촉진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형사사법 체계의 성인지성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재판 절차 개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4.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확대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강제적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고용 확대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정치·공적 생활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 국회·지방의회·고위공직에서 여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할당제 확대와 임시 특별조치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다수가 이전 심의에서도 반복된 권고임을 지적하며, “반복된 권고의 미이행은 국제 인권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PS 국가행동계획(NAP)역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14년 이후 4기에 걸쳐 수립·시행되었습니다. 이는 5개 분야(예방·참여·보호·구호·이행점검)에 걸쳐 11~12개 목표, 수십 개 세부 과제와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부처의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3기(2021-23) 국가행동계획에는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였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행 모니터링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시민 자문단을 운영하여 성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제4기(2024-27) 국가행동계획은 기후 위기,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이슈에 대응하며 한국의 WPS 국제 리더십 확보 및 이행·모니터링 강화를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여성 참여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여성 인력과 군·경찰의 성인지 교육도 확대되었지만, 형식적 진전과 실질적 변화를 잇는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법과 제도의 틀은 마련되었지만, 이행의 속도·범위·지속성 면에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재정 투입보다 기존 사업의 재활용에 의존하는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모니터링 권한과 자료접근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시민사회의 구조적 참여 제한, 질적 영향력 측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성과지표의 한계, 군사적 분쟁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개념의 협소성 등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WPS 이행 평가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젠더주류화 및 여성차별철폐, 여성권익신장의 노력 속에서 한국의 여성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꾸준히 공동체를 위한 공통의 인식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이는 작년 12월 3일에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에 맞서 한국의 여성들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고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 역시 CEDAW의 주요 권고들을 이행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점, 반여성주의와 반소수자운동을 기치로 내건 극우파 정치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한국의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정치, 나아가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가며: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국제규범의 가치는 그 형식적 비준에 있지 않고 각국 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규정하는 제도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와 규범이 전방위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무력분쟁 하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각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만들어진 소중한 인류의 자산인 CEDAW와 WPS, 이에 기반한 NAP가 현재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국 내에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연대에 기반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보수적인 정치지형,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는 안보 중심의 예산이라는 공통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외교, 군사,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역내의 정보공유를 촉진,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이해의 기반을 만들고, 기후안보, 재난대응, 분쟁 중재 등의 분야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치며, 공동의 새도우 리포트를 제출하여 국제 심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션과 이번 행사가 이러한 실질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여성정치인으로서 저부터 이러한 연대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4

아시아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축사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경과 인종을 넘어 여성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약하고 계신 전 세계의 활동가 및 연구가,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먼저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렙니다.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세계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25호(WPS)가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 여성이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된 WPS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의 정책과 제도,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를 온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는 한반도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경제적 빈곤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침묵 속에 묻힌 채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나누며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와 인권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션으로 준비된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고민하면서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은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평화의 틀을 다시 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묻혀있던 동아시아 여성들의 억압된 목소리를 기록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고통을 함께 증언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연대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나아갈 길은 결코 외롭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실천이 곧 동아시아의 평화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권향엽

축사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한베여성포럼 공동대표

행동으로 열어가는 사랑에 근거한 연대의 힘!

안녕하십니까. 안명옥입니다. 먼저,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일하고 계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 축하와 경의를 전합니다.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선포 30주년이 된 뜻깊은 해에 '행동'으로 미래를 열어갈 의미 깊은 '동수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 이니셔티브'의 희망찬 출범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3월 개최되었던 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북경선언 이후 30년간 분명 발전도 있었지만,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 재확인하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위험한 형태로 돌연변이 되어 돌아온 듯한 현상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고 그 해독제는 행동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여러 해결책 중에서도, 평화 구축에 여성 참여 보장과, 의사결정 참여와 리더십에서 모든 수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이 완전하며 동등한 보장이 있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한국과 베트남 국교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과 베트남 여성들의 여성발전 경험의 상호 공유를 위한 한국-베트남여성포럼이 출범되며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온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형제애로 표현되는 사랑의 힘, 도움과 나눔의 힘이 국가간 여성연대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했습니다.

평화와 안보 등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주제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남녀동수 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각국의 경험과 문화 차이로 접근방법이나 논의의 깊이에 있어 공통의 해법을 찾는 일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국내사정과 여건을 차치하더라도 양자간, 그리고 다국간에 다양한 분야 여성 전문가들의 정례적이며 지속적인 교류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거버넌스의 예일 것입니다.

교류를 통해 상대국가와 사회에서 논의되고 또 실천하는 관례들과 개선 노력의 성과에서 우리는 서로 배울 바가 많음을 저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들간 교류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모임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생생한 경험들을 나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가지 강조하여 제안하고 싶은 점은 어떠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든 각국 여성 언론인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여성 언론인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참여는 다양한 시각을 보태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논의된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 세션이 될 라운드 테이블에선 어제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내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0일

한국·베트남여성포럼 공동대표, 17대 국회의원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역사·여성·미래 이사장

안명옥

축사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시아 여성들의 용기

아시아 각국에서 오신 여성 리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Asian Women for Parity and Peace(AWIPP)'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와 성장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단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성평등을 토대로 세계 평화를 재정의하려는 아시아 여성들의 용기 있는 선언이자 실천의 시작입니다.

AWIPP가 지향하는 '남녀동수'와 '여성주의적 평화(feminist peace)'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의한 구조적 정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적 권한과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어떤 평화도, 그 어떤 민주주의도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특히 AWIPP는 선언을 넘어 국제 젠더 규범에 기초한 이행 중심의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UN 안보리 결의 제1325호는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각국 정부가 성평등을 국가의 책무로 이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아시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실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신문은 AWIPP의 활동과 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이 운동의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신문은 지금까지 국내외 여성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아시아와 글로벌 여성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언론을 기반으로 한 여성연대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과 행동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연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우리는 지금, 성평등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며,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연대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AWIPP는 아시아 여성의 목소리를 세계로 연결할 것이며, 여성신문은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자리를 기획하고 주최해주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관계자와 김은주 소장님의 헌신적인 준비와 리더십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는 그 노력의 결실이며, 오늘의 이 창립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강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 세션 4. >
아시아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발표

**‘Asia Women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구축을 위한 제안**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Asian Women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AWIPP)’

구축 제안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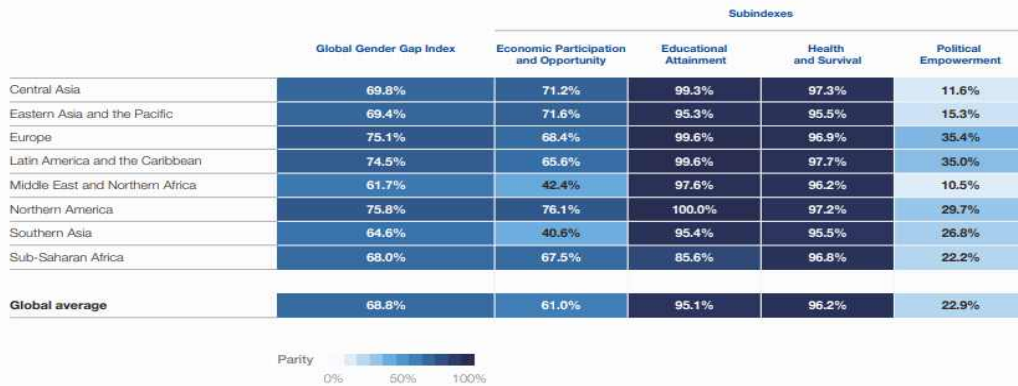
- AWIPP는 “성평등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며, 남녀 동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 여성들이 국경과 경계를 넘어 성평등과 평화를 아우르는 대안 질서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정치적 행동 플랫폼.
- AWIPP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넘어, 정책 변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연대체로서, 남녀동등 대표성을 통한 민주주의 재구성과 여성주의적 평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2.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지금 국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된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이 전환기는 단순한 권력 구조의 재편을 넘어, 그동안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규범과 가치의 균열과 약화를 동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화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직면.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젠더 정의와 성평등 및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집합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

- **민주주의의 후퇴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취약** :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 여전히 구조적으로 배제. 아래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함. 여기에 아시아 각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가속화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과 실질적 대표성이 더욱 취약해짐.

FIGURE 1.8 Regional performance 2025, by sub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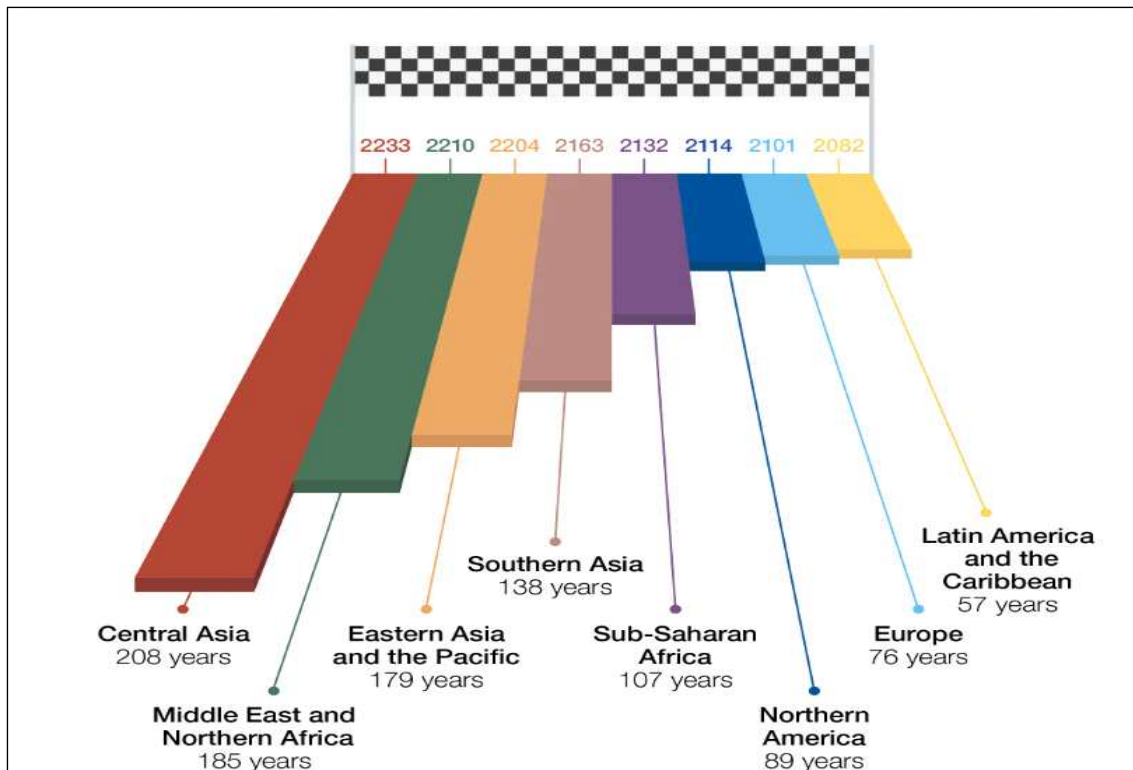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Index, 2025.

Note

Population-weighted averages, 148 economies. The percentages indicate the gender gap that has been closed to date.



특히 “선거 있는 비민주주의 체제(Electoral Authoritarianism)”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권한과 영향력은 심각하게 제한됨. 또한 여성 정치인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동원되고, 성평등 정책은 주변화됨. 이에 따라 여성 정치인은 독립된 정치 주체로 기능하기 보다 남성 중심 권력 구조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됨.

세계경제포럼은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의 남녀동수(Gender Parity)를 목표로 설정하고 Gender Parity Accelerators 네트워크와 Global Gender Parity

Sprint를 운영. Gender Parity Accelerators 네트워크는 노동력 참여, 임금, 리더십 부문의 성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의 일자리에 동등참여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Global Gender Parity Sprint는 2030년까지 경제적 영역에서의 동수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정부, 국제 기구 및 기타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으는 글로벌 플랫폼.

정치 영역에서 남녀 동수는 단순히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는 헌정 원리를 의미함. 동수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거나 허약한 민주주의에 불과함. 동수는 단순히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근본원리. 특히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동수는 대표성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구조개혁을 의미.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시아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형성하는 연대와 집합적인 행동이 필요.

- **군사·안보 중심의 질서 강화와 여성주의 평화담론의 주변화** : 아시아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격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공간에서 군사적 대결지대로 전환되고 있음. 여기에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강화함에 따라 군사·안보 중심의 정책과 논리가 강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는 주변화되고, 여성주의적 평화 담론과 논리는 ‘비현실적’이라는 낙인 아래 정책적 논의와 공적 담론장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성평등·정의·돌봄·지속가능성을 포함한 포괄적 가치에 기초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주의적 평화 패러다임의 제시와 집합적 실천 플랫폼 구축이 절실. 남녀 동수는 평화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평화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원리임. “동수가 없는 평화는 인구의 절반을 외면한 불완전한 평화이며, 평화 없는 동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음”.

- **국제 젠더 규범의 이행력 약화** : UN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국제 젠더 규범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되었고, 제도적으로 확산. 그러나 최근 다자주의의 약화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이들 규범의 실질적 이행력은 약화되고 있음. 그 결과, 젠더 평등은 외교적 수사와 선언적 약속으로 활용될 뿐,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젠더 규범의 약화는 특히 남성 중심적 질서와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린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정치·사회적 위기로 작용.

이제는 개별 국가 중심의 젠더 거버넌스 한계를 넘어, 여성이 주도하고 다자적 실천을 조직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주체의 형성이 요구됨. 특히 아시아가 직면한 현실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아시아 내부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여성운동이 축적한 자산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연대구조가 필요.

이상과 같이 아시아 여성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젠더 불평등이 결합된 복합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 이러한 다층적·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파편적 대응을 넘어, 아시아 여성들이 국경과 경계를 초월하여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전략적 행동을 조직하는 정치적 주체가 필요. 바로 [동수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 이니셔티브(Asian Women Initiative for Parity and Peace, AWIPP)]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 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단순한 연대와 교류(Network)를 넘어, 공통된 목표와 행동 전략을 가진 실천적 연대체로서 동수와 평화를 목표로 의제를 주도하고 실천 행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음.

3. 비전과 미션

- 비전(Vision): 젠더 정의와 남녀동수를 기반으로, 평화롭고 포용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아시아

성평등과 평화를 상호 불가분의 원리로 인식하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평화가 완전하고 지속가능해진다는 신념 아래, 아시아 각국의 모든 여성이 동등한 결정권자이자 평화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동수와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성평등 없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으며, 남녀동수 없는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동수가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인구의 절반을 배제한 불완전한 평화이며, 평화가 결여된 동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음. 따라서 동수와 평화는 상호의존적인 원리로 두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에만 민주주의는 비로서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미션(Mission): 아시아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 확대와 여성주의적 평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동 플랫폼

① 동수(Parity)의 제도화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

- ② 여성주의 평화(Feminist Peace) 패러다임 확산 - 군사·안보 중심 질서를 넘어 성평등·정의·포괄성·돌봄을 포함하는 평화관 확산
- ③ 정책 개입력 강화 - 아시아 여성들의 공동 행동을 통해 국내외 의사결정 구조에 전략적으로 개입
- ④ 리더십 역량 강화 - 청년 여성과 다양한 배경의 여성 리더를 발굴·육성해 차세대 정치·평화 리더십 구축
- ⑤ 국제연대 확장 -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UN, ASEAN, G20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발신

4. 핵심 가치

-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교차적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젠더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 이는 성차별 해소를 넘어, 권력의 형성과 분배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남녀동수 (Parity): 남녀동수는 단순한 여성 진출 확대라는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는 헌정 원리로서 동등한 권력의 공유를 목표로 하며, 정치적 대표성에서의 동수와 의제설정에서의 동수를 지향. 전자는 정치·평화 등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50% 참여보장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책과 평화담론 형성에서 여성의 관점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을 뜻함.
- 여성주의적 평화 (Feminist Peace):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넘어 성평등, 정의, 포괄성, 돌봄, 지속가능성을 포함. 여성주의 평화는 군사·안보 중심 질서를 넘어, 일상과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대 (Solidarity): 국경과 경계를 넘어 상호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 연대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전략적 행동과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힘.
- 다양성과 포용성 (Diversity & Inclusion):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며, 진정한 포용성을 실천.

5. 참여 주체 및 활동 방향

• 참여 주체

- ① 여성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아시아 각국의 여성운동 경험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의제와 전략 수립에 기여, 성평등·동수·평화 관련 정책 분석, 법·제도 개선안 제시, 현장 기반의 젠더 영향 분석 수행 및 정책 반영 촉구, 지역·국가 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공동 캠페인 기획·실행, 교육·워크숍을 통한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 지원 등 추진
- ② 여성 정치인 및 청년 여성 리더: 각국 의회, 지방정부, 평화협상 테이블 등 정치·정책 결정 구조에서 동수 원리 실현 추진. 입법·정책 과정에서 AWIPP 의제 반영 및 법률 개정 발의. 정치 현장에서 여성주의 평화관 확산과 젠더 관점의 정책 입안. 청년 세대와 연결되는 정치 리더십 멘토링 제공
- ③ 국제연대단체: UN, ASEAN, G20 등 국제기구 및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정책 연계 및 공동 옹호 활동. 국제 사회에 아시아 여성의 동수·평화 의제 발신 및 담론 형성. 글로벌 모범사례·정책모델 공유를 통한 전략적 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 아시아 여성단체·정치인·전문가와의 국제 파트너십 구축. 국제 펀딩 및 자원 연계로 AWIPP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강화

• 활동 영역

사업영역	주요 내용
① 정책 옹호 (Advocacy)	- 남녀동수 법제화: 동수를 민주주의의 헌정 원리로 규정하고, 각국 헌법·선거법·관련 법률 개정 촉구 - 평화협상 젠더 참여 확대: 평화협상·안보 관련 의사결정 기구 젠더 균형 원칙 제도화 - 정책 프레임 전환: 성평등을 복지·인권 이슈를 넘어 민주주의 재구성과 평화 구축의 핵심 의제로 재위치화
②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 청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평화·동수 민주주의 교육 -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 입법·정책 개발·의제 설정·미디어 대응 훈련 -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화: 정책 분석, 옹호 전략, 국제연대 기술 교육 - 세대·분야 간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현장 연계 프로그램: 국제회의 참관, 의회·지방정부 인턴십,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③ 연구·조사 (Research)	- 아시아 여성 대표성·젠더 불평등 현황 보고서 발간 - 여성주의 평화 백서: 젠더 관점의 평화 구축사례와 과제제시 - 아시아 공동 의제포럼 개최: 공동 의제 발굴·정책 제언·국제연대 전략 논의

	• 정책·법제 모니터링: 국가별 성평등·동수·평화 법·제도 분석 • 지식 공유·확산: 다국어 번역·발간, 국제사회 확산
④ 국제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	• 국제 무대 개입: UN, ASEAN 등에서 아시아 여성 의제 반영 • 공동 정책 제안·성명 발표: 국제사회와 공동 입장 표명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제 여성·인권·평화 단체와 장기협력 • 국제 캠페인 전개: 성평등/동수+평화 글로벌 캠페인 • 국제 자원·기술 연계: 재정·연구·교육 자원 확보
⑤ 캠페인·홍보 (Campaign & Outreach)	• #ParityForPeace 글로벌 캠페인 전개 • 미디어·SNS 의제 확산: 다국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배포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연구자료·교육·정책·캠페인 통합 공유 • 언론 협력: 기고·인터뷰·보도 자료 발행 • 참여형 시민 캠페인: 지역 커뮤니티, 대학, 청년단체 연계

6. 조직구조 및 단계별 실행계획

• 조직 구조

항 목	내 용
조직 형태	이니셔티브(목표 중심 전략 연대체)
의사결정 구조	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	연례총회, 분기별 운영위원회, 지역별 및 의제별 워킹그룹

• 단계별 실행계획

단계	기간	주요 활동
1단계	1년차	- 창립 총회 개최 - 핵심 파트너십 체결 - 시범사업 실행
2단계	2~3년차	- 지역 허브 구축 - 국제무대 정책 개입 - 공동 캠페인 전개
3단계	4~5년차	- 제도화 로드맵 실행 - 성과 확산 - 국제연대 강화

7. 자원 조달 계획

- 초기 설립 자원: 국제기구·재단 지원금, 회원 회비, 프로젝트 펀딩
- 지속 자원: 장기 펀딩 계약, 공동 캠페인 모금, CSR 파트너십

<AWIPP 개요·배경·목표·구조·활동 영역 요약표>

구 분	내 용
1. 개요	AWIPP는 “성평등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며, 남녀동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는 원칙에 기반한 아시아 여성의 정치적 행동 플랫폼. 느슨한 네트워크를 넘어, 남녀동수와 여성주의적 평화패러다임을 통한 민주주의 재구성·대안 질서 설계·실천을 목표로 함.
2.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민주주의의 후퇴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취약 • 군사·안보 중심 질서 강화로 여성주의 평화 담론 주변화 • 국제 젠더 규범(UN1325·CEDAW) 이행력 약화 → 국가 단위 한계를 넘어 아시아 여성의 전략적·집합적 대응 필요
3. 비전	젠더 정의와 남녀동수를 기반으로, 평화롭고 포용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아시아: 모든 여성이 동등한 결정권자이자 평화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실현
4. 미션	① 동수 제도화 ② 여성주의 평화 패러다임 확산 ③ 정책 개입력 강화 ④ 리더십 역량 강화 ⑤ 국제연대 확장
5. 핵심 가치	젠더 정의 / 남녀동수 / 여성주의 평화 / 연대 / 다양성과 포용성
6. 참여 주체	• 여성단체 활동가·전문가: 현장 경험 공유, 정책 분석·개선안 제시, 캠페인·교육 • 여성 정치인·청년 여성 리더: 의회·정부·평화협상 참여 확대, 입법·정책 반영, 멘토링 • 국제연대단체: UN·ASEAN·G20 등에서 의제 발신, 국제 파트너십·자원 연계
7. 활동 영역	① 정책 옹호: 남녀동수 법제화, 평화협상 젠더 참여 확대, 정책 프레임 전환 ② 역량 강화: 청년 여성 아카데미, 정치인·활동가 훈련, 멘토링, 현장 연계 ③ 연구·조사: 대표성·불평등 보고서, 평화 백서, 의제포럼, 법제 모니터링 ④ 국제연대: UN·ASEAN 개입, 공동 성명, 글로벌 파트너십, 캠페인 ⑤ 캠페인·홍보: #ParityForPeace, 미디어·SNS 확산, 온라인 플랫폼, 시민 참여 캠페인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

: 국제협력과 시민사회의 역할